

제주4·3 제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학살 · 기억 · 평화 : 4 · 3의 기억을 넘어

기간 : 2003년 4월 2일(수)-4월 3일(목)

장소 : 제주오리엔탈호텔

주최 : (사)제주4·3연구소 · 제주발전연구원

후원 : 제주도 · 제주시

(사)제주4·3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4·3 제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학살·기억·평화 : 4·3의 기억을 넘어”

전체일정  
4월2일(학술대회)

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

강창일(제주4·3연구소 소장/배재대 교수)

10:10~10:20 환영사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제주대 교수)

10:20~10:40 축사

10:40~11:00 기조강연

잃어버린 공동체를 꿈꾸며

현기영(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11:00~11:10 휴식

제1부 20세기의 제노사이드-무엇을 배울 것인가(11:10~13:00)

사회 유철인(제주대 교수)

발표 1. 20세기의 집단학살과 교훈

크리스티안 슈미트 호이어(독일 DIE ZEIT 대기자)

2. 냉전의 뿌리 - 히로시마에서 제주까지

마리아 휘버(독일 라이프치히대학 교수)

3. 제주4·3의 부흥과 화해 : 과거에서 미래로

박명림(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 정병준(목포대학교 교수)

방청록(탐라대 교수)

오찬(13:00~14:00)

제2부 기억의 재생과 복원(14:00~15:20)

사회 김영범(대구대학교 교수)

발표 1. 집단적 기억의 재생과 복원

정근식(전남대학교 교수)

2. 제주4·3의 기억들과 변화

권귀숙(제주4·3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 조성윤(제주대학교 교수)

정호기(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휴식(15:20~15:30)

제3부 평화의 섬, 모색과 대안-과거에서 미래로(15:30~17:00)

사회 이규배(탐라대학교 교수)

발표 1. 21세기 히로시마의 역할-과과에서 부흥과 화해로

가즈미 미즈모토(히로시마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교수)

2.제주 평화의 섬에 대한 정책적 논의-구상과 방향

고충석(제주발전연구원장)

토론 장원석(제주대학교 교수)

김진호(제주대학교 교수)

휴식(17:00~17:30)

만찬(17:30~)

4월3일

4·3의 기억을 넘어-위령제 참관 및 제주4·3기행(10:00~17:00)

강사 오승국(제주4·3연구소 사무처장)

기행지역 : 위령제참관 후 북촌, 선흘, 조천 지역

개회사  
제주4·3연구소 소장  
강창일

## 이제는 평화의 섬으로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제주 4·3은 1948년 분단체제화의 와중에서 빚어진 한민족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이자 냉전체제가 빚어낸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제주 4·3의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운동은 숨겨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운동이며, 인권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고 더 나아가 통일과 평화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3 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로 12만평에 이르는 ‘제주4·3평화공원’을 국가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희생자의 위령과 그 유족의 위무, 역사적 교훈의 발건과 전승,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발견하는 장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차 심사에서 3,400여명에 대한 희생자 확인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희생자로 확정받지 못한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기대합니다. 4·3의 간접 희생자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민 모두가 4·3의 희생자요, 피해자라는 사실을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심의도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정부의 성숙된 결정을 기대합니다. 지난날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잘못에 대해 대통령이 4·3위령제에 직접 참가하여 사과하는 일이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이념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3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제주4·3연구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주4·3연구소』는 제주4·3의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4·3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각종 학술행사와 모임, 증언채록, 현장조사 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주4·3연구소』와 공동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997년 5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주발전연구원은 4·3과 관련하여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평화포럼 개최, 남북평화센터 설치문제,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연구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 또한 모두 4·3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4·3의 아픔을 평화의 섬으로 승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그동안 국내연구에만 치중하여 왔던 제주 4·3에 관한 논의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난의 섬, 아픔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4·3사건 55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국제학술세미나에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현기영 원장님, 멀리 독일에서 오신 크리스티안 슈미트 호이어 기자님,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마리아 휘버 교수님, 일본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가즈미 미즈모토교수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국제학술세미나가 4·3의 아픔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2일

차례

개회사 : 강창일(제주4·3연구소장/배재대 교수)

환영사 : 고충석(제주발전연구원장/제주대 교수)

기조강연

잃어버린 공동체를 꿈꾸며

현기영(소설가/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주제1 20세기의 제노사이드 -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세기의 집단학살과 교훈

크리스티안 슈미트 호이어(독일 DIE ZEIT 대기자)

냉전의 뿌리 - 히로시마에서 제주까지

마리아 휘버(독일 라이프치히대학 교수)

주제2 기억의 재생과 복원

집단적 기억의 재생과 복원

정근식(전남대학교 교수)

제주4·3의 기억들과 변화

권귀숙(제주4·3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제3 평화의 섬, 모색과 대안-과거에서 미래로

21세기 히로시마의 역할 - 과거에서 부흥과 화해로

가즈미 미즈모토(히로시마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교수)

제주 평화의 섬에 대한 정책적 논의 - 구상과 방향-

고충석(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기조강연

잃어버린 공동체를 꿈꾸며

현기영(소설가/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 잃어버린 공동체를 꿈꾸며

현 기 영(소설가/문예진흥원장)

분단의 비극에서 비롯된 한국전쟁으로 해서 우리 민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3천만의 인구 중에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3백만 명이 한국전쟁과 그 전후의 와중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문학적으로 관심해 온 제주 4·3, 그리고 6·25 발발 직후의 보도연맹사건은 민간인(양민)에 대한 대량학살 사건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무서운 금기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왔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전쟁 체험 세대와 미체험 세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을 TV 화면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세대 간에 매우 이질적인 의식의 단층을 노정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족의 대서사극이라고 할만한 그 감격의 장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눈물 쏟느라 눈이 빨개져 있는데 반해, 아이들은 그걸 따분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저녁 황금 시간대에 그런 프로를 내보느냐고, 화까지 내더랍니다. 인터넷 상에도 항의하는 글이 많이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젊은 가수들의 발랄한 무대를 취소시키고, 왜 눈물 쏟는 이상야릇한 장면들만 며칠 계속 내보내느냐는 불만이었죠.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민족 공동체의 과거(역사)에 대한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러한 단절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을진대,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어야 옳습니다. 공동체의 과거, 그 역사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 바탕인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그것을 학교 교실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해진 소비향락 문화입니다. 머리 속이 소비향락 문화의 온갖 저질 잡동사니 정보로 가득하다 보니, 온당한 역사의식이 자리잡을 여지가 절대 부족한 것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라면 바로 어제의 것마저 불신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과거란 통째로 남루하고 후진 가치에 불과하지요. 자신의 부모마저 과거일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모의 과거로부터, 공동체의 과거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역사의 과오로부터 교훈을 얻어내지 못하는 민족은 오직 그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남북으로만 분단·이산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지붕 아래 한 가족 안에서조차 분단·이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역사의식도 천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곧잘 분노를 터뜨리지만, 과연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 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까. 파시스트 이승만, 박정희를 영웅으로 격상시키는, 보수 언론을 앞세운 기득권 세력의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역사의 매 단계마다 반성·청산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니, 어떻게 우리의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된 기록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만신창이이죠.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그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부정당해 온 역사가 바로 제주 4·3입니다. 그 사태로 인해 제주 공동체는 무참히 파괴되어 불구인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3이 철저히 부정되어 버림으로써, 그와 함께 부정되어 버린 그 섬 공동체는 어떠한 모

습이었던가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공동체를 기억에 떠올리고 그로부터 삶의 지혜를 찾아 내야 하겠습니까. 과거 제주도민들은 본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주 특유의 전통으로 멀리 탐라 시절부터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내국 식민지로서 언제나 중앙으로부터 착취당하고, 버림을 받아온 고장인지라, 생존 방식으로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운명체로서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집단 의식이 투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단위로 독립적으로 상부상조의 자치생활을 영위했는데, 그러다가 일단 외세에 의한 침탈이 발생하면 일제히 쫓겨하여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곤 했습니다. 제주섬 입장에서 보면, 거친 물결로 들이닥치곤 했던 왜구·몽고·일제와 같은 이민족의 침입뿐만 아니라, 왕실을 비롯한 중앙의 정치 세력도 역시 배타적으로 맞서야 할 외세였다. 그래서 외세에 맞선 항쟁과 민란이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그중 최근의 것으로 1백여 년 전의 이재수란, 70여 년 전의 해녀항일투쟁, 그리고 50여 년 전의 4·3항쟁이었습니다. 따라서, 4·3은 그러한 항쟁 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진정한 이념은 이러한 자주·자치주의인 것입니다.

일제 때 제주도에 반일운동이 여럿 일어났는데, 그 중에 아나키스트 운동인 '우리계' 사건이 특기할만 합니다. 무정부주의는 중앙정부를 부정하고 공동체 정신에 투철했던 제주민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나키스트 운동은 서구에서 바쿠닌, 크로포트킨 등에 의해서 창도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 먼 옛날 노자(老子)의 공동체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民), 즉 작은 땅, 적은 인구의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는데, 전란이 그치지 않았던 춘추전국시대에 노자의 조그만 공동체는 더 없이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반전론을 편 노자는 위정자는 간섭하지 말고 백성의 자치에 맡겨라, 정치를 하되 무사무위(無事無爲)로서 하라고 가르쳤고 실천했다 합니다. 당시 제주도가 소국과민의 그러한 공동체의 일면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국과민'을 오늘의 뜻으로 새긴다면, 지역분권·지역자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제주가 보여 준 공동체를 오늘의 지역들에서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자치주의만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지역들을 보면, 중앙의 강권정치가 많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물심양면으로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중앙의 정치, 중앙의 거대 자본, 중앙의 소비향락문화가 군림하는 내국식민지의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들은 자본에 휘둘림을 당하여, 인간과 자연 둘 다 망가졌습니다. 국내 농촌 어디를 가나, 그곳 고유의 문화 특색은 없고, '가든'이고 '파크'이고 '러브 호텔'인데,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야만입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치단체장일수록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여 팔아먹을까 궁리합니다. 한라산 정상에 케이블카 철탑 구상도 똑같은 발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옛 공동체를 꿈꾸며 탈중심의 변방정신을 도모할 때입니다.

불복산(不伏山)이란 말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산, 복종하지 않은 산, 말입니다. 이성계가 등극할 때 오대악 중에 오직 지리산만이 엎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조 개국 때의 불복산이 지리산이라면, 남한 정권이 탄생할 때의 불복산은 한라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한 백성들 대부분의 생각은 나라가 세워지려면 마땅히 통일된 나라여야지, 분단의 반쪽 나라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단이 아닌 온전한 민족공동체, 바로 이것이 4·3항쟁의 이념이었습니다.

주제1

20세기의 제노사이드 -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세기의 집단학살과 교훈

크리스티안 슈미트 호이어(독일 DIE ZEIT 대기자)

냉전의 뿌리 - 히로시마에서 제주까지

마리아 휘버(독일 라이프치히대학 교수)

## Genocide in 20th Century

Christian Schmidt Hauer (Journalist / DIE ZEIT)

As I feel deeply touched by the past and the present of your wonderful island of peace, it is a great honour for me to be invited here as a guest speaker. It is also a great pleasure for me to see many friends again.

This year the term 'genocide' will become sixty years old. It was born as a helpless cry against the holocaust, the extermination of the Jews by the German nation under Hitler. I am a son of this nation. Germany was punished for its cruel crimes. First through carpet bombing by the Anglo-American Allies and then by the division of the country for over forty years. In the aftermath of the German and Japanese wars and the genocide, Korea was divided too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not guilty in any way. So allow me to assure you first of my deep solidarity and also of my sincere hope for the reunification of your country.

Germans of my generation who were born in Hamburg are truly lucky to have survived the second world war. Almost 40.000 civilians died during the strategic bombings of the Allies. In Hamburg more residents lost their lives than in any other European city including Dresden. Those who have lived through nights of bombing cannot ever forget them. That is the reason why I, as a journalist and correspondent, take every chance to report about genocide, war crimes and the innocent victims on all sides: in Afghanistan, Chechnya, Bosnia, Kosovo and also on Jeju-do.

Today, some argue that carpet bombing and the dropping of the first, completely untested Uranium-235-bombs on Hiroshima and Nagasaki should be classified as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a German I do not want to comment on this. But for me there is no doubt that the punishment of the German and Japanese campaigns of extermination were in principle a step forward for all of civilization. Because Germany and Japan were called to account for their actions in judicial proceedings (rather than punished with military means), international law was advanced. And by putting criminals from Germany and Japan on trial, the Allies themselves bound themselves under these new legal principles of individual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The impressive body of human rights law that we are able to draw on today to defend the innocent is largely the result of this one historic moment.

It is not accidental that the father of the term 'genocide' was a Polish Jew. The farmer's son Raphael Lemkin, an outstanding (and undeservedly forgotten) lawyer and scholar, first used the term *ludobojstwo* in 1943. It is derived from the Polish words *lud*

for people and *zabojstwo* for murder. He coined the term in London while drafting a law for the Polish government-in-exile. It was a law for the punishment of the German crimes. In 1944 Lemkin changed the term to *genocide*, which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s *genos* for people, and the Latin word *caedere*, to kill.

The legal groundwork for Lemkin's concept was laid during the 1945 Nuremberg trial. Although the Nuremberg Charter did not use the term *genocide*, the no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s used there clearly overlapped with Lemkin's concept of genocide. And in fact the term genocide was used in the indictments for the Nazi leaders Hermann Gring and Rudolf Hess. In 1947,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ked Lemkin and two other experts on international law to draft a convention against genocide. On December 9th, 1948,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t was the same year in which the governmental mass murder took place on Jeju-do.

Raphael Lemkin, whose family was murdered in the Holocaust, died in 1959 in New York. He died in poverty but on his modest tombstone you can still read the inscription "Father of the Genocide Convention".

The preamble of the Convention on Genocide states "that at all periods of history genocide has inflicted great losses on humanity". More importantly, in Article II you find two word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definition of this crime: the words "with intent". This means that a genocide is only actionable when it is committed by a person who is aware of his actions and acting on purpose. To be tried for genocide, a dictator or general must therefore have done more than merely to approve the extermination or 'destruction', as the 1948 Convention puts it of a population group.

This is a general problem with genocide in "all periods of history", because almost none of the historic cases were documented thoroughly. For example: Can we call the Christian crusades between 1096 and 1291 against the Baltic peoples, the Arabs and the Jews genocides? Then we would have to be able to prove that the Knights of the Cross fought these battles with the intention to completely destroy these peoples. And were the Mongolian wars of conquest during the 13th and the 15th century genocides? When the Europeans arrived in America and drove the Native Americans from their fertile lands, they forced them to do work they were not used to and infected them with unknown illnesses with the result that 13 million died between the 16th and the 19th century. But can we say that the Europeans *intended* to exterminate the Native Americans? And should we label the slave-trade from Africa, with more than 17 million victims in four centuries, as genocide? Finally, what would be the right term for the killing of more than twenty, perhaps thirty million Chinese during the Taiping Uprising between 1851 and 1864?

Things become a little easier in the 20th century. The systematic extermination of one million Armenians by the so called Young Turks in 1915 is the first documented genocide in history. Of course, there had been carnages in the years before that; in 1913, the Englishman Duckett Ferriman introduced the term 'holocaust' to describe these mass-killings. The pan-Turkic movement, whose hatred towards the Armenians was racially motivated, has left us with one of the few surviving written orders for genocide. Unfortunately, the usual course followed by dictators and mass murderers was, and is, to issue such orders orally. For example: Slobodan Milosevic, the former President of Yugoslavia is the first European leader to go on trial for genocide at the tribunal for Yugoslavia in The Hague. The atrocities committed in his name in the Balkan wars were widely reported. Yet the fact that no written order bearing his signature has been found is making the Tribunal's efforts to prove his guilt extremely difficult.

By comparison, consider this telegram sent by the Turkish minister of the interior, Talat Pascha, in 1915, which reads as follows: "The government has decided through the order of the assembly (Jemiet), to completely exterminate all Armenians that live in Turkey. Those who oppose this order cannot continue their work for the government."

The Turkish government, however, denies the genocide unto this day. When, about two years ago France decided to classify the crime against the Armenians as a genocide, like many other states do, the government in Ankara reacted in the following way: It prohibited hoisting the French flag in Turkey. It got rid of all state-owned cars of the brand "Citroen". It prohibited all taxi drivers in Turkey from transporting French tourists. It decreed that all VIP lounges in Turkish airports be henceforth closed to French travelers. This is a good example for the cavalier treatment given the Genocide Convention by states and governments after 1948. Not only is it not or not adequately enforced the rulers of this world, for the most part, still do not understand that the Convention embodies the conscience of humanity.

Germany never admitted officially that it was an accomplice of Turkey during the genocide against the Armenians. In 1915 five Turkish armies were under German supreme command. The German officer Max Erwin von Scheubner-Ritter was killing for the Turkish side. Later he became one of the closest advisers of Hitler. Both marched side by side in 1923 during the putsch in Munich. Scheubner was lethally wounded by a bullet and brought Hitler to fall on the ground with him. What would have happened to world history, one might ask, if this bullet had hit Hitler? But the "Führer" later emboldened by the world's acquiescence in the genocide of the Armenians reassured doubts about his plans to exterminate the Jews in his own ranks by asking: "After all, who talks about the Armenians today?"

What the Turks did was ethnic cleansing: genocide on a limited territory. There were not supposed to be any Armenians in the region afterwards. Hitler, on the other hand, wanted to exterminate the totality of the world's Jews and, in addition, "to absorb 100 million Slavs" as he put it on August 6th, 1942. No such brutal crime had ever been planne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t was ultimately executed in 20 countries; six million Jews died as a result. Many millions of Poles, Russians, and other Slavs also fell victims to the German genocide.

With the Jews, Hitler wanted to exterminate the people of the Ten Commandments. The commandment "Thou shalt not kill" and the Biblical injunction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in particular, had given the world a universal ethic f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of strangers. Hitler, that selective student of history, wanted this ethic to be superseded by the supposedly more ancient, pagan notion of a people's right to 'Lebensraum', meaning territories for settlement the implication being that a people in need of land was entitled to commit mass murder, deportations and other crimes in order to get it. Hitler's plan was to achieve a "Germanization" of Europe's East from Poland to the outer reaches of the Urals. Scruples, he told the Germans, were a "Jewish invention" which would only unnecessarily handicap them in the wars to come.

The Nazi's extermination plan against the Jews was not only perpetrated in the huge death-factories of Auschwitz or Buchenwald. A murderous and merciless war was waged on Jews wherever they were found. In 1975, I found an example for this when I was in Belgrade as a young correspondent. As I was working on a documentation about the Yugoslavian capital, I came upon the following story: In 1941, the Nazis had built a concentration camp for 7000 Jewish women and children on the outskirts of Belgrad. In March of 1942, they ordered a truck from Berlin that was altered in a special way. Each day, the Nazis collected women and children from the camp and transported them across the city. During this drive the exhaust fumes were led through a hose into the back of the truck. After the truck had crossed town and reached the mountain of Avala, the by now suffocated passengers were thrown into mass graves.

For obvious reasons, the acts of genocide which are to be prevented or punished under the 1948 convention, are more or less modelled on the crimes committed by the Nazis against the Jews. The convention defines genocide in Art. II a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the members of the group ..." etc.

But the category *political* groups was left out during the final drafting stage in 1948. Too many governments could have been accused of the charge of genocide, if *intended* destruction of *political* groups had been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genocide. As a

result, the comparatively narrow definitions of the genocide convention together with the beginning Cold War permitted political leaders all over the world to evade possible charges. I think you on Jeju-do can imagine who, among others, might have been brought to court.

Let me give you some other examples. Did the Iraqis, who in 1988 murdered 50.000 Kurds intend to kill Kurds "as such" or was their aim to eliminate the Kurdish movement as a *political problem*? If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political* groups had been included in the convention, Stalin, Chiang Kaishek and Mao Zedong might have been first class candidates for a trial for genocide not to mention Pol Pot or Menghistu of Ethiopia. As it happens, more people died under dictatorial regimes in Russia and China than during the German genocide.

I am, of course, perfectly aware that both Russia and China were trying to cope with the enormous task of modernization. The fact remains that in 1929 Stalin announced: "We have started to liquidate the kulaks (the rich farmers) *as a class*". The famous British historian Robert Conquest is convinced that Stalin inflicted the terror-famine on the collectivized Ukrainian peasant with the purpose of crushing the Ukrainian nation as a whole. Other scholars are less convinced. However: owners, proprietors and capitalists were a *class* in communist theory and a *political group* in communist practice. For the promised redemption of billions of workers, the communist leaders accepted the death of millions of kulaks and capitalists. These terrible crimes and many others, such as the American war crimes in Vietnam, could not be defined as genocide because of the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from the 1948 convention and those two restrictive words "with intent".

For decades, the Genocide Convention was a sleeping beauty. Then the Cold War was over and the Balkan Wars began. It was a conflict the world might have expected to happen had it cared to pay attention. In the early Seventies, I visited the former concentration camp of Jasenovac in Yugoslavia. There, Croatian Catholic fascists close allies of Hitler had killed more than 100.000 Serbs, Jews and gypsies. The murderers, some of them Catholic priests, drowned and burned these people, beat them to death with pickaxes or cut them open alive. It was a massacre motivated by religious and cultural hatred. If Auschwitz was a factory of extermination, Jasenovac was a slaughter-house. After 1945, the Serbs took revenge by shooting 10.000 of Croatian prisoners of war.

Ever since I learned about Jasenovac, I knew that these wounds had to break open after the death of Tito, the man who united post-war Yugoslavia and was its president for decades. He died in 1980. But when in 1990/91 the Balkans exploded in a fireball of hatred, Europe and America were completely unprepared and soon completely divided.



The event that was to become the worst stain on their conscience occurred in Srebrenica. This idyllic mining town in Bosnia had been locked in by Serbian troops since 1992. The United Nations reacted by declaring the town as an international, UN-administered safe zone the world's first. Nevertheless, Serbian soldiers and paramilitaries conquered Srebrenica in July 1995 as the world looked on horrified but helpless. The Serb Generals Mladic and Krstic had nearly 8000 Muslim men and boys deported, shot and buried in mass-graves under the eyes of the powerless UN peacekeepers. To this day, most of the widows and mothers do not know where and how their men and sons died.

Only a couple of weeks ago, I went back to Srebrenica. As I wandered through the town,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on your island of Jeju-do came to my memory again and again. So many elements of the story are familiar: The women and children of the victims, who for decades could not or dared not even speak about their anguish. None of the women from traditional Muslim families in Srebrenica dare to begin a second life without the bodies of their missed husbands. Without burial, without lamentation rituals, they cannot mourn or put memory to rest. At the mere thought of accepting the death of their missed men as fact, they feel guilt. Most widows still don't accept that their missed ones are dead. They are still waiting and tell themselves: "You must not feel joy, you must not feel happiness." More often than not, they have transferred these feelings to their children, too.

The failure of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Nato to prevent the Balkan killings in the early Nineties brought the Genocide Convention back into public consciousness. Although the convention envisage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to punish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forty-five years passed before the first court finally was established. In 1993, the UN Security Council set up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No government was willing to admit it, but its creation was an act of acknowledgement and atonement for the failures of the West to prevent genocide in the Balkans and in Central Africa. A similar tribunal was created for Rwanda two years later.

The ICTY soon developed its own pioneering spirit. It became a melting pot for different systems of law mainly the Common Law and the Civil Law. It then went on to indict murderers and other criminals from all the communities involved in the Balkan wars: Serbs, Croats, Bosnians and somewhat later Albanians. I followed the trials for weeks and sometimes I could not believe the appalling things I heard and saw. Yet the experience was also an inspiring one: In The Hague the old era of impunity seemed to have been replaced by a new era of rule of law, accountability and justice.

In August 2002, a defendant was found guilty of the crime of genocide by an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Europe. General Radislav Krstic was sentenced by the ICTY for his role in the mass murder of Muslims in Srebrenica. The judgment handed down by the court in the Krstic case is of historical importance and it holds many lessons for the legal evaluation of the massacre that took place on Jeju-do 55 years ago. The judges cite several sources which state that the intent to destroy a group on a certain territory a region or even a town may be considered genocide. In 1998,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Rwanda half a century after the adop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and the massacre on Jeju-do found two leaders of the Hutu ethnic community guilty of genocide for their role in the slaughter of the Tutsis. That was a significant judgment as well, because the two communities of the Hutu and the Tutsi have always lived together in one country, Rwanda.

So, has genocide become a legally actionable crime at last? Yes and no. The jurisdiction of the two tribunals is limited to the crimes committed in former Yugoslavia after 1991 and in Rwanda in 1994. But as the Genocide Convention envisaged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tribunal in its Art. VI,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in 1992 gave the green light to set up what was later to becom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is was a move that gave hope to human rights activists around the world: Finally, the culture of national impunity of previous centuries was being replaced by a culture of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An age of justice without borders was dawning. Unfortunately, this development was also registered with alarm by others not least the United States, who saw in it above all a threatening challenge to their national sovereignty.

In 1998 South Korea, Germany, and 118 other states adopted the statute of the ICC. Only the United States, Iraq, Israel, Jemen, Libya, Qatar and China refused to sign.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came into power in early 2001, the Republican Senator Jesse Helms declared and I quote "war" on the ICC and called it a "kangaroo-court". In most of their public utterances, administration officials said they feared that American soldiers might be subject to politically motivated charges. But in 2002, senior US officials admitted that a major reason for their determined opposition against the ICC was and is to protect the country's top leaders from being indicted, arrested or brought before the court on war crimes charges. As an example, they pointed to the legal actions brought against the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for aiding General Pinochet in the Chilean putsch of 1973 which toppled President Salvador Allende. One official said,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The soldiers are like capillaries, the top public officials President Bush, Secretary Rumsfeld, Secretary Powell they are the heart of our concerns."

On July 1st 2002, the ICC began its work in The Hague. By that time, the Bush administration had already been working long and hard to undermine the court. As early

as a year before the attacks of September 11th, Secretary of Defence Donald Rumsfeld signed a letter warning that "American leadership in the world could be the first casualt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S officials urge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sign separate agreements with the U.S. designed to shield American officials and personnel from judicial persecution. Diplomats were warned that their countries could lose all US military assistance if they decided to become members of the ICC without signing these agreements. This threat was also enshrined in the new anti-terrorism law. It is a great tragedy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in its efforts to lead the world as the sole remaining superpower, should have decided not to support international law, the Genocide Convention and the ICC, but to run them down.

Faced with this situation, what can we now do to make sure that our century will not be remembered, like the 20th, as an epoch where genocide and other heinous crimes could be perpetrated with impunity? Above all, we must strive to unlock the dark secrets of our past and lay them out in daylight for public acknowledgement. This was what the Germans did after 1945 with more than just a little help from the Americans. Today, we have every reason to be grateful that they brought so much positive pressure on us. Our friends on Jeju-do are also trying to understand the past but they are undertaking this task on their own initiative and against considerable resistance from the mainland. To me, this is a shining example. Even for some of the big countries

아름다운 평화의 섬의 과거와 현재에 깊이 감동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 발표자로 초대해 준 것은 저로서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도 큰 기쁨입니다.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는 올해로 60년이 됩니다. 이 용어는 히틀러 치하 독일 국가의 유대인들에 대한 섬멸, 즉 홀로코스트(대량학살)에 항거한 무기력한 울부짖음으로서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국가의 자식입니다. 독일은 국가의 잔혹한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영미 연합군의 용단폭격에 의해 처벌을 받았고, 다음에는 40여년 이상의 국가의 분단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전쟁, 제노사이드 이후 한국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저의 마음속 깊이 우리나라오는 연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며,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합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저의 세대의 독일은 정말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생존한 것만으로도 행운입니다. 거의 4만여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연합군의 전략적 폭격으로 희생됐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드레스덴을 포함한 유럽의 여타 도시에 비해 보다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련의 야간 폭격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특파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체첸, 보스니아, 코소보, 제주도 등지의 모든 측면의 전쟁범죄와 무고한 희생을 취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일부 인사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완전하게 시험을 거치지 않은 원자폭탄을 처음으로 투하한 것은 전쟁범죄와 인간성에 대한 범죄(人道에 대한 罪)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독일과 일본인들의 섬멸작전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문명세계를 위해 한걸음 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사법적 절차(군사적 의미에서의 처벌보다는)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국제법은 진전됐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범죄행위를 재판정에 세워놓음으로써 연합국들은 스스로를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 책임의 이들 새로운 법적 원칙 하에 자신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무고한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인권법의 인상적인 요체는 크게 이 한가지 역사적인 순간의 결과입니다.

‘제노사이드’라는 용어의 아버지가 폴란드계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농민의 아들이면서 뛰어난(그리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는) 변호사이자 학자인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은 1943년 처음으로 ‘ludobojstwo’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인민’이라는 뜻의 폴란드어 ‘lud’와 ‘살인’이라는 뜻의 ‘zabojstwo’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망명정부를 수립하던 런던에서 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1944년 렘킨은 이 용어를 ‘제노사이드’라고 바꿨습니다. 이 용어는 ‘인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genos’와 ‘죽이다’는 뜻의 라틴어 ‘caedere’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렘킨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기초는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 기간에 마련됐습니다. 뉘른베

르크 헌장은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사용된 ‘인간성에 대한 범죄(人道에 대한 罪)’에 대한 개념은 명백하게 램킨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나치 지도자들인 헤르만 괴링과 루돌프 헤스의 기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947년 유엔 사무총장은 램킨과 국제법 전문가 2명에게 제노사이드에 대한 규정을 초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는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제주도에서 정부차원의(공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이 벌어진 것과 같은 해입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홀로코스트로 살육된 라파엘 램킨은 1959년 뉴욕에서 숨졌습니다. 가난 속에서 숨을 거뒀지만 여러분들은 그의 기품있는 묘비에 새겨진 ‘제노사이드협약의 아버지’라는 글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노사이드협약의 전문에는 “역사상의 모든 시기에서 집단학살이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왔다”고 돼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노사이드협약 제2조에서 여러분들이 이 범죄의 정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단어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로써(의도를 가지고 · with intent)’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집단학살이 단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활동이나 행위를 알고 있는 한 개인에 의해 저질러졌을 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집단학살에 대한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1948년 제노사이드협약에서 집단구성원으로 정의한 것처럼, 독재자나 군인이 단지 섬멸이나 파괴를 승인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범죄를)저질러야 합니다.

‘역사상의 모든 시기’라는 것은 제노사이드의 일반적인 문제점인데, 이는 거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트해 민중과 아랍 민중,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자행된 1096년과 1291년 사이의 기독교 십자군 전쟁을 우리는 회상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의 기사들이 완전하게 이들 민중들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이들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제노사이드 기간에 몽골제국의 정복이 있었지요? 유럽인들이 미국에 상륙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비옥한 토지에서 내쫓았을 때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일에 내몰렸거나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감염돼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1천300만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섬멸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4세기 동안 1천70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851년과 1864년 사이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때 2천만명, 아니 3천만명 이상의 희생에 대한 올바른 용어는 무엇일까요?

20세기에는 일들이 약간 쉽게 됐습니다. 이른바 Young Turks라는 터키 청년당원들이 1915년 1백만여명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계획적인 섬멸은 역사상 최초의 기록된 집단학살입니다. 물론, 그 이전의 시기에도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즉 1913년 영국인 덕렛 페리만이 이들 대량 살해를 묘사하면서 ‘홀로코스트’(대학살)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인종적으로 고양된 범투르크운동은 제노사이드에 대한 지극히 일부 남아있는 명령문서 가운데 하나를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독재자들과 대량 살육자들에 의해 시행되는 일상적인 과정은 그와 같은 명령

을 구두로 내렸고,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유고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유럽 지도자입니다. 발칸반도 전쟁에서 그의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행위들은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명이 담긴 명령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소의 노력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터키 내무부장관 탈라트 파샤가 1915년 보낸 다음과 같은 전문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르메니아인들을 완전하게 섬멸하기 위한 의회의 명령을 통해 결정했다. 이 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지금까지 제노사이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년여전 프랑스가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제노사이드로 분류하기를 결정하자, 많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앙카라정부(터키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했습니다.

즉, 터키내 프랑스기 계양 금지, 프랑스 메이커인 ‘시트로엥’의 모든 관용차 사용금지, 터키내 모든 택시 기사들의 프랑스 관광객 수송 금지 등이었습니다. 또 향후 프랑스 관광객들에 대한 터키공항내 모든 VIP 라운지 폐쇄를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1948년 이후 국가와 정부에 의한 제노사이드협약에 주어진 거만한 처리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계의 통치자들은 여전히 제노사이드협약이 인류의 양심을 구현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충분히 강요받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 기간에 터키의 공범자였다는 것을 결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15년 5개의 터키 군단은 독일 최고 사령부 하에 있었습니다. 독일 장교 막스 어빈 폰 쇼이프너-리터는 터키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히틀러의 최측근 보좌관 가운데 한명이 되었습니다. 뮌헨에서 소규모 반란이 일어났던 1923년에 두사람이 나란히 행진했습니다. 쇼이프너는 총탄에 치명상을 입었고 히틀러는 그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총탄이 히틀러를 관통한다면 세계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에 대해 세계의 묵인으로 나중에 대담해진 ‘총통’은 “결국 오늘 누가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해 말할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군대내의 유대인들을 섬멸하는 계획에 관한 의구심을 재확인했습니다. 터키가 한 것은 인종청소였습니다. 즉 제한된 영토에서의 집단학살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아르메니아인들도 그 지역내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는 세계의 유대인들을 완전히 섬멸하기를 원했고, 덧붙여 1942년 8월 6일 그가 말한 것처럼 “1억명의 슬라브인들을 흡수하기를”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야만적인 범죄행위는 세계사에 계획된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개 국가에서 처형됐고, 그 결과 6백만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수백만명의 폴란드인, 러시아인들과 슬라브인들은 또한 독일의 제노사이드 희생자로 전락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모세의 10계명의 사람들을 섬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이지 말지니라”라는 10계와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성서적 명령은 특히 생명과 이방인 보호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관을 세계에 주었습니다.

역사의 선택받은 학생인 히틀러는 이러한 윤리관을 추측컨대 생활권에 대한 사람들의 보다 고대의, 이교도적인 권리에 의해 대신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정착자

들의 영역에 영토가 없는 사람들은 대량 살육, 추방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틀러의 계획은 폴란드에서 우랄산맥 너머의 범위에 이르는 유럽 동부지역의 ‘게르만화’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인들에게 양심의 가책은 다가오는 전쟁에서 단지 불필요하게 방해할 ‘유대인의 발명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나치의 섬멸계획은 아우슈비츠나 부첸발트의 거대한 죽음의 공장들에서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전쟁은 유대인들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행해졌습니다.

1975년 제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벨그라드에 특파원으로 있었을 때 이에 대한 한 본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유고슬라비아 수도에 관한 고증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즉 1941년에 나치는 벨그라드 교외에 유대인 여성과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집단수용소를 설립했었습니다. 1942년 3월, 그들은 베를린에서 트럭 한 대를 주문했는데, 그 트럭은 특별하게 구조가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나치는 수용소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차출해 벨그라드시를 넘어 수송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호스관을 통해 유독가스가 트럭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럭이 시내를 지나 아발라산에 도착하자 질식한 승객들은 거대한 무덤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명백한 이유로, 1948년 제노사이드협약 하에서 금지되거나 처벌받아야 할 집단학살의 행위는 다소간 유대인들에 대해 나치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전형입니다.

제노사이드협약 제2조는 “집단학살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1)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2)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등”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집단 구성원들의 범주는 1948년 최종안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만일 정치적 집단구성원들의 ‘의도된’ 파괴가 집단학살의 정의에 포함됐었다면 너무나 많은 정부가 집단학살 혐의로 비난받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노사이드협약의 비교적 협의의 정의는 냉전의 시작과 함께 전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가능한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범정에 기소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88년 5만여명의 쿠르드인들을 살육한 이라크인들이 “그와 같이” 쿠르드인들을 살해할 의도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문제’로서 쿠르드운동을 제거하려는게 그들의 목표였을까요? ‘정치적’ 집단 구성원들의 계획적인 파괴가 협약에 포함됐었다면 폴 포트나 이디오피아의 멩기스투는 말한 것도 없고 스탈린, 장개석, 모택동도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될 1급 후보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 기간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 정권 치하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현대화의 거대한 임무에 대처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1929년 “우리는 계급으로서 부농(富農)을 없애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콘퀘스트는 스탈린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분쇄할 목적으로 집단농장화한 우크라이나 농민들에 대해 테러와 굶주림을 가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보다는 덜 확신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경영자, 자본가들은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계급’으로 분류되며,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정치적’ 집단구성원으로 분류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구원을 위해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수백만명의 부농과 자본가들의 죽음을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가공할 범죄와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전쟁범죄와 같은 많은 행위들은 1948년 제노사이드협약에서 ‘정치적’ 집단구성원들이 제외됐고, “의도를 가지고”라는 한정적인 두 단어 때문에 집단학살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수십년 동안 제노사이드협약은 잠자는 미녀였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는지 모르는 세계는 주의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1970년대 초 저는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옛 야세노바치 집단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히틀러의 동맹자들인 크로아티아 가톨릭 파시스트들이 10만명 이상의 세르비아인과 유대인, 집시들을 살해했었습니다. 살육자들은—그들 가운데 일부는 가톨릭 사제들입니다—이들을 수장하거나 불에 태웠고, 곡괭이로 폭행치사했으며, 산채로 절단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문화적 증오심에 의해 촉발된 학살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섬멸의 공장이었다면, 야세노바치는 도살장(slaughter-house)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세르비아인들은 전쟁포로인 크로아티아인 1만여명을 총살해 복수했습니다.

제가 야세노바치에 관해 배운 이래 저는 이들 상처들이 전후 유고슬라비아를 통일시키고, 수십년 동안 대통령이었던 티토가 죽은 이후 터졌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198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과 1991년에 발칸반도는 증오의 불덩어리로 폭발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준비하지 못했으며 끝이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최악의 오점을 남긴 사건은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스니아의 이소박한 광산마을은 1992년 이후 세르비아군대에 의해 봉쇄됐었습니다.

유엔은 그 마을을 세계 최초로 국제적으로 유엔이 관할하는 안전지대로 선언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군인들과 준군사조직들은 세계가 맥없이 공포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를 점령했습니다. 세르비아 장군인 므라디치와 크르스티치는 힘없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눈 아래서 거의 8천여명에 이르는 이슬람 성인남자와 소년들을 추방하고, 총살했고, 거대한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미망인들과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남편과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몇주일전, 저는 스레브레니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제주도에서 자행된 인간성에 대한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의 요소들이 익숙합니다. 여성과 어린이 희생자들은 수십년 동안 감히 자신들의 분노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스레브레니차의 전통적인 이슬람교도 가족들 가운데 여성들은 행방불명된 남편들의 시신이 없이 감히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하지 못하고, 장례의식을 치르지도 못한 그들은 애도할 수 없으며, 안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행방불명된 남편들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생각에 대해 그들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미망인들은 자신들의 행방불명된 남편들이 죽었다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스스로에게 “너는 즐거움을 느껴서는 안돼. 너는 행복을 느껴서는 안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끔 이러한 감정을 자식들에게도 전합니다.

1990년대 초 발칸반도에서의 살육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과 미국, 나토의 실패는 제노사이드



드협약을 공공의 관심사로 갖고 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협약이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도(인간성)에 대한 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의 창설을 염두고 있지만 최초의 법정이 세워진 것은 45년이 지난 뒤에서였습니다. 1993년 유엔 안보리는 구유고국제형사법원(구유고전법법정)을 창설했습니다. 참가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는 없었지만 이 법원의 창설은 발칸반도와 중앙아프리카에서의 집단학살을 방지하지 못한 서구 세계의 인정과 보상의 행위였습니다. 2년뒤에는 르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재판소가 창설됐습니다.

구유고국제형사법원은 곧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발전해나갔습니다. 주로 관습법과 국내법의 법체계 차이 때문에 다른 요소가 서로 동화되는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육자들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그리고 다소 늦게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의 전쟁에 개입된 모든 공동체의 기타 범죄자들을 기소해나갔습니다. 저는 몇주동안 재판을 취재했고, 때때로 제가 듣고 본 소름끼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또한 용기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헤이그에서 처벌받지 않는 구시대에는 법과 책임, 정의의 새로운 규칙으로 교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2년 8월에 한 피고인은 유럽 역사상 최초로 국제재판소에 의해 집단학살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 장군은 스레브레니차에서 자행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대량 살육 혐의로 구유고국제형사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르스티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언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55년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량학살에 대한 법적인 평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재판관들은 특정 영토나 지역, 심지어 소도시의 집단 구성원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집단학살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밝힌 여러 가지 자료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제노사이드협약이 공포되고, 제주도에서의 대량학살이 일어난 반세기만에 르완다 국제법원은 2명의 후투족 지도자에 대해 투치족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단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또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투족과 투치족 2개의 공동체는 르완다라는 한 국가내에서 항상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학살은 마침내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됐을까요?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개 재판소의 재판권은 19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된 범죄와 1994년 르완다에서 자행된 범죄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협약이 협약 제6조에서 국제재판소의 창설을 그리고 있듯이 1992년 유엔 총회는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데 파란불을 켜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인권운동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세기의 국가적 불처벌의 문화는 국제적 책임의 문화로 교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경없는 정의의 시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발전은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무엇보다 자신들의 주권에 대한 위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는 미국에 의해 경종이 울렸습니다.

1998년 한국과 독일, 그리고 118개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정관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카타르, 중국만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2001년 초 부시 행정부가 정권을 잡자,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제시 헬름스는 선언했습니다. 내가 인용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을 ‘인민재판’으로 불렀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공공발언에 있어 행정부 관리들은 미군 병사들이 정치적으로 혐의를 받을 동기가 될지도 모를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자신들의 단호한 반대의 주

요 이유가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을 기소, 체포 또는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방지했고,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 예로서 그들은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무너뜨린 1973년의 칠레 폭동에서 피노체트 장군을 지원한 전 미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한 관리는 “병사들은 모세혈관과 같다.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우월 국무장관 등 최고의 관리들은 우리 관심사의 핵심이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7월 1일에 국제형사재판소는 헤이그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시 행정부는 이미 재판소를 훼손하려고 오랫동안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9·11 공격 1년전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최초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전세계의 정부에 미국의 관리와 인사들이 사법적 박해에서 벗어나려고 준비한 미국과 별개 협정을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이런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또한 새로운 대테러법에 남아있습니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지도하려고 애쓰는 부시 행정부가 국제법인 제노사이드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이를 비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었던 것은 커다란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20세기처럼 우리 세기가 집단학살과 여타 가증스러운 범죄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던 시대로서 기억되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비밀들의 자물쇠를 열고 공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대낮에 그것들을 펼쳐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지않게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은 독일인들이 1945년 이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긍정적인 압력을 가져온데 대해 감사히 여길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의 친구들은 또한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육지의 상당한 저항에 대항해 자신들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작업을 떠맡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심지어 일부 큰 국가에서도 여러분들의 작업은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 1.Introduction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be invited to say some words in front of all these experts. My lecture will be about two borderline cases in between Holocaust and mass murder:

- 1- the nuclear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in August, 1945
- 2- the massacre on the island of Jeju in 1948 which killed at least 10 per cent of the islands population.

Korean scientists and your institute made a big effort in the past years to draw public attention to this tragedy and to look for conditions and reasons for it.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heir work and I do hope that you'll get more attention for it in Europe as well.

Your research focuses on two topics:

- 1- The identification of victims and culprits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tragedy itself.
- 2- The elevation of the motives of the insurgent peasants and fishermen as well a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police or paramilitary groups acted against them. The second topic of this work includes questions about the background of the conflict. There will be different answers depending on political concepts of the investigators as well as on the extent of the international context included.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my analysis. In the following I will put the criminal acts of Jeju and Hiroshima into the context of the Cold War for there is a possibility of finding a further explanation for this mass murder.

My approach bases on two conditions: The one is biographic the other is one is professional.

I was born and raised in Hungary. I saw the October insurrection in 1956 as a fourteen year old girl but I did not understand what happened. About 3000 people died, several hundred were executed. 300.000 left the country and fled to the West - mainly young people and intellectuals a hard loss for a country with a small population of 10 million.

Decades later scientists focused their research on the interact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By putting Soviet military intervention into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e tragedy became more understandable. But regardless of recent scientific results old

myths still exist. Hungarian political parties are using them especially for election campaigns. This again explains the fact that nowadays quite a number of Hungarian historians and publicists take an opportunistic stand similarly to their predecessors during communist times. Although with a different type of ideology. What I want to say is: Dictatorships prevent research of historical event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Democracies generally give new possibilities for research though it does not guarantee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sources.

This estimation concludes from my profession: I am a political scientist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with a chai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My main fields 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flicts on the Balkans and the international policy towards them, Democratization and Foreign Politics of Post-communist countries. And last but not least the genesis of the Cold War, a field that caused the foundation of most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 know.

From my experience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best way of understanding any conflict is a scrutiny analysis of its origins as well as previous behaviour of the contrahents.

## 2. What was the Cold War?

In public understanding, the Cold War is reduced to two types of conflicts: One is the antagonism between the two ideological blocs which were established during the years of 1947 and 1955 and which were to dominate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y of the allied countries. The other one is the arms race, which started in the field of nuclear weapons with the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After the Korean War, the permanent expansion of defence expenditure and military production became a dangerous self-governing process.

In the bi-polar international system a black and white thinking still remained. We can identify its origin in the distinction Winston Churchill made on March 5th, 1946 in his powerful speech at Westminster College in Fulton Missouri between friends of freedom and the enemies of freedom. The second represented by a totalitarian regime like the Soviet Union. Excluding all other danger for the freedom and life of ordinary people like colonial or military regimes, the former British Premier urged the Anglo-Saxonian world to join in the war for freedom.

The US president Harry S. Truman applauded and declared one year later that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ree people who are resisting subjection by armed minorities or outside pressure. But again free people were to understand as anti-communist. The Truman Doctrine marked the definite breakdown

of the Soviet American coalition during World War II. Former divergencies about burden-sharing like reparation and credits, about the spheres of influence and the future of Eastern Europe and Germany culminated in the Cold War.

But what were the reasons?

Explanations given by university professors and publicists occupy a lot of place in western libraries. Scientists with theoretical ambitions tried to classify the main positions. Following the now widely accepted reflections I refer in short terms to the mainstream ideas:

According to the so called Traditional or Liberal School it was the communist ideology and the Soviet Russian expansionism that threatened freedom and peace in the world. The USA was therefore obliged to react on the hostile provocation. Moscow's economic and security claims resulting from the German aggressions were ignored and in situations of acute conflicts interpreted as an evidence of expansionism. The views of this school show a remarkable similarity with the strategy of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had a large popularity.

Alternative interpretations got more acceptance with a growing critique on the Vietnam War: the so called Revisionist School questioned the basic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alysing newly available documents and memoirs instead of adapting official statements in a scientific language, they revealed American expansionism as the main source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of the Cold War. It was not a fight for freedom but rather a striving of getting access to new markets. Political influence was needed where American economic interests were at stake.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Schools produced several new insights in the history of the Cold War but the main ideas of the traditional school remained in the mind of the public.

Without looking for further details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on two key retrospective definitions of the Cold War:

In the early nineties, Ernst-Otto Czempiel a prominent professor for International Policy and an expert for US politics summed up: The Cold War was a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bout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Zbigniew Brzezinski a declared opponent of the Soviet Union made the geostrategic dimension even more clear. In his book *The Grand Chessboard* the former security adviser of Jimmy Carter and later on a top adviser of other leading politicians and some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nfirmed the global supremacy of the USA which he saw as a result of a constant and decisiv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This power struggle in the sphere of doctrines reached an

unprecedented intensity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the intensity of the conflict was limited by the arising of nuclear weapons as far as it demanded an

extraordinary self-control from both sides. One can add at this point that the price for this alleged virtue was paid by 400.000 civilians in Hiroshima and Nagasaki and up to a million people who suffered from radioactive contamination.

### 3. Containment Policy in Hiroshima and Nagasaki

The official explanation for the use of the nuclear bomb was the following: The war in Japan was still going on and had to be ended. The bomb was used to make another invasion of US troops unnecessary. The life of a large number of soldiers could be saved.

But how many? American military planning for the landing and conquest of the main Japanese islands included an estimated number of forty to fifty thousand US soldiers being killed. Two years later when the Cold War was already on the run, the former Secretary of War Henry Stimson raised the number of saved American soldiers remarkably up to some hundred thousands. In a speech held in Toledo, Ohio in October 1948 president Truman repeated his formerly non-public statement that his decision saved the lives of a quarter million soldiers. In 1959 when speaking to the students of the Columbia University he changed it into millions. This impressive number helped to invalidate early warnings from scientists about the consequences for mankind of the nuclear bomb. Even more important from what Truman declared was the repetition of what he had already said before: The bombing ended the war. This is confirmed by traditional scholars who insist in their explanations for the dropping of the atomic bomb on Japan despite the enormous controversy among historians on the interpretation that US officials did not know the Japanese were about to surrender. But the first extensive evaluation of documents and memories done by Gar Alperovitz in 1965 showed that in the summer of 1945 the Japanese were on the verge of surrender and that the Americans knew about it.

Already in the late summer of 1944 US army occupied several islands from where the B-52 bombers could easily attack Japan. The sea-blockade showed first results and increased the extreme shortage of economic and military resources. The unbroken will of the Japanese to fight could hardly compensate this.

American military staff reported the Japanese supply problems, but Washington still decided to bomb Tokyo in March 1945 which killed 120.000 civilians. A month later almost the same number of Americans, 70.000 Japanese soldiers and 150.000 civilians died on the battlefields of Okinawa.

In April 1945, after Stalin announced that he did not want to prolong the Soviet-Japanese neutrality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make various diplomatic efforts to end the war. The Japanese empire could not have defended itself, if it would have been attacked from all three military powers (USA, GB, Soviet Union) at

the same time.

The American government knew from diplomatic and secret service sources about the Japanese peace initiatives. Nevertheless Washington insisted on an unconditional surrender including one political demandment, the Japanese could never agree to: There was no guarantee for a continued existence of the emperor. And for the entire population of Japan the Tenno was not just a head of the State but a God. Deputy Secretary of the State Department Joseph Grew knew about this fundamental role of the emperor for the stability of the Japanese society from his time as an US ambassador in Tokyo. He suggested Truman as early as May 1945 a modification of the capitulation conditions. But Truman ignored his proposal.

The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ill had to prove that he was a strong authority in foreign policy. He rather followed the hard liners, like James F. Byrnes. The Secretary of

State designated had told Truman in April 1945 that the bomb might well put us in a position to dictate our own terms at the end of the war. The two billion dollar project of nuclear weapons which originally started to be used against Nazi-Germany, was thus continued. It became an essential part of the overall wartime diplomacy. According to Alperovitz, Truman and Byrnes hoped that upon seeing the power of atomic weapons, the Soviets would relax their policies in Eastern Europe and accept free elections and open trade. In fact, Truman postponed the planned summit meeting in Potsdam again and again until the test of the first bomb was put on the timetable.

The news about the successful testing galvanized Churchill and Truman. They seemed to believe that the monopoly on nuclear weapons would enable them to shape the postwar world order according to their priorities und interests. Although, for the demonstration of power, the desert of New Mexico seemed not to be convincing enough as Secretary of War Henry L. Stimson confirmed: The bomb as a merely probable weapon had seemed a weak reed on which to rely, but the bomb as a colossal reality was very different .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atomic bomb could not only be used as a new weapon of unusual destructive force (as Truman told Stalin after the bomb had been tested) but could rather be used as an instrument of postwar diplomacy were already made by Franklin Roosevelt. Even though his public reputation was too conciliatory and cooperative towards the Soviet Union, Truman's predecessor actually chose policy alternatives that would promote the postwar diplomatic potential of the bomb. In 1943 he started to ignore nuclear scientist who advised him and considere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bomb in consultation with Churchill alone. The British Premier urged the American President to maintain the Anglo-American atomic monopoly as a diplomatic counter against the postwar ambitions of other nations particularly against the Soviet Union. Roosevelt saw the risks the bomb would br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American relationship. Thus he avoided to take a clear stand in the

discussions about the postwar order. But he made commitments supporting Churchill's monopolistic, anti-Soviet position.

In March 1944 the military leader of the Manhattan-Project, Leslie Groves, gave a straight confirmation of this description when he mentioned during a dinner with a scientist that the Soviet Union was the actual destination of the atomic bomb. As Alperovitz found out, Truman and Byrnes dropped the atomic bombs on Nagasaki and Hiroshima because they wanted to end the conflict before the Soviet Union had an opportunity to declare war on Japan, march into Manchuria, and lay claim to the concessions (including Sakhalin and the Kuriles) that Roosevelt had promised Stalin at the Yalta Conference in February 1945.

Upon learning of the raid on Hiroshima Truman exclaimed: This is the greatest thing in history. In any case this was the first nuclear mass murder in world history. The fact that Truman cheered about this crime as the greatest thing in history can be explained with the US strategy to force the Soviet government to surrender important geographical, political, and ideological objectives.

The Soviets grasped soon that the US was determined to pursue an aggressive containment policy against them. The building up of US deterrent structures in different areas of the world should kept the Soviets at bay. Stalin said: The destruction of the Japanese cities is directed to us. And ordered to intensify the Soviet nuclear program. The nuclear arm race began something foreseeing atomic physicists had been warning against before. After the nuclear bombing of Japan, Truman had no longer a problem with a continued existence of the dynasty when he accepted the capitulation. The Cold War began with the atomic bomb and ended some 45 years later after the Soviet resources had been exhausted and their ruling methods had finally been discredited. Hirohito who ruled Japan during World War II died in 1989 - the year communism collapsed in Eastern Europe.

#### 4. Containment in Jeju

Containment, originally advocated by the diplomat George Kennan against Russian expansionist tendencies became early 1947 a carefully constructed policy of counterforce. The actual opportunity to start a containment policy came, when in February the British government delivered two notes to the State Department, announcing that they would be unable to retain responsibility for the security of Greece and Turkey after March 31st.

Paul A. Porter, head of a US fact-finding mission to Greece in 1946, the year the civil war intensified, warned in February 1947 that only further American aid could save Greece from bankruptcy and collapse. Under - Secretary Acheson then forwarded a memo to secretary Marshall on February 21st, concerning this matter: If the United



States wanted to get involved into the ongoing process in the Middle East the congress had to be asked for a direct loan to Greece. But the problem was that the British loan the year before was approved under the condition that no further request for direct loans to foreign governments would be asked of Congress . The State Department set its bureaucratic machinery in motion to find out how to deal with the Congress it would produce the Truman Doctrine.

Recalling prewar isolationism and hoping to head off further congressional budget-cutting, the administration decided to portray the situation in Greece and Turkey in apocalyptic, globalist terms. The officials entrusted with the drafting of Truman's speech sought to use anti-communism to galvanize congressional and public support for aid to Greece and Turkey. A special subcommittee dealt with the question of how to present the Presidents message to the congress the best way. One member of this subcommittee, a representative of the War Department stated that the only thing that can sell [the] public is [the] necessity of holding the line, communism versus democracy should be [the] major theme . Still, the subcommittee advised, not to appear too hostile to the Soviet Union since this would needlessly offend liberal democrats. Instead, administration officials could emphasize the Soviet danger to congressmen and others behind the scenes.

The Soviet activities in Greece were not recognizably higher than usual since the Soviets generally respected British dominance in Greece. No evidences were found for instructions to the Greek communist party or extended material aid to the leftist guerrillas. There had been even less overt action in the immediate past by the Soviet Union which could serve as an adequate pretext for the All out speech. The White House, however, reasoned that the Senate would not approve the Doctrine without the emphasize on the communist danger . As Truman told to his cabinet on March 7th, the Truman Doctrine [...] means the greatest selling job ever facing a President .

One cannot deny that he was quite successful. After his speech before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March 12, 1947, President Truman got the approval of his plans for military and economic aid to Greece (\$250 million) and Turkey (\$150 million).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e Truman Doctrine became a cart blanche for an active foreign policy. And in addition the Doctrine itself had no general geographical limits. Implementing containment policy included building of military alliances, giving economic aid and covert forms of political and economic warfare both in and outside the Soviet sphere of influence.

This summary can be used for some comments on the massacre of ten thousands of Korean fishermen and peasants in Jeju. It all happened under the eyes of US military commanders only 13 months after President Truman stated: At the present moment in world history nearly every nation must choose between alternative ways of life. . The Korean nation was not among them. It was deprived of a free choice, after the Americans fixed up an instant plan to divide the country. The free decision of thousand delegates in Seoul on September 6th to found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answered by the High Commander of the Allied Military Forces in the Far East the following day: All executive power over Korean territory and population south of the 38th parallel will for now be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And of course you know better than I do how the events progressed. Though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merican military officials did know about the foreign policy Doctrine of their government and that they had the duty to implement it. This might explain why they didn't stop Korean police and anti-communist paramilitary troops as they executed not only rebel leaders but obviously were determined to commit mass murder by trying to eliminate any possible supporter of a social revolt.

I would like to end this short lecture with two remarks: For one there was an incredible ignorance of the needs of Jeju's population and their motives for a revolt. Instead there were made up accusations of intense communist influence that were used to legitimate the brutal overkill.

The second one seems to me even more important: The strategy of containment was abused against the vision of a third way between capitalism and an economic system, free of communist ideology but inbuilt social commitments.

냉전의 뿌리-히로시마에서 제주까지

마리아 휘버(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정치학과 교수)

## 1. 개요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초청해 줘 큰 영광입니다. 저의 연설은 대학살과 대량 학살간의 2개의 접점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1.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
2. 최소한 전체 주민의 10%가 희생된 1948년 제주도의 대량학살

한국의 학자들과 제주4·3연구소는 이 비극을 일반의 관심으로 끌어내고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작업에 경의를 표하며 유럽에서도 보다 많은 이 작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희생자와 가해자의 확인 및 비극의 복원
2. 경찰과 준군사단체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행위 하에서의 환경뿐 아니라 사건을 일으킨 농어민들의 동기에 대한 평가. 이 작업의 두 번째 주제는 갈등의 배경에 관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포함된 국제적인 환경의 범위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정치적 개념에 따라 답변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는 제주도와 히로시마의 범죄행위를 냉전의 문맥속에 놓아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량학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접근방법은 2가지 조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傳記)체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것입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14살 되던 1956년에 10월 폭동을 목격했지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천여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처형당했습니다. 30만명이 나라를 떠나 서유럽으로 탈출했습니다-이들은 주로 청년과 지식인들이었습니다-이는 1천만명의 적은 인구를 지닌 나라로서는 커다란 손실이었습니다.

수십년 뒤 학자들은 내적 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련의 군사적 개입을 냉전의 문맥속에 대입시킴으로써 비극은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신화같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헝가리 정당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특히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늘날 많은 헝가리 역사학자들과 정치평론가들이 기회주의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

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이는 공산주의 시대의 그들의 전임자들과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독재 정권은 자신들이 책임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를 금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근원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평가는 연구활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라이프치히대학 국제관계 교수로 있는 정치학자입니다. 저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기구, 발칸반도의 분쟁 및 이에 대한 국제정책, 포스크 공산국가들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냉전의 기원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 기구들의 창설의 원인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어떤 분쟁이든지간에 이를 이해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전의 행동뿐 아니라 이의 기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2. 냉전이란 무엇인가?

냉전은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의 갈등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1947년부터 1955년 사이에 수립된 2개의 이데올로기의 블록과 연합국의 국내 및 외교정책을 지배하려했던 2개의 이데올로기의 블록간의 적대감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군비경쟁입니다. 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와 함께 핵무기 분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방위비 지출과 군수품의 상시 팽창은 위험한 자치과정이 되었습니다. 상반하는 국제 체제에서의 흑백사고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윈스턴 처칠이 1946년 3월 5일 폴톤 미주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행한 강력한 연설을 통해 자유의 친구들과 자유의 적들을 구분한데서 이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대표됩니다.

식민지 정권이나 군사정권과 같은 보통사람들의 자유와 생활을 위협하는 다른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전영국총리는 자유를 위한 전쟁에 참가하도록 앵글로 색슨 세계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1년 뒤 “무장한 소수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종속에 저항하는 자유시민들을 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선언하며 격찬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민’은 ‘반공주의자’로 이해되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제2차대전 기간 동안의 미·소간 연합의 완전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배상과 변제와 같은 부담을 나누는 것과 동유럽과 독일의 미래와 영향에 관한 이전의 다양성이 냉전에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 교수들과 정치평론가들의 설명은 서방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 야심을 가진 학자들은 주요한 견해를 밝혀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는 현재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주류의 견해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전통주의-혹은 자유주의-학과에 따르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소비에트러시아의 팽창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므로 적대적인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경제 및 안

보 관계자들은 독일 침략의 결과는 무시되고, 침예한 갈등의 상황에서 팽창주의의 증거로서 해석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학파의 견해는 트루먼 행정부의 전략과 놀라울만한 유사성을 보여주며 상당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에 대해 점증하는 비평이 대안 해석으로 더욱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이른바 수정주의 학파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뛰어난 언어로 사용된 공식 성명을 채택하기보다는 새롭게 활용가능한 서류와 회고록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냉전 참가국들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팽창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위태로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했습니다.

양대 학파의 논쟁은 냉전사에서 몇가지 새로운 통찰력을 낳았지만 전통주의 학파의 주요 사고는 대중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나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냉전의 정의를 회고하는 2가지 주요 정의에 여러분의 관심을 모으고자 합니다.

즉, 1990년대 초, 뛰어난 국제정책 교수이면서 미국 정치 전문가인 언스트 오토 켐펠(Ernst-Otto Czempiel)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냉전은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과 영향력 분배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이었다.

소련의 반대자로 선언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전략지정학적인 공간을 보다 명확히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으며 나중에 뛰어난 정치학자들과 몇몇 다국적 기업의 최고 보좌역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저서 『The Grand Chessboard』에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간의 끊임없고 중대한 경쟁의 결과로 인식한 미국의 지구적 패권을 확신했습니다.

정책 범주에서의 이러한 권력투쟁은 한편으로는 ‘진례없는 강도’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갈등의 강도는 양쪽 진영으로부터 ‘비상할 정도로 자기 통제’를 요구받는 한 ‘핵무기의 부상’에 의해 제약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이러한 도덕이라고 주장되는 대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40만명의 민간인들의 희생과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1백만명의 희생을 치렀다고 덧붙입니다.

### 3.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봉쇄정책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종결지어야 했다. 폭탄은 미군의 또다른 침공을 불필요하게 할 것으로 사용됐다.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미군의 상륙작전과 일본 주요 열도의 점령은 미군 병력 약 4만-5만여명의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시작된지 2년 뒤 전전쟁성장관 헨리 스티븐슨은 놀라울정도로 생명을 구한 미군의 병력이 수십만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948년 10월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열린 연설에서 트루먼은 자신의 결정으로 생명을 구한 미군 병력이 25만여명에 이른다는 이전의 비공식 성명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1959년 콜럼비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할 때는 ‘수백만명’이라고 고쳤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숫자는 일찍이 핵폭탄 사용과 관련한 인류의 결판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효화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트루먼이 선언했던 것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이전에 얘기했던 것의 반복이었

습니다. 즉, 원폭 투하로 전쟁은 끝났다. 이것은 미국 관리들이 일본이 곧 항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해석에 관해 역사학자들간에 엄청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대한 자신들의 설명을 주장해온 전통주의 학자들에 의해 확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5년 갈 알페로비츠(Gar Alperovitz)가 행한 자료와 기억에 의한 최초의 광범위한 평가는 1945년 여름 일본이 항복 직전에 있었고, 미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1944년 늦여름에 미군은 B-52기가 쉽게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몇 개의 섬을 점령했습니다. 해상봉쇄는 최초의 결과를 보여주며 경제적, 군사적 자원의 극단적 결핍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전투에 대한 일본의 불굴의 의지는 이것을 거의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일본의 보급 문제를 보고했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민간인 12만여명을 죽인 1945년 3월 도쿄의 공습을 결정했습니다. 1개월 뒤 거의 같은 수의 미군과 7만여명의 일본군, 15만여명의 민간인들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1945년 4월, 스탈린이 소·일 중립협정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발표한 뒤 일본 정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동시에 3대 군사강국(미국, 영국, 소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더라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정부는 외교기관 및 정보기관을 통해 일본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단일 정치체 요구를 포함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즉, 지속적인 천황의 존재에 대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본국민들에게 천황은 국가원수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국무성차관 조센 그류는 주일미국대사로 재직할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안정을 위해 천황의 근본적인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루먼에게 1945년 5월 초순 조건부 항복의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은 그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정책에서 강력한 권위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임스 번즈(James F. Byrnes)와 같은 강경파들에 동조했습니다. 임명받은 국무장관은 1945년 4월 트루먼에게 원폭은 “전쟁의 종결이라는 우리 자신의 용어를 받아쓰게 하는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었습니다.

애초 나치 독일에 사용하기 위해 시작된 20억달러의 핵무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서 계속됐습니다. 알페로비츠에 따르면 트루먼과 번즈는 원자폭탄을 보자마자 소련은 동유럽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늦추었고, 자유선거와 개방무역을 수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사실, 트루먼은 계획된 포츠담 정상회담을 최초의 원폭실험이 시간표대로 진행될 때까지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성공적인 원폭 실험 소식은 처칠과 트루먼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 독점이 자신들로 하여금 전후 세계 질서를 자신들의 우선순위와 이익에 따라 개조할 수 있게 됐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의 과시에도 불구하고 뉴멕시코 사막은 전쟁성장관 헨리 스티븐슨이 확신했던 것만큼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티븐슨은 “단지 그럴듯한 무기로서의 폭탄은 의지하기에는 약한 갈대처럼 보였지만 어마어마한 실체로서의 폭탄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놀라운 파괴력을 갖춘 새로운 무기’(트루먼이 원폭 실험이 끝난 뒤 스탈린에게 말했다)로서 사용될 뿐 아니라 ‘전후 외교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일반적인 평판이 소련에 대해 대단히 유화적이고 협력적이었을지라도 트루먼의 전임

자인 그는 실제로 원폭의 전후 외교에서의 가능성을 증진시킬 정책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1943년에 그는 자신에게 자문을 했던 핵무기 과학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처칠과만 협의해 폭탄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후 다른 국가들의 야심-특히 소련-에 대항한 외교로서 영미의 독점권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미소간의 관계 진전에 폭탄이 가져올 위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전후 질선에 관한 토론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칠의 독점권을 지지하는, 반 소련 입장에 대한 논평을 했습니다.

1944년 3월 맨하탄 프로젝트의 군 수뇌인 레슬리 그로브즈는 한 과학자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원자폭탄의 실제적인 목적지는 소련이라고 직접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알페로비치가 찾아냈듯이 트루먼과 번즈는 소련이 대일전을 선언하고, 만주로 진격하고,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약속했었던 양보(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포함한)를 주장할 기회를 갖기에 앞서 전쟁을 종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가시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대한 공습을 알자 곧바로 트루먼은 외쳤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고의 것이다.” 여하한 이것은 세계사에서 핵무기로 인한 최초의 대량 학살입니다. 트루먼이 이러한 범죄를 ‘역사상 최고의 것’이라고 칭송했다는 사실은 소련 정부로 하여금 중요한 지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포기하게 하도록 하는 미국의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련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적인 봉쇄정책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곧바로 파악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 구조(deterrent structure)의 증강은 소련을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탈린은 “일본 도시의 파괴는 우리를 향한 것”라고 말하고, 소련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핵물리학자들이 경고했었던 핵무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뒤 트루먼에게는 조건부 항복을 접수할 때 계속됐던 왕조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냉전은 원자폭탄 투하로 시작됐으며, 45년이 지난 뒤 소련이 자원을 소진하고 자신들의 통치방법을 마침내 불신임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2차대전 기간 일본을 통치했던 히로히토는 1989년 동유럽이 붕괴된 해에 사망했습니다.

#### 4. 제주도의 봉쇄정책

애초 외교관인 조지 케난이 ‘러시아의 팽창주의 경향’에 대항해 옹호했던 봉쇄정책은 1947년 초 대항력으로서 신중하게 구축된 정책이 됐습니다.

1947년 3월 31일 이후 그리스와 터키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2월에 영국 정부가 국무성에 2개의 기록을 전달할 때 봉쇄정책을 시작하려는 실제 기회가 왔습니다.

내전이 격화된 해인 1946년 미국의 그리스 진상조사 사절단 대표 폴 포터는 1947년 2월 미국이 추가원조만이 그리스를 파산과 붕괴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장관대리 애치슨은 2월 21일 마셜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한 비망록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미국이 중동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의회가 그리스에 대한 직접 차관을 요청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전해의 영국 차관이 “외국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차관을 위한 추가 요구는 의회에 요청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승인됐다는

것입니다.

국무성은 의회와 협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관료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트루먼 독트린을 낳은 것입니다.

전전(戰前) 고립주의의 회고와 의회의 추가 삭감이 없기를 희망했던 행정부는 그리스와 터키 상황을 묵시록적이고, 지구적 용어로 묘사하기를 결정했습니다. 트루먼 연설문의 초안을 맡은 관리들은 그리스와 터키 원조에 대한 의회와 일반인들의 지지를 자극하기 위해 반공주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특별소위원회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의회에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한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전쟁성을 대표한 이 소위원회의 한 위원이 “일반인들에게 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노선을 취하는 필요성이다. 즉 공산주의대 민주주의가 주요한 테마”라고 말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불필요하게 진보적 민주당원들을 공격한 이후 소련에 대해 너무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고했습니다. 반면 행정부 관리들은 소련의 위협을 의회 의원들과 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의 소련의 활동은 소련이 대체적으로 그리스에서의 영국의 지배를 평가했기 때문에 눈에 떨 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공산당에 대한 지침이나 좌익 게릴라에 대한 물자 지원 등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진력을 다한’ 연설에 대한 충분한 핑계거리로 봉사할 수 있었던 소련의 직전 과거에서 공개활동은 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상원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강조하지 않고는 독트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붙였습니다. 3월 7일 트루먼이 자신의 내각에서 발언할 때 트루먼 독트린은 “이제까지 대통령이 부딪쳐본 적이 없는 최대의 판매업”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대단히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1947년 3월 12일 상하양원 합동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2억5천만 달러)와 터키(1억5천만 달러)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트루먼 독트린이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위한 백지위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독트린 자체가 일반적인 지리적 제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봉쇄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군사적 동맹의 구축과 경제원조 제공,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안팎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전쟁의 비밀스런 형태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개요는 제주도에서의 수많은 농어민 학살에 대해 몇가지 논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현시기에 거의 모든 국가가 반드시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언급한 뒤 13개월만에 미군 지휘관들의 눈 아래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그들 사이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할 즉흥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자유로운 선택권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9월 6일 서울에서 수천명의 대표자들이 실시한 자유로운 결정은 다음날 극동 연합군사령부 최고 지휘관에 의해 “38선 이남의 한국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아래 시행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보다 사건의 전개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군 관리들이 외교정책인 그들 정부의 독트린에 관해 알고 있었고, 이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국 경찰과 반공 준군사단체들이 반란군 지도자를 처형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반란의 동조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제거하기 위해 대량 학살 감행을 결심하고 처형하는 것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지도 모릅니다.



나는 2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는 봉기를 위한 제주도민의 필요성과 그들의 동기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무지입니다. 대신 야만적인 과잉살해를 합법화하고 했던 강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에 대한 비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봉쇄정책의 전략이 자본주의와 경제체제간의 제3자의 길에 대한 전망,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없고 사회적 약속을 구축하는데 대해 남용됐다는 것입니다.

주제2 기억의 재생과 복원

집단적 기억의 재생과 복원  
정근식(전남대학교 교수)

제주4·3의 기억들과 변화  
권귀숙(제주4·3연구소 전임연구원)

## 집단적 기억의 복원과 재현

정근식 (전남대 사회학과)

### 1. 민주화와 기억투쟁

2003년 3월 29일 정부는, 4.3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사건의 발발배경,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고,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집단학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사과,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보고서 내용의 평화-인권교육 자료 활용, 4.3평화공원 조성지원, 유가족에 대한 실질 생계비 지원,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지원,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 등의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 채택은 십수년간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4.3 복원운동이 이제 확실히 제도화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과거청산운동 중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큰 과제인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은 아직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1995년 광주특별법 제정과 이후의 후속조치들에 의해 오월운동이 제도화단계에 접어들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체계화되기 시작했으며, 4.3 복원운동도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청산운동과 그 속에서 진행된 민중적 경험의 복원 프로젝트의 성과는 보다 나은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또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화의 이행기에 이루어진 각종 증언 프로젝트, 민중의례, 문화운동, 기념물 조성 등이 당시의 ‘진상규명’이라는 보다 넓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됨으로써 갖게 된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진상규명의 시대’에 우리는 국가의 공식적 기억에 맞서서 다양한 형태의 증언채록, 민중의례, 기념물 조성을 시도해 왔다. 이들은 모두 분단체제와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망각 또는 침묵을 강요한 민중적 경험, 즉, 역사에서 희생된 자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도화단계에 이르면, 증언, 의례, 기념 자체보다는 어떤 증언, 어떤 의례, 어떤 기념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곧 지난 시기의 각종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성찰이자 비판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질문은 오늘날 과거청산운동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 즉 제도화이후에도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운동적 지향을 표현한 대안적 권력의 제도화 못지 않게 제도화가 가져오는 권력효과(Kertzer 1988)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의 과거청산운동의 핵심 내용의 하나인 역사적 경험의 복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과정은 다양한 사회집단의 과거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의 표준화과정이기도 했다. 국어와 국사의 출현은 집단적 기억의 국가화 과정이며, 또 그 결과물이기도 하

다. 한국사회처럼, 식민지체제와 분단체제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의 경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해온 경우,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표상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식민지체제나 분단체제 하에서 국가권력은 항상 과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왔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의 경우 그런 기념과 기억의 정치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따라서 탈 권위주의화의 과정은 사회구조나 정치제도의 차원 뿐 아니라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운동은 현재의 사회문제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할 뿐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재생산하는가라는 기억투쟁을 동반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 이후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성찰해보면,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정치세력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도전 뿐 아니라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의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5월운동이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내세우면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에 대한 직접적 도전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면, 1988년 4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본격화된 4.3 복원운동<sup>1)</sup>이나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여순사건 복원운동, 2000년부터 본격화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해결운동 등은 수십년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산출한 정치권력보다는 그것에 의해 재생산된 광범한 사회세력과의 투쟁으로 진행되었다. 더 길게 보면, 한말에 이루어진 동학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사업도 사회적 문화투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런 기억투쟁은 과거의 국가권력이나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사회집단에 의해 억압되고 지워진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서 사라지거나 망각되기를 요구받았던 민중적 경험을 복원하는 문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한결같이 국가권력이나 외세에 의한 대규모 학살과 민중적 항쟁이라는 두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인식하도록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고 쟁점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청산운동 각각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과거청산운동은 정치투쟁일 뿐 아니라 문화운동이기도 하다. 이런 기억투쟁은 개인적 실존의 의미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한다. 즉 과거청산운동은 단지 ‘과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억압된 것을 현재로 복원하며, 미래의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간의 통일과정이다. 대체로 민중적 경험의 복원과 재현은 ‘증언’, 새로운 민중의례, 각종 기념물이나 기념공간의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후속 세대의 미래적 삶의 조건이 된다.

## 2. 증언, 언표된 기억

1) 1980년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기적인 사회운동을 부르는 명칭으로 ‘오월운동’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1948년부터 수년간 지속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또한 한번의 정치적 결정이나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지칭하는 개념이 아직 없다.

한국에서 국가적, 체제옹호적 기억은 언제나 쉽게 표현되어 왔지만, 민중들의 집단적 기억은 분단체제나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또는 공동체에 의해 표출이 억제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는 관념적으로 천부인권에 속하나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근대적 사회운동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공식적 기억과 공동체의 기억이 충돌하는 경우 기억의 표면과 심층, 또는 공식적 담론의 세계와 비공식적 담론의 세계가 단절된다. 이런 단절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기억이 국가적 억압을 뚫고 표출되는 것은 민주화의 국면이며, 그것은 그 공동체는 초기에서 정치성이 적은 친족이나 문중, 친구집단에 의해, 민속이나 종교의례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이 좀더 좋은 정치적 기회를 맞게 되면, 증언이나 기념물의 건립으로 나타난다. 증언, 의례, 기념물, 문화적 텍스트들은 이런 기억투쟁의 산물이다. 그 중에서 기초적이고 담화적인 것이 구술 또는 증언이다.

증언은 기억이 언표된 것이다. 언표되지 않은 기억은 침묵 속에 존재한다. 침묵은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기억과 현실의 질서가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침묵은 길어진다. 침묵은 억압된 기억의 현존형태이다. 침묵이 길어지면 망각에 이르기 쉽지만, 피확살 경험과 그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설팡기억에 속한다. 그런 경험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증언은 한편으로는 공식사에 의해 부정된 민중적 경험을 드러내는 사실 규명적, 폭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증언자는 자신의 생애사 전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증언의 초점이 달라지지만, 동시에 증언채록자의 목적과 면접들에 따라 달라진다.

증언은 많은 경우 자발적이라기보다 그것을 이끌어내려는 사람에 의해 이끌려진다. 증언 프로젝트는 일종의 과거청산운동에 속하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다. 증언은 기억을 말로, 나아가 그 말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증언자와 채록자 모두 자신의 대화를 글로 정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검열의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자기검열의 틀은 물론 정치적 지형,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증언은 증언자와 채록자의 대등한 권력상황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행위자의 목적의식성을 강조하느냐, 상황의존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증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리나 편집은 오히려 증언자보다 채록자에게 속하는 영역이다. 정리의 방식 또한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말은 언제나 상황의존적이어서 문법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항상 표준어로만 발음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건의 시간적 발생순서를 따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편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증언은 채록자와 증언자의 공동작업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 5.18 증언

한국에서 비교적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증언채록 프로젝트는 1988년 광주에서 설립된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sup>2)</sup>가 광주항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송기숙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 연구소는 '광주항쟁의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계획한 핵심사업은 항쟁참여자의 증언채록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약 2년간 진행되었으며, 1990년 약 500명으로부터 증언을 채록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구술이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한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은 송기숙 교수의 간행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민중들의 저항에 관한 자료는 거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왜곡된 관변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런 자료의 한계를 구견이나 구술로 어느만큼 보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구술자료의 수집방법과 그런 자료의 과학적 검토방법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p.8).

실제로 증언채록의 방법이나 증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증언채록의 준비를 위하여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준비팀을 구성하고 대학졸업자들중에서 전문 조사원을 모집하여, 증언채록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교육하고 훈련했다. 교육과 훈련은 젊은 교수들이 담당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이 조사팀을 이끌었다. 조사원들의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우선 항쟁의 일반적 전개과정을 교육하였으며, 구술사의 방법, 의의(Thomson 1988) 등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원들로 하여금, 표본을 선정하여 채록하고, 그 자료를 공동으로 읽으면서 문제점을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채록의 원칙이 세워졌는데, 증언자의 가족적-사회적 배경을 포함하여 가급적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6하원칙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였다. 또 사건 이후의 경과까지를 포함하여 원고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 때 쟁점은 첫째, 표준화된 질문항목을 이용할 것인가, 둘째, 증언자를 어떻게 선정하며, 면접장소와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셋째 증언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록자의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넷째 집단적 인터뷰를 활용할 것인가, 다섯째, 녹음기를 사용할 것인가 등이었다. 일단 채록된 자료의 경우 정리의 방식에 관하여 첫째, 증언자가 말하는 대로 적을 것인가, 아니면 예상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편집을 허용할 것인가, 둘째, 대화체로 기록할 것인가, 고백체로 기록할 것인가, 셋째, 증언채록의 저자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등이 문제가 되었다. 조사가 점차 진행되면서 생긴 또 한가지 문제는 조사자들 독립된 연구자로 취급하여 각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특징적인 인터뷰를 허용할 것인가, 미래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자료를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철저하게 공통의 틀에 따른 조사로 한정할 것인가였다.

결국 증언은 공동의 표준화된 면접표를 활용하기로 하고, 신상정보(성별, 나이, 당시와 현재의 직업), 항쟁기의 활동내용(수습대책위원회 활동여부, 도청내 활동, 무장상황, 시위경험, 선정활동여부, 헌혈 및 물적 지원활동, 기타), 사법 처리상황(복역, 구속, 연행훈방), 피해정도(사망, 해방불명, 부상), 현재의 건강상태(정신질환, 신체불구, 건강이상), 단체활동상황을

---

2) 이 연구소의 명칭은, 민주화로의 이행이 시작되었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구소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고려에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결정되었다. 이 연구소의 성과는 1997년 전남대 5.18연구소의 설립으로 일부 이전되었다.

적도록 하였다. 증언은 개별 사례로 취급하여,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등을 표기하고, 고백체로 기록하며,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언은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과 부분별 소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전체 증언을 주요 활동별로 분류하여 4자리의 번호를 부여하고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예컨대 증언자는 수습대책위원회 활동, 무장조직 활동, 시민항쟁 참여, 선전활동, 중요 학살사건, 지방에서의 항쟁, 피해자, 목격담 및 군자계자 증언 등 8개 대범주로 분류되었고, 대분류 내에서 중분류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에는 증언자 개인별 활동을 요약하는 표를 만들어 이후 사용에 편하도록 배려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몇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5.18 항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 증언채록 프로젝트의 목표는 증언채록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사료전집은 처음에 문헌자료를 함께 실으려고 계획하였으며, 증언(구술자료)과 함께 사건의 상세한 시간별 일지가 수록되었다. 가장 중요한 관심과 목표는 진상규명에 있었으므로, 증언채록과 정리는 표준어로, 사건의 전개 순으로 한다는 것이 지침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향한 것이었으나 진상이 증언자의 경험에 있다는 입장과 증언채록을 통하여 진상을 새롭게 밝힌다는 입장이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증언자체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차원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이런 지침이 ‘자료로서의 증언’의 일정한 측면을 훼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언이나 사투리가 제거되고, 또한 체사나 간투어가 삭제되며, 실제로 말한 순서와 정리된 글의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 역사언어학적 자료는 상실된다. 더 큰 문제는 증언이 증언자의 삶 자체로 이해되기보다는 진실규명의 수단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둘째, 1980년에 일어난 사건을 1988-89년에 조사한 것이어서 10년 미만의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대한 증언채록이었다. 물론 증언의 구체성은 여러 요인과 관련되지만, 무엇보다도 학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과거에 대한 증언이었으므로 증언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채록이 이루어진 시기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당시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은 이영희교수의 간행사에 나타나 있다. 이 증언채록은 “1980년 5월 대학살의 주범들이 그대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런 연유로 항쟁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증언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사료전집에 수록된 증언 한마디 한마디는 글자가 아니라 선혈이다”(p.5)라고 인식하였다.

셋째, 민주화운동의 고양기에 채록이 실시되었다. 이 점은 앞의 요인과 반대로 구술에 작용하였다. 억압된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증언을 하고,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증언자가 첫째,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인식할 것, 둘째, 증언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최소화될 것, 셋째,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효능감이 있을 것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만약 증언이 곧 금전적 보상이나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경우 증언은 과장되기 쉽다. 송기숙 교수의 간행사에도 이 점이 나타나 있다. “사건 참여자들의 이런 직접적인 구술은 사료적인 면에서는 근본적인 약점을 지니기 마련이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말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심리이기 때문이다. 채록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방법을 검토했으나 구술사학의 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방법론적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p.7)

넷째, 증언자와 채록자의 세대적 차이가 별로 없는 거의 동시대적 문화 속에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이 것은 이후의 4.3 증언이나 군 위안부 증언 프로젝트처럼 조사원과 증언자 간의 세대나 경험이 판이하게 다른 사례보다 증언채록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용하였다. 증언의 상황, 예컨대 채록자의 공동체 성원 여부나 성, 사회적 지위 또한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 증언자와 채록자가 동일한 언어문화권에 속하고 있으므로 오해의 여지가 적었지만, 세대나 계층, 또는 인생경험의 차이로 강조점이나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증언은 특정 시기의 정치적 정세와 증언자의 개인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동일한 경험을 말하는 경우에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된다. 증언의 내용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과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말을 글로 적는 경우, 인토네이션이나 말할 당시의 표정, 뉘앙스를 완전히 포착할 수는 없지만, ‘말한 대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는, 면접상황에서 발음한 대로 적은 것, 발음한 것 중에서 개념어만 그대로 살리고 문장이 되도록 조사를 보충한 것, 생략된 단어를 보충하거나 문법에 맞게 재배열하여 적은 것, 명사나 동사까지 표준어로 바꾸어 적은 것 등 여러 수준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1998년 전후한 시기에 광주항쟁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한국사회학회 편 1998; 최정운 1999)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증언채록 사업은 몇가지 부수적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항쟁 참여자로 하여금 추가 증언이나 증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회피한 사람들이 기꺼이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던 사고가 많이 누그러졌다. 둘째, 글로 적는 채록의 한계로 인하여 증언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는 영상채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1996년 5.18 영상기록 특별위원회가 결성되고 영상채록을 시작하였다(나간채 외, 1999). 셋째 부족하거나 누락된 증언자의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 5.18 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의 증언채록사업(2003)으로 이어졌다. 구술사 방법론이라는 학문적 관심에서도, 증언의 시간효과를 살피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재조사하여 증언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광주항쟁 이외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구술사의 가능성을 적용해보도록 유도하였다. 광주5월항쟁사료전집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이미 제주 4.3사건의 구술이 시야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이다(p.8).

증언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증언자의 사건 후의 경험, 변화된 인식의 지평이, 이차적으로는 채록자의 인식이나 지식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기록된 증언은 증언자와 채록자의 공동 저자가 된다. 이것은 거꾸로 채록자의 관심, 인식의 지평, 지식의 정도에 따라 증언의 내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언의 구체성, 사실성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이루어진 5.18에 관한 증언채록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3년에



출간된 증언자료집에서 한 증언자는 인터뷰하기가 싫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실은 아휴 진짜 5.18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잘 안하는 거 아시죠...5.18 인터뷰 나온 것,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별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터뷰 나온 것, 이렇게 읽어 보면은 그 때 당시에 이렇게 성숙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너무 너무 과장된 그 때 당시의 자기 성숙도하고 상관없이 지금의 수준을 가지고 정말 그런게 싫어가지고...

또 하나 하기 싫은 거는 이게 그 세월과 동시에 묻혀지는 것이 있고, 세월이 아무리 가도 선명한 것이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다시 재현하고 나면은 며칠동안 편치가, 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늘상 이렇게 내가 5.18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과거를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간채-이명규 편, p.13)

이 증언을 보면 선행하는 증언은 단편적이고 얇고 동일한 경험집단의 자기 성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증언채록 프로젝트는 담론공동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그 자체가 민주화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증언의 집적을 통한 경험의 공유와 자기확인은 보다 집단적인 의례나 물질적 기념으로 나아가도록 고무한다. 증언집이 발간되면, 증언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증언을 읽게 되며, 이를 통해 그것들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 사건의 증언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할 때, 단지 시간효과 뿐 아니라 선행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보는 성찰효과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증언과 트라우마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증언이 폭력에 의해 상처를 받은 희생자들의 트라우마의 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때때로 트라우마는 증언을 억제하기도 한다.

### 4.3 증언

4.3사건에 관한 조사는 1960년 4·19이후 <국회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속에서 자극을 받았고, 이때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4·3진상규명동지회>가 4·3희생자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한 것이 최초였다. 제주지역의 유일한 일간지였던 <제주신보>가 주축이 되어 신고접수창구 역할을 했고, 이 기간에 조사 접수된 명단은 1,800여명이었지만, 조사결과는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30년간 국회도서관에 묻혀버렸다. 이때 증언조사는 ‘피해’에 대한 것이었다.

5·16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4·3 증언 채록은 금기의 기간으로 긴 침묵의 시간이었다. 증언은 소설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현기영의 <순이삼촌>이었다. 4.3에 대한 증언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와중에서, 또는 그 성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8년부터 4·3에 대한 연구들과 문학작품들이 출판되면서 4·3증언채록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 4·3 4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4·3은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4·3연구소의 <이제사 말함수다> 등은 민간 연구차원의 본격적인 증언채록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때의 증언채록은 항쟁의 입장으로 다룰 것인지, 학

살의 입장에서 다를 것인지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1990년대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마을별 현지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4·3연구는 4·3의 저항적 측면보다는 학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의 희생자의 관점에서 4·3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기 시작했다. 기존 4·3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별 현지조사는 진상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서로 비교하여 진실성을 묻고 확보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런 성격의 연구들로 제민일보 4·3취재반의 마을증언시리즈인 <4·3은 말한다>와 제주4·3 제50주년 학술, 문화 사업추진위원회가 펴낸 4·3유적지 기행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그리고 제주4·3연구소의 현장채록팀이 기술한 <한림면 현장조사서> 등이 있다. 이때 연구자들이나 증언채록자들은 각 마을 단위에서의 4·3전개과정과 피해사태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장대나 토벌대 활동을 했던 사람, 조사마을의 대표적 피해사태를 말해줄 사람을 증언자로 찾았다. 증언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힐 수 있는 질문만을 했다.

4.3의 증언 채록이 사건 발생 후 5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증언의 내용이나 형식, 질적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생존자는 당시의 유소년이거나 청년층이었고, 또한 당시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았으며, 증언자체가 오랫동안의 금기였다는 점에서 망각되기 손상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출단서가 제시되어야만 기억을 되살릴 수 있으며, 말보다는 몸으로서의 증언이라는 성격을 많이 지니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4·3증언에 대한 접근방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증언채록을 통한 4·3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정주의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등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4·3에 대한 기억을 채록 연구함으로써 4·3의 현재성에 대한 연구의 확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3 증언의 방법론적 천착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고, 증언채록 프로젝트에 대한 성찰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4.3기획단 보고서에 실린 약 500명의 증언도 이제 곧 냉철한 평가대상이 될 것이다.

#### 수단으로서의 증언에 대한 도전

증언이 단지 사실 규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증언자의 삶 자체라는 인식은 윤택림(1994), 유철인(1996)등에 의해 지적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증언을 채록하고 이를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와 한국정신대연구소의 조사팀에 의해서도 제기되어왔다(한국정대협 외, 1997, 251), 이들은 점차 조사방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1999년에 출판된 증언집 3권은 이전의 증언집에 비해 정리자의 ‘구성’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며, “우리는 왜 증언채록을 해왔는가”라는 좌담회(한국정대협 외, 1999:335-363)에서 증언채록의 문제의식과 방법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 팀의 조사지침을 공개하였다.

2000년 12월의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준비하기 위한 진상규명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증언채록(2001)은 기존의 증언 채록방법에 대한 반성을 수반하였다. 증언이 ‘문

기'에서 '듣기'로 초점이 옮겨지고, 증언의 재현이라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양현아(2001)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군위안부의 증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언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증언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담론을 분석해보면, 위안부 생존자들은 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라는 사실 중심의 질문을 대답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무엇을, 왜라고 하는 거의 6하 원칙에 의한 질문들에 답해야 하고, 이러한 질문상황에서 생존자들은 일종의 ‘정보제공자’로 화하게 된다. 그것도 흐려진 기억과 받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불만족스런 정보제공자로 말이다.”

“생존자 증언은 주로 사실 확인과 수집의 목적에서 발굴, 채집, 기록되어왔고, 사실성의 잣대에서 그 진위를 의심받거나 신뢰받아왔다.” “이러한 증언의 자리매김에는 크게 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증주의 방법론의 문제와 민족주의적 목적의식이다.”

“증언은 그저 있는 기억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생산되는 것이다. 증언 자체가 증언자와 면접자의 만남의 산물, 또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산물이다. 미리 구성된 사실범주, 외부자적 시선, 실증주의 방법으로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역사정의의 추구한다는 것은 목적과 방법이 서로 어긋나 있다.”

“생존자들은 단지 ‘피해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도 영웅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생존자 증언은 죽어서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집합체함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언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산 자가 대신해서 죽은 자의 체험을 말해줌으로써, 우리와 같은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준다. 생존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그것이 듣는 이에게 공감어 되고 기억될 때, 이들의 뭉친 가슴에 언어가 생기고 치료가 시작될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후세대들에게 공명할 때, 오늘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덧없는 죽음의 영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상처의 치유는 함께 기억하기에서 시작된다.”

이런 지적은 5.18 증언이나 4.3증언에도 적용될 수 있다. 5.18의 증언이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관한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말하기 쉬운 상황이었다면, 4.3의 증언은 오래된 과거이고 피해자 또한 고령자인데다가 당시의 일반적 학력수준 또한 낮았다는 점에서 말보다는 체현된 몸으로 증언하는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다. 군 위안부 증언이 지배적인 성 규범에 의해 억압되었다면 4.3증언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측면이 많았다. 4.3 다큐멘터리 중에서 “무명천 할머니”는 몸으로서의 증언을 잘 말해주는 사례에 속한다.

### 3. 기념물: 기억의 영속화

1980년대 이후 기억투쟁에서 두드러진 것은 각종 형태의 기념물 조성을 포함한 기념사업이었다. 기념물 조성은 과거에도 늘 있었지만, 민주화운동이나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세워진 기념물은 대항 이데올로기의 집합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달랐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누가, 무엇을” 표현하는가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어떻게”가 더욱 더 중요

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김민환, 2003).

집단적 기억은 의례나 기념물로 물질화되어 존재한다. 집단적 기억이 기념물화되는 경우 기억 드러내기는 증언과는 다른 영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가지게 된다. 기념탑이나 그 밖의 기념공간의 조상은 증언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 기념물의 역사성

기념물은 그것이 조성될 때는 조성주체의 집합적 기억을 표현하고 영속화하려는 욕망을 가진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성을 지닌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역사적 기억의 정치학, 즉 특정 경험이 어떻게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상화되었는가를 논의할 때 가장 좋은 사례는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이다. 이에 관해서는 박명규의 연구(1997)와 이진영의 연구(2001)가 있다. 박명규(1997)는 농민항쟁 기념비의 역사를, 1910년 이전의 유교적 충절론의 상징화, 식민지기의 민족적 역사인식의 성장과 기념의 부재, 해방후 1960년까지의 분단체제적 규정력,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혁명의 상징성의 정치적 이용과 근대화론, 1987년 이후의 민중의식, 지방의식의 확대와 역사의 대중화로 요약하였다.

이진영(2001)은 농민혁명에 대한 100년간의 인식 변화과정을 시기, 주제, 주체, 분야, 용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1895년에서 1950년대까지의 ‘시련과 모색’, 1960년대를 ‘자각과 왜곡’, 1970년대를 ‘현재적 의미의 거세’, 1980년대를 ‘박제화와 저항’, 1990년대를 ‘100년만의 회생’으로 요약했다.

식민지시기에는 동학농민혁명이 반일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이 표출되기 쉽지 않았다. 재미있는 것은 식민지시기에 일제는 무조건 동학혁명 담론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진영은 “농민혁명을 불러온 조선의 모순과 부패상을 부각시켜 식민통치를 미화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연구자들이 농민혁명의 반외세성을 강조하는 것은 철저히 통제했지만, ‘혁신성’을 드러내는 것은 묵인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현상은 해방이후, 전기 군부정권, 후기 군부정권에 의해 반복되어 왔다. 농민혁명의 혁명이미지를 군사정권이 계속 이용하려고 했고, 이것이 외형적인 기념물 조성으로 나타났다. 이진영은 1990년대의 동학농민혁명의 인식의 변화를, 첫째 기념 주체의 대중화, 둘째 농민혁명 기념의 전국화, 셋째 기념방식의 다양화, 넷째 농민군 후손들의 자긍심 회복과 명예회복운동, 다섯째 농민혁명에 관한 학술연구의 심화로 요약하였다. 아울러 그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한계를, 첫째 농민군에 대한 공식적인 명예회복<sup>3)</sup> 부진, 둘째, 농민혁명 기념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저조, 셋째 농민혁명의 체계적 기념 부진, 넷째, 체계사적 의미부여 실패 등으로 요약하였다.

이진영이 지적한 1980년대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착종과 변화는 지역사례에서도 발견된다. 그 한 사례가 장흥인데, 이 곳은 농민혁명당시 장녕성 전투와 석대들 전투 등 두 차례의

3) 정부는 ‘국가서훈의 대상이 되는 순국선열의 범위는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쫓겨간 乙未義兵부터’라고 해석하며 서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첫 번째 전투에서 관군들이, 두 번째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지역이다. 장흥에는 장흥부를 지키다가 동학농민군에 의해 죽은 부사 박현양과 수성장졸 96명을 기리기 위하여 관청에서 건립한 사당인 영회당이 있다. 이것은 1898년 설단되었다가 1928년 이간하였다. 영회당은 건립초기부터 수성장졸의 후손을 중심으로 계가 결성되어 제를 봉행하였다. 1960년초까지 군수와 서장등이 제관으로 참여하였다. 영회당에는 ‘광서 20년 갑오동학란 수성장졸 순절비’가 있다. 이 비는 1899년 건립된 것이다.<sup>4)</sup> 농민혁명 직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이 기념물은 이 지역의 과거를 대변해온 셈이다.

1980년대 후반의 변화되고 있던 동학인식에 대하여 ‘영회당’을 따르던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1980년대 말, 필자가 장흥지역의 조사(송기숙 1990)에 참여했을 때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전봉준을 반란의 역도로 인식하면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장군으로 우러르는 것은 전두환이 같은 종씨라고 영웅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불평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둔 1990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평가의 물결은 장흥에도 다가왔고, 농민군을 기리는 기념탑을 장흥군 번영회가 중심이 된 기념탑 건립위원회에서 1992년에 세웠다. 결국 장흥에는 농민군에 대한 기념탑과 이에 맞선 관군 추모기념물이 동시에 병존하게 된 것이다. 영회당이 장흥읍 주민을 대표한 수성장졸 후예들의 오래된 공동체적 기억의 표지라면, 1992년 세워진 기념탑은 장흥군민의 공동체적 기억의 표지이다. 공동체적 정체성의 교체는 단절적이라기보다는 중첩적이었다.

기념비는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이지만, 그 표현은 매우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다. 우리는 기억 재현의 전략을 소안도의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의 사례(정근식 1995)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기념탑은 집합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이 어떻게 정치적 기회에 의해 좌우되는가 뿐 아니라 분단체제라는 정치적 지형이 그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식민지기의 항일 민족운동과 해방 직후의 자주국가수립운동은 연속성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 지역에서 주민들은 매우 동질적인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고, 기념탑을 세우려는 공동체적 의지는 해방 직후부터 형성되었지만, 권위주의적 군부정권 아래서는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기념탑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주민들의 자원동원역량에 의존하면서도 더 뚜렷한 것은 그것이 정치적 기회구조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민주화의 고양기에 기념탑건립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이들에게는 항일민족운동의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해방후의 국면에서 좌파로 몰렸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일생의 전반부만 드러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결국 기념탑은 식민지기와 해방국면기를 단절하여 전자 중심으로 기록함으로써, ‘항일’ 기념탑이 되었다.

역사적 경험의 연속성과 불가분성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억으로의 표출은 집단적 경험을 분절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집합적 기억의 표상화에서의 비대칭성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전쟁기 기억의 표상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전쟁기 경험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이른바 좌우파 양쪽으로부터의 테러와 희생을

4) 이들은 청주의 慕忠祠, 장성의 李學承 殉義碑, 남원의 朴鳳陽 甲午討匪 事蹟碑, 나주의 討平碑, 청주의 甲午戰亡將卒 紀念碑, 금산의 鄭肅朝 殉義碑, 鄭志煥 殉義碑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반란의 무리로, 이에 맞선 관군을 충절의 무리로 표현한 봉건적 기념물이다.

포함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분단체제는 국가폭력이나 우익테러에 의한 희생은 추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좌익테러에 의한 희생은 일찍, 국가적 지원에 의해 표현되었다.

집단적 기억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겉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지만, 때때로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드러낼 수 없는 기억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거나 잠복해 있다. 다시 말하면 집단적 기억이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4.3의 기억이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의례, 특히 원혼을 불러내 진무하는 곳의 방식으로 끈질기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죽음의례는 초월성을 지니며, 이 초월성에 의존하여 기억이 희미하게 유지된다. 민속의례나 종교적 외피는 이런 반체제적, 반국가적 기억의 보호막으로 기능해왔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집합적 기억을 다룰 때,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것간의 긴장을 포착해야 할 과제를 안겨준다. 영암 구림의 사례(정근식 외 2003)를 빌린다면, 이런 표현된 것과 표현하지 않은 것 이외에 표현되었다가 사라진 것과 표현되어 그대로 보존된 것의 역동적 관계도 존재한다. 결국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집합적 기억의 기념물(기념탑) 드러내기의 지평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드러낸 것과 드러내지 못한 것, 지워버린 것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의 긴장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기념의 정치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 형상화된 기억의 미학

근래에 집합적 기억의 표상화는 표상화의 여부가 쟁점이었던 상황에서 표상화의 방식, 특히 미학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념물은 많은 경우, ‘기념탑’ 중심주의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박명규, 1997), 과거에는 소규모의 기념비 중심이었다면, 점차 규모가 큰 기념탑 방식으로 옮겨 갔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보면, 불교나 유교등의 기념비와 탑의 문화에 친숙하고, 동시에 동원가능한 경제적 자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근래에 탑과 함께 다른 학습의 장을 겸비한 기념관이나 기념공원의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기념은 점차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자원으로 재해석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의례와 참배의 공간으로부터 학습과 문화의 장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기념프로젝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개입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념탑보다 더 큰 규모의 기념공원의 조성은 비록 공동체의 주도에 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종의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충분한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형성된 지역활성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의 기념공간은 지역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념물이나 기념공간의 조성원리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형성되었다.

추념공간의 이념형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사실상 1993년 광주에서 ‘5월 성역화’논의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1997년 광주의 망월동 묘지에서 5.18묘지의 이전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운동의 공간, 추념의 공간으로부터 의례의 공간으로, 또는 민중적 의례의 공간으로부터 국가적 의례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기념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2000년 4.3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4.3 복원운동의 핵심사업으로 평화공원 조성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 4.3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2001)을 작성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한국사회에서의 기념사업 및 기념공간조성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인데, 왜냐하면 국내외 주요 기념물 및 기념공원에 대한 상당히 치밀한 답사와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계획 작성 팀은 광주 5.18의 기념물 조성방식과 기념물의 공간적 특징과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무엇을 뛰어 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것은 중앙의 거대한 기념탑과 좌우 대칭형 공간구성, 제단과 추모공간의 위계적 배치였다. 이런 점 외에도 묘지의 표준화와 획일화에 따른 산 자와 죽은 자간의 의사소통의 장의 제거, 묘지조성과정에서의 민주열사와 5월열사의 분리 등도 자주 지적되었다. 민주화운동의 기념공간들, 즉 4.19 묘지나 부마항쟁 기념공원, 그리고 5.18 광주항쟁의 기념공간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정호기의 연구(2002)에 따르면, 비록 이들이 국가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기념공간이지만, 권위주의 시기에 자리잡은 국가주의적 기념공간의 구성원리, 즉 국립 현충원 모델이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집합적 기억의 표상화의 방식에서 건축의 양식의 문제는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 대체로 그것은 전통주의나 근대주의의 경향을 지니거나 이들의 혼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5.18 묘지의 경우 기념탑의 모더니즘이 여러 부속 건물의 전통주의와 어울려 ‘광주’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은 예컨대 그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념 프로젝트에 또 다른 권위주의나 과도한 민족주의, 또는 남성주의의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기에 집단적 기억의 표상화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남성주의, 거대주의의 경향에 지배당하기 쉽다면, 근래의 비판의 준거들은 자연친화적 환경주의, 여성주의, 반국가(민족)주의적 경향을 지니게 된다.

4.3의 경우 기념물, 또는 기념공원 조성을 둘러싼 기억투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002년에 이루어진 평화공원 조성안 공모 심사에서 제시된 작품들은 5.18 묘지가 안고 있던 거대형 중앙 단일탑 구조를 극복하고 있으나 당선작은 기념탑이 반원형 기념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 공간구성의 원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선작과 낙선작의 가장 큰 차이는 추념공간의 직방형적-위계적 구성과 원형적-민주적 구성, 위령제단의 전방 배치와 쌍방향적 배치(원심과 구심의 동시적 존재), 공간의 일원화와 이원화, 상징물의 모던적 구성과 포스트모던적 구성(실루엣 기법), 기념물의 현재완료형과 진행형(백비) 구성 등에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정신에 상대적으로 더 충실했던, 탐미협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평화공원 구상안은 공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스스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하여 ‘상상공원’이라고 이름붙인 구상(민예총 제주지회 2002)은, 기존의 기념물 조형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매우 인상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여기에서 제시된 거멸창을 소재로 한 ‘빛의 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구상은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고 평가된다.<sup>5)</sup>

#### 4. 맺음말

지금까지 검토했듯이 우리는 1980-90년대의 과거청산운동에서 생산했던 각종 문화적 산물들이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증언과 기념물 조성이 단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귀한 개인적 삶과 역사의 드러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에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례나 기념물 조성의 경우, 관습화된 취향, 박제화는 혐오의 상징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의례의 경우, 다양한 원초적 사건들의 경험을 구체적 기억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상징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부마항쟁이나 5.18, 4.3기념행사 등 의례가 주기성을 갖는 경우, 기념에서 나타나는 매너리즘을 정확히 지적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매너리즘적 기념이다. 어떤 방식이건 밑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억제하는 방식의 기념은, 그것이 전국화로 표현되든, 세계화로 표현되든 관계없이 제대로 된 역사적 계승을 방해한다. 평화공원조성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던 권위주의적 미학 또한 극복의 대상이 된다.

이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가 채택된 상황에서 아마도 제주도에 가장 많이 논의될 사안은 4.3의 전국화, 세계화 명제일 것이다. 상황은 약간 달랐지만, 광주의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국화와 세계화가 한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서로 배치되는 힘이 작용하는 문제라는 것, 그리고 전국화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6)</sup>

오늘날 민주화운동이나 민족운동의 전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양식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단지 정치문화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산업화되기도 한다. 생태, 환경운동이 친환경적 생산이나 소비생활의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환경이나 생태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산업의 성격도 갖게 되듯이 일종의 역사유산산업도 성립가능하다. 기존의 역사유산산업이 주로 문화재에 기초하고 있다면, 근래에 ‘평화운동’은 삶의 방식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일종의 역사유산산업으로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상의 제약으로 지난 민주화운동 기간에 이루어진 증언프로젝트와 기념사업을 충실하

5) 어쩌면 이런 구상은 ‘빛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작품일지도 모른다.

6) ‘광주의 전국화’명제는 보상이나 기념사업이 봉쇄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라 보다 큰 정치적 과제의 실현이 막혀 있거나 하위의 범주들이 상위의 과제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쟁점화되었다. 여기서의 전국화 모델은 현재적 운동전선에서의 쟁점을 주도해가는 ‘운동형 전국화’, 5.18 기념의례의 전국적 거행을 지향하는 ‘의례형 전국화’, 그리고 외부인들의 광주방문을 중심으로 한 ‘운동산업형, 기념사업형 전국화’였다. 이런 광주의 전국화론이 이른바 지역간 균열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광주의 세계화를 통한 우회전략이라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 특히 광주특별법 제정과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이후 동남아시아나 남미의 유사한 경험을 가진 나라들에게 광주모델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게 분석하지 못하였고, 특히 지난 20년간에 형성된 민중적 기념의례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쓰는 역사』, 풀빛, 2001.
- 강창일, 「제주 4.3진상규명운동과 한국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창간호, 전남대 5.18 연구소, 2001.
- 김민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문화과학사, 2003.
- 김선경, 「농민전쟁100년, 인식의 흐름」, 『농민전쟁100년의 인식과 쟁점』, 거름, 1994.
- 김영범, 「집합기억의 사회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김종민, 「4-3이후 50년」,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나간채-염미경-김혜선, 『기억에서 영상으로』, 광주 YMCA 5.18 영상기록특별위원회, 1999.
- 나간채-이명규 편, 『5.18항쟁 증언자료집』 1, 전남대 출판부, 2003.
-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51, 1997.
- 송기숙-박맹수, 『장흥동학농민운동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2.
- 송기숙, 「장흥지역 동학농민운동관계 구전조사」, 『역사와 현장』 1, 남풍, 1990.
- 양현아, 「과거청산과 증언의 의미-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폭력의 역사는 청산될 수 있는가』, 제주4.3연구소, 2001.
- 유철인,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1996.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1994.
- 이문교 외, 『제주 4.3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2001.
- 이진영,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연구』 9-10호, 2001.9 한국동학학회.
- 정근식 외, 『구림연구』, 경인문화사, 2003.
- 정근식, 「집단적 역사경험과 그 재생의 지평- 소안도 항일기념탑의 사회사」,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7, 1995.
- 정근식, 「과거청산의 역사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역사』 61, 2002.
-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4.3 평화공원 현상설계공모를 분석한다」, 『제주문화

- 예술』 2002년 가을호.
-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나남출판, 1998.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3, 한울, 1993, 1997, 1999.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 Bell, C.,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Duncan, J. and Ley, D. eds., *place/culture/representation*, Routledge, 1993.
- Gills, J.R., *Commemorations-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Kertzer, D.I., *Ritual Politics, and Power*, Yale University Press, 1988.
- Schwartz, B.,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of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2.
- Thomson, P., *The Voice of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Winter, J.,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집

1. 제주 4·3의 기억과 망각

(1) 문제제기

사회적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를 과거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간주한다. 역사도 기억처럼 과거의 수많은 사건 중 일부만이 선택되고, 해석되고 또 왜곡된 결과이기 때문이다(Burke, 1989; Popular Memory Group, 1982). 역사는 서구식 시간관념, 과학적 방법 등에 기초한 과거의 정리 방식이라면 기억은 보통사람이 ‘기억할 만한’ 과거만을 선택하고 변형시켜온 것이다.

역사가 과거를 이해하는 정리방식의 하나로 본다면, 역사로 선택되지 않은 사회내의 다양한 기억들은 과거를 보다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기억 형성과 내용들은 공식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거의 단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과거가 현재까지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 그 현재성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기억은 일상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기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고방식, 문화적 가치, 사회적 맥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억의 사회성에 주목하여 제주 4·3사건과 그 이후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제주주민의 기억을 통하여 제주 4·3사건이 오늘날까지 제주도라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유통되어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주주민들이 이 역사적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해 내고 있고, 사회집단에 따라 어떻게 기억이 나누어지며, 또한 세대간에 그 기억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제주 4·3사건은 사건발생 이후 40여 년 동안 국가가 기억의 공개를 억압해 온 소위 ‘조용한 사건’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다.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사회나 사건 전체에 대한 기억보다 사적인 기억을 더욱 발달시킨다고 한다(Marques, Paez, and Serra, 1997). 더구나 대량학살 등 감정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되새기고(rumination),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social sharing process)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Paez, Basabe, and Gonzalez, 1997: 151). 그렇다면 연좌제, 보안법 실시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적 억압과 제주도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어떻게 기억이 형성되고 전달되었을까? 그리고 이 기억들이 국가가 기억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4·3사건의 진상이 보고되고, 문학, 다큐멘터리, 연극, 마당극, 미술 등을 통해 재현된 4·3사건을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기억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제주주민들이 사건을 기억해 내는 방식과, 집단간의 기억 차이, 세대간 기억 변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여기서 기억방식이란 역사가처럼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경험담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또는 의견이나 평가로 정리하고 있는지 등 일종의 과거 정리방식을 의미한다. 기억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억방식도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집단의 문화적 배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Iniguez, Valencia, and Bazquez, 1997). 기억방식에 대한 관심은 이니구에즈 등(Iniguez, Valencia, and Bazquez, 1997)의 글에서 영향을 받아 제주 4·3사건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억 방식이나 기억 내용이 사회집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분석하고, 세대간 변화와 그 이유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 글의 연구 대상자는 제주 4·3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제주주민들이다. 이 글의 관심이 제주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역사적 사건을 후손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오늘날까지의 기억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제까지 제주 4·3 연구는 주로 진상규명에 주력해 오면서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왔다. 사건이후 오랜기간 국가가 사건자체에 대해 침묵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존자의 구술을 듣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생존자 외의 제주주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생존자 또는 사건 당세대(1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되새기고 해석하고 있는지 4·3사건의 현재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4·3사건은 오늘날까지 제주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남아있고, 이미 생존자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제주주민이 이 문제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기억은 고정된 역사적 순간에 대한 재발견이 아니라 사건이후 사회생활을 통해 다시 내린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다(Iniguez et al, 1997: 238).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의 기억은 그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체험자 등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 제사의례, 신문기사, 문학작품 등을 통하여 제주 4·3사건을 이해하고 정리한 결과일 것이다. 그들의 기억은 그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정의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 역사화 과정을, 즉 제주 4·3사건의 과거와 현재와의 연결을 보여줄 것이다.

## (2) 연구방법

이 글의 연구 대상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제주가 고향인 제주출신들로서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그리고 제주주민 중 사건 체험자 세대(1세대)를 제외한 4·3사건 2세대와 3세대가 대상자이다. 2세대와 3세대의 규정은 세대간의 기억 차이를 보기 위한 연구자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구분된 것이다. 2세대는 체험자 세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나이 집단으로, 그리고 3세대는 증손이 될 수 있는 나이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인구학적인 정확한 세대구분보다 기억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에 4·3사건의 공개 토론이 가능한 시기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즉 4·3사건 2세대란 4·3사건에 대한 공개토론이 금지되었던 시절에 그들의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를 보낸 세대이다. 반면 3세대란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를 공공기관, 매스미디어 등에서 사건이 자유롭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 세대이다. 이 기준에 의해 2세대를 1949년 출생이후 1967년 출생한 주민까지, 그리고 3세대를 1974년 출생이후 1984년 출생한 주민까지로 규정했다. 조사시점인 2001년 5-7월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나이 집단이 각각 35-52세, 18-27세에 이른다.

4·3사건 2세대의 표본선정은 이 나이집단에 해당되는 제주주민을 제주 전지역에서 조사자가 편의방법으로 추출했다. 3세대는 제주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했다. 교양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담당 교수의 지도에 따라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시기는 2001년 5-7월이며, 수거된 조사지 중 이 나이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불충실하게 답변된 조사지는 제외했다. 그 결과 2세대 표본 수는 114명(남 53명, 여 61명)이고, 대학생 수는 226명(남 90명, 여 136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제주 4·3에 대한 기억방식을 알기 위해 이니구에즈 등이 던진 같은 방식의

질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즉 “제주 4·3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4·3사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개방식 질문을 이용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2세대 면접을 담당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사대상자가 구술하는 대로 기록했다. 조사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 적어도 5줄 이상 기록해 줄 것을 담당과목 교수를 통하여 당부했다. 그리고 세대간 기억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윗세대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웃과의 대화 내용, 사건원인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 무장대원과 토벌대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기타 나이, 출신마을, 성별 등 기본사항도 포함시켰다.

## 2. 이론 및 기존연구

이 글에서는 기존의 정의대로 역사를 역사가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과거라고 정의하고, 기억은 현재와의 관련 하에 과거에 대한 다양한 재인식 과정으로 정의한다(Popular Memory Group, 1982). 역사는 서구 학문의 하나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가치중립적이고, 기억은 과거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등 감정이나 느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역사는 과거의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만 기억은 사건이후 반복되는 회고 과정이나 사회적인 통화 과정에 의하여 시점이 유동적인 것이다. 또한 역사는 사건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서 그 원인, 과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만 기억은 사회적 집단에 따라 기억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Alonso, 1998; Halbwachs, 1980).

기억의 사회성은 할바허(Halbwachs)의 이론에서 거론되었다. 할바허에 의하면 사회집단에 따라 기억의 내용이나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1980). 국가 등 사회집단은 과거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세계관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집단 성원간의 교류를 통해 세상에 대한 관점, 시각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기억하는 방식까지 공유해 간다. 과거를 회고하는 인식 과정까지 영향을 주므로 개인의 기억도 사회적인 것이다(Fentress and Wickham, 1992). 즉 사회집단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따른 관념이 다르고 문화적 틀이 다르므로 집단의 성향이 기억의 형성, 보존, 회고 등의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바허의 이러한 가설은 최근 여러 글에서 검증되고 있다. 세대간의 기억의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슈만 등(Schman, Belli and Bischooping, 1997)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호로코우스트, 워트게이트, 독일 통일 등)에 대해 나이, 교육, 성, 인종에 따라 얼마나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나이에 따른 차이가 가장 심했고, 교육에 따른 차이는 가장 적었다. 슈만 등은 그 이유로서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억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했다. 좋아하는 음악도 이 시기의 유행과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 성인으로서 주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함께 겪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인생동안 가장 영향력있는 기억으로 각 세대에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세대간에 비교적 유사한 기억의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초기성인기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의견이나 태도가 발달되어 감이 드러났다(Baumeister and Hastings, 1997).

세대 외에 성(gender)에 따른 기억의 차이도 밝혀졌다. 남성들이 특정 부분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거나 공적 영역에 대한 과거를 여성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전쟁에 대한 기억을 보면, 남성들은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여성들은 전쟁의 주변부나 일상생활에서의 과거를 더 많이 회고하고 있다(Fentress and

Wickham, 1992: 140-141). 제주 4·3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기억도 가족이나 사건이후의 고통에 대해 남성보다 더 집중적이었다(권귀숙, 2001).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충남 한 마을의 할머니들도 사회전반적인 관심보다 ‘가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 경험을 더 많이 회고하고 있었다(윤택림, 2001).

기타 농민, 노동자, 상류층 등 계급에 따라서도 서로 강조하는 기억이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지역 현실과 부합되는 지배층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며, 노동자 계급은 영웅적인 스트라이크 투쟁 등 정치적인 측면의 기억들을 공동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Fentress and Wickham, 1992). 또한 영국 대처 전 수상의 사직에 관한 집단간의 비교 연구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상류층이 가장 강렬하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Gaskell and Wright, 1997).

또한 사건 당시의 신분에 따라 50여 년 전의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도 한다. 권귀숙(2001)은 제주 4·3사건 당시 군인, 무장대원, 일반주민 등 당시의 신분에 따라 강조하거나 억압하는 기억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기억들이 공식역사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음도 밝혀졌다.

기억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역사가와 보통사람들이 다른 조선인 군위안부의 증언집인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2001)에서 잘 보여준다. 그들은 역사가의 관심과 달리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을 구술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연상작용에 의하여 과거를 되살리고 있다. 즉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억하는 방식, “기억 지도”(2001: 20)에 의하여 기억을 형성하고 보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가의 분석 기준에 맞는 기억만 채택되어 남게된다. 증언에 의존한 역사인 경우에도 서로 다른 기억 중 한 기억만이 공식역사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었다(이정주, 2000).

보통사람들의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앞서 소개한 이니구에즈 등(1997)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페인 내전에 대한 질문에서 대학생의 응답은 여섯 종류로 나뉘어 졌다. 응답자들은 스페인 내전을 사건 순서대로 설명하거나(연대기인, *chroniclers*), 날짜 등 정확한 자료에 의해 정부의 인계 과정을 설명하거나(객관인, *objectivists*), 이념에 의한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하거나(적대자, *antagonists*), 갈등의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비이념자, *deideologizers*), 두 집단의 대립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거나(대립인, *polarizers*), 사료를 연대순으로 보여주는(문헌역사가, *philohistorians*) 등으로 같은 사건을 다르게 역사화하고 있었다. 이니구에즈 등은 이러한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가 할바허가 주장하는 집단간 기억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전원이 같은 대학교의 심리학과 학생들이므로 정확하게 집단의 성격의 차이를 설명해 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기억 이론 및 기존연구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보통사람들의 기억방식이 역사의 정리방식과 다를 수 있고, 사회집단간 서로 다른 기억을 저장하고 있으며, 또 같은 사건을 기억해 내는 방식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억 내용과 기억하는 방식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인 데, 이는 각 사회적 집단이 겪는 문화적 세계가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억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의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환경이 기억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제주주민의 기억방식

역사가가 아닌 보통 제주주민이 제주 4·3사건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50여 년

동안 이 사건이 주민들간에 회자되어 오고, 의례 등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 오면서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제주주민들도 나름대로 4·3사건을 정의하고 있을 것이다. 먼저 4·3사건 2세대와 3세대의 구별 이전에 제주도라는 공동체, 또는 집단이 어떻게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지, 그들의 다양한 서사(narratives)를 살펴보고 싶다. 그들이 어떻게 4·3을 기억해 내고 있고, 사회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을 맞추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제주주민의 4·3사건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고, 다음 장에서 사회집단에 의한 기억의 차이를 분석해 볼 것이다. 기억하는 방식이란 과거를 기억해 내는 일종의 정리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4·3사건을 연대기로 기억하는지, 아니면 원인, 결과 등 사건 분석 방법으로 기억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앞 장,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 4·3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설문지 질문에 제주주민은 다양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다양한 기억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네구에즈 등의 연구 대상이었던 스페인 학생들의 경우와는 전반적으로 다른 방식의 기억 틀을 갖고 있었다. 스페인과 제주라는 문화적 공간과 시간 개념의 차이, 정치환경의 차이 등이 기억해 내는 인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주주민의 기억방식은 제주도라는 공동체의 경험, 지역주민의 사고방식,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유통과정 등이 만들어 낸 산물일 것이다.

설문지 조사의 또 다른 결과는 제주주민들의 기억방식이 역사가들의 기억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4·3사건을 정의하는 여러 응답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역사가의 관심처럼 정확한 날짜, 장소, 객관적 자료, 원인이나 과정, 결과 분석 등으로 제주 4·3을 설명하지 않았다. 역사가처럼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가 부족하기보다는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기억방식은 진상조사의 결과나 공식역사보다 사회적 분위기, 4·3 담론 등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

2세대와 3세대를 포함하는 제주주민의 4·3사건에 대한 기억방식은 의견형, 원인분석형, 사례형, 가해피해론, 희생론, 역사평가형, 과정형, 이념·대립형으로 나뉘었다.<sup>7)</sup> 각 유형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의견형

여기서 의견형 또는 의견제시형 집단은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진상 규명’이나 ‘피해보상 요구’ 등의 의견만이 제시된 경우를 분류한 것이다. 보기를 들면, “하루 빨리 정확한 진상과악이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이 빨리 이루어지고, 피해보상도 따라야 한다”, “4·3이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4·3사건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모른척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4·3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한다. 정확한 진상과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하루 빨리 정확한 진상과악이 되어야 한다” 등이다.

#### b. 역사평가형

이 응답 집단 역시 사건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사건 자체를 응답자의 역사적

7) 이 분류방법은 이니구에즈 등의 글에서 영향을 받아 시도해 본 것이나 제주주민의 응답은 이니구에즈 등이 분류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저자가 제주주민의 응답을 치밀하게 정독하여 아래와 같은 기억방식들로 분류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응답이 두 방식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원인을 먼저 기술하고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첨가된 경우, 원인분석형으로 분류했다.

인 시각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비극”, “한 민족의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건”, “정당한 항쟁” 등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니구에즈 등이 분류한 ‘대립인’ 집단과 가장 유사하다.

#### c. 사례형

사례형은 부모, 선생님 등 타인으로부터 들었던 특정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4·3을 설명한 경우이다. 보기를 들면, “폭도들은 야밤에 내려와서 주민들 집에 들어가서 식량들을 마구 가져가고...”,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에...”, “자식들을 데리고 바다 곁에 사는 사람은 바다 밑으로 가서 숨기도 했다고 한다”, “도두 국민학교 큰 밭에서 한 100여명을 죽였다” 등 사건의 일부를 4·3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집단이다.

#### d. 가해피해론

가해피해론 집단은 응답자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경우를 분류한 것이다. 사례형 집단과 달리 사건 전체에서 ‘누가 가해자인가’ 하는 질문으로 4·3을 기억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사건의 배경, 원인, 과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군인이나 경찰에 의하여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제주도민들은 이유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다”, “폭도들 때문에(때문에) 경해수다(그렇게 되었습니다)...”, “4·3은 미군이 제주도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 등 가해자는 다르지만 가해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4·3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 e. 희생론

희생론 집단이 응답자 중 가장 짧게 대답한 집단으로 대부분 “잘 모르겠지만” 등으로 시작하여 ‘제주도민 희생’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다. 제주도민의 억울한 희생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따른 감정으로 4·3을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4·3사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다만 아는 건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제주도민이 아무런 잘못없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뿐이다”, “그냥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 f. 원인분석형

원인분석형은 사건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4·3을 설명한 집단이다. 역사가의 원칙과 가장 근접하게 기억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물론 4·3사건의 원인은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분석되고 있지만 원인을 중심으로 4·3을 기억하는 방식은 같다. “몇몇 의식화된 세력과 여기에 협조 및 동조한 지역주민들의 폭동에 의한 무차별 양민학살과 식량착취, 가옥방화 등... 폭동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및 군인들이 무고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무고한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세웠고 대학살을 자행했다” 등이 그것이다. 이니구에즈 등이 분류한 ‘객관인’ 집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g. 과정형

이 유형의 집단은 특정 중요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진행 과정으로 4·3을 이해하고 있다. 이니구에즈 등이 명명한 ‘연대인’ 집단과 비슷하나 정확한 연대를 언급하지 않고 사건의 진행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이다. 주로 해방 직후 상황,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



포, 총파업 사건, 5·10 단선 거부, 무장, 주민 피신 등 중요 사건의 진행 과정 순으로 4·3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4·3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은 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였다. 이 행사는 관덕정에서 일어났고... 이 일로 3월 15일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미군정의 횡포가 심하게 되었고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은 5·10 단선을 거부하고 무장하여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대항했다... 피해상황과 4·3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인데, 대부분은 간단하게 이 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했다.

#### h. 이념·대립형

이념·대립형은 사건을 이념간에 또는 두 대립된 세력간의 다툼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집단은 좌익우익의 대립, 정부와 빨갱이의 대립, 또는 미소남북의 대립 등으로 4·3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니구에즈 등의 ‘적대자’ 집단과 유사하다. “군인과 공비들의 싸움에서 민간인이 당한거죠”,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부, 군, 경찰과 폭도들간의 대립에서 선량하게 사는 도민들이 희생되었다”, “좌익, 우익에다가 경찰과 군인과 청년당, 남로당 등과 견제에서 다치는 것 당연히 서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 희생의 원인을 이념이나 두 집단간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인에 관심을 두는 점에서 원인분석형 집단과 기억하는 방식이 유사하나 대립적인 설정으로 4·3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주주민의 기억방식은 다양하나 역사가의 설명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주민들은 객관성, 가치중립적인 관점하에 사건을 전체로 보고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일부나 경험, 사건에 대한 논평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인분석형’이나 ‘과정형’ 집단이 역사가의 접근방식과 그중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언어(예, 빨갱이)나 증빙 방법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여러 기억방식은 있지만 이러한 제주주민들의 기억유형은 공식역사나 진상규명조사 보고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 4·3 시각들, 사건의 사회적 유통과정 등을 반영하고 있다. 스페인 학생들의 기억방식에서 볼 수 없었던 ‘의견형’, ‘역사평가형’이라는 유형은 1980년 후반 민주화이후 오늘날까지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되풀이되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피해론’처럼 ‘가해자가 누구인가’로 4·3을 설명하는 방식도 그동안 논쟁되어 왔던 4·3의 시각들을 반영하고 있다. ‘희생론’이나 ‘사태형’도 사건이 오늘날까지 사회적으로 전달되어 온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제주 문화권에서 서로 다르게 기억해 내는 그 차이는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다음 장에서 응답자의 응답 분류 분포도를 살펴보면서 이 의문을 더 다루어 보고자 한다.

#### 4. 세대, 성과 기억방식

제주주민이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은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여덟 집단으로 분류된다. 스페인 학생이나 기타 다른 집단과 달리 제주주민의 고유한 기억방식은 제주주민의 집단기억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은 제주도 안에서 문화적 세계가 다른 여러 사회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이론에 의하면 세대 또는 나이, 성별, 계급,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해 기억의 내용이나 기억유형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주민의 다양한 기억방식은 어떠한 집단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가?

4·3사건을 다르게 정의하는 제주도내의 여러 사회집단을 밝혀내기 이전에 먼저 응답의 여러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도표로 요약된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총 응답자 수는 213명이며 그 중 중장년층(4·3사건 2세대)은 92명, 젊은층(4·3사건 3세대)은 121명이다. 설문지 응답자 중(총 340명, 2세대 114명, 3세대 226명) 무응답과 ‘모른다’는 대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그 이후의 결과이다.

제주주민의 4·3에 대한 기억방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원인분석형(23.9%)이며, 그 다음이 의견형(23.0%)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론과 희생론은 모두 12.2%의 비율을 보여준다. 기타 사례론(7.5%), 역사평가형(7.5%), 이념·대립형(8.5%), 과정형(5.2%)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2세대 또는 중장년층만 보면, 의견형이 가장 많고(26.1%), 원인분석형(21.7%), 가해피해론(17.4%), 사례론(13.0%), 희생론(12.0%)이 그 다음 순이다. 이념·대립형(6.5%), 역사평가형(3.3%)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3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과정형 응답은 전혀 없다. 반면 3세대 또는 대학생의 경우, 원인분석형(25.6%), 의견형(20.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희생형(12.4%), 이념·대립형(9.9%), 과정형(9.1%), 가해피해론(8.3%)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례형은 3.3%에 불과하다. 중장년층의 분포도와 비교할 때, 대학생 경우, 사례론, 가해피해론의 유형이 적고, 과정형이라는 유형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1) 세대 변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장년층과 대학생의 설명방식의 분포가 다르다. 기존 이론이나 연구처럼 여기에서도 청소년기나 초기성인기의 경험이 기억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년층은 4·3 토론이 억압된 상황에서 초기성인기를 보냈고, 대학생은 토론이 자유스러운 시기에 보내고 있다. 기타 세대간에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나 경제적 변화를 겪어왔다.

표 1. 제주주민의 기억유형 분포도

	2세대	%	3세대	%	합	%
의견형	24	26.1	25	20.7	49	23.0
가해피해론	16	17.4	10	8.3	26	12.2
원인분석형	20	21.7	31	25.6	51	23.9
사례론	12	13.0	4	3.3	16	7.5
역사평가형	3	3.3	13	10.7	16	7.5
희생론	11	12.0	15	12.4	26	12.2
이념·대립형	6	6.5	12	9.9	18	8.5
과정형	0	0	11	9.1	11	5.2
합계	92	100.0	121	100.0	213	100.0

세대와 기억방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히 보기 위해 통계적 검증 방법을 이용해 보려고 한다. 먼저 통계상 상관관계 검증에 필요한 셀(cell) 수를 확보하기 위해 앞서 나눈 기억방식을 유사한 기억방식끼리 재분류해 보았다. 의견형과 역사평가형은 사건에 대한 의견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서 ‘의견중심’으로, 가해피해론, 희생론, 사례론은 사건의 일부 사

실 또는 경험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서 ‘경험중심’으로, 원인분석형, 과정형, 이념·대립형은 사건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분석중심’으로 나뉘어 상관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표 2. 세대별 기억방식

		세대		
		2세대	3세대	전체
의견중심	빈도	27	38	65
	%	29.3%	31.4%	30.5%
기억방식 사건중심	빈도	26	54	80
	%	28.3%	44.6%	37.6%
경험중심	빈도	39	29	68
	%	42.4%	24.0%	31.9%
전체	빈도	92	121	213
	%	100.0%	100.0%	100.0%

( $\chi^2=9.357$ ,  $df=2$ ,  $p < 0.01$ )

표 2에서 드러나듯이 세대 차이가 기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8)</sup> 중장년층(2세대)이 ‘경험중심’으로 기억하고, 대학생층(3세대)이 ‘분석중심’으로 사건을 기억해 내는 비율이 높다. 초기성인기 때 공개적 토론이 금지되었던 현재의 중장년층은 주로 부모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부분적인 경험담이나 사건의 일부를 들어 왔으므로 제주 4·3을 특정 사례나 가해자의 정체성, 또는 결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억압된 상황에서 전달된 과거는 사적인 내용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기존 가설이 여기에서도 증명된 셈이다. 반면 응답한 대학생들은 문헌, 매스미디어, 각종 기념행사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4·3사건을 전달받을 수 있었으므로 사건 전체, 즉 사건의 원인, 과정, 대립집단 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간 차이가 기억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해 줄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의 사회적 경험이 기억 형성이나 보존, 회고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경험의 차이는 중장년층에서 볼 수 없었던 ‘과정형’이 대학생에게 드러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11명일뿐이지만, 대학생들은 4·3사건을 시대별로 중요한 사건을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4·3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은 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였다. 이 행사는 관덕정에서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 3월 15일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미군정의 횡포가 심하게 되었고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이에 대해 제주도민은 5·10 단선을 거부하고 무장하여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대항했다...” 등 4·3사건 발발 배경부터 탄압, 또는 저항, 희생 과정을 시기별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탄생은 사건 전체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 중장년층(35-52세)만을 35-44세, 45-52세로 나이를 나뉘어 나이집단(대학생(18-27세), 35-44세, 45-52세)과 기억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나이가 여전히 기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chi^2=17.350$ ,  $df=4$ ,  $p < 0.05$ ).

2) 성별 차이

세대 차이 외에 기억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집단으로 성(gender)별로 나눈 집단을 들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기억 형성 과정이 다른 이미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전쟁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의 기억과 남성의 기억이 다르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 4·3사건에 대한 기억방식도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인가? 표 3에서 성별에 따라 응답을 분류해 보았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경험중심’으로 기억해 내는 경향이 있고, 남성들은 경험보다는 ‘분석중심’으로 제주 4·3을 이해하고 있다. 여성이 특정사례 등을 통해 4·3을 설명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남성들이 원인, 과정, 대립집단을 중심으로 4·3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기억유형의 차이는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4·3을 기억해 내고 있는 것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성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대학생의 경우, 성이 기억방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다.<sup>9)</sup>

표 3. 성별 기억방식

		성별			
		여성	남성	전체	
기억방식	의견중심	빈도	34	31	65
		%	30.6%	30.4%	30.5%
	사건중심	빈도	34	46	80
		%	30.6%	45.1%	37.6%
	경험중심	빈도	43	25	68
		%	38.7%	24.5%	31.9%
전체	빈도	111	102	213	
	%	100.0%	100.0%	100.0%	

( $\chi^2=6.334$ ,  $df=2$ ,  $p < 0.05$ )

이처럼 성별에 따른 기억방식의 차이가 주로 2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해준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공적 영역보다 일상생활, 또는 주변의 과거를 더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여성들이 사건 전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경험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성별 외에 기타 응답자의 현재 직업(중장년층), 4·3 사건에 대한 관심도, 사건의 인지 정도, 대화 빈도수, 전공(대학생) 등의 변수와 위의 기억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9)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이 아니라 교육정도가 기억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변수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장년층 여성의 교육정도가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낮은 층이 사례중심으로 사건을 기억해 낸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교육정도와 기억 방식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부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이 기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다.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제주 4·3의 기억 변화 -예비적 고찰

제주주민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기억해 내면서 4·3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고 있다. 또한 세대나 성이 그러한 정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주주민은 여러 방식으로 기억해 내면서 무엇을 4·3사건의 진실로 믿고 있을까? 기억하는 방식은 동일한 경우라도 그 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해피해론’ 집단은 4·3사건을 가해자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같지만 지적하는 가해자는 서로 다르다. 사건의 가해자를 ‘폭도’, ‘토벌대’, ‘이승만 정권’ 등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의 방식만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동일 응답 집단내의 내용도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억 내용을 통해 제주주민이 쓰는 또 다른 4·3을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사건이 2세대, 특히 3세대로 오면서 4·3에 대한 망각이 오히려 심해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억의 망각을 강요받았던 2세대보다 3세대가 오히려 4·3을 망각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중장년층인 2세대의 경우는 응답자 114명 중 22명이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3세대, 대학생의 경우는 응답자 226명 중 무려 105명의 학생들이 “모르겠다”(42명)고 답하거나 전혀 답하지 않았던 것이다(63명). 답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다른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로 추측해 볼 때, 역시 거의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공백으로 남아둔 것으로 확인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대학생이 제주 4·3사건의 기억을 재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2세대의 경우, 사건 직후 기억이 억압되어 온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일부 응답자가 모를 수도 있지만 대학생들은 거의 매일 4·3 소식이 전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의외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과의 개별적인 면담에서도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소수의 학생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등 앞으로는 관심을 갖겠다고 응답했지만, 제주대학교의 게시판에 해마다 게재되는 각종 4·3사건 기념사업 공고(의례, 연극제, 미술전 등), 또는 TV, 지역신문 등에 중요한 뉴스로 자주 부각되는 4·3사건 관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젊은 세대에게 이 사건은 의미있는 과거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즉 대학생 집단에게 있어서 4·3은 ‘기억할 만한’ 사건이거나 중요한 역사로 선택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니구에즈 등이 연구한 스페인 대학생의 응답과 제주도 대학생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도 스페인 학생들은 제주도 대학생보다 낱짜, 사료제시, 대립집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했다. 제주도 대학생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응답을 한 경우에도 사건 자체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는 응답이 1/3을 넘었다(의견형: 20.7%, 역사평가형: 10.7%). 현재 대부분 70대 이상인 4·3 생존자들이 매우 자세하게 4·3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특히 4·3 토론이 억압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 세대들에게 오히려 더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10)</sup>

10) 윗세대로부터의 구술 전달에 관한 응답을 보면 2세대의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비율이 90.3%(114명 중 102명)나 되며, 구술횟수도 한달에 한번 이상이 13.8%, 일년에 서너번 이상이 40.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세대의 경우는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51.6%(226명 중 116명)에 불과하며, 구술횟수도 한달에 한번 이상은 1.8%, 일년에 서너번 이상은 23.5%에 이른다. 그리고 4·3관련 뉴스가 신문이나 TV에 전해질 때 2세대가 3세대보다 더 관심있게 보거나 시청하고 있다. 반면 4·3 관련 문헌 읽기, 비디오 감상, 기념식 참가 등의 비율은 3세대가 2세대보다 더 높

젊은 세대가 제주 4·3사건을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이 사건을 망각하고 싶은 것일까? 세대간 기억 형성에 관한 슈만과 스코트(Schuman and Scott, 1989)에 의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초기성인기의 정치적 환경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집단의 긍정적인 자기이미지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Igartua and Paez, 1997). 현재 대학생들은 감귤산업, 관광산업 등 제주도의 경제부흥과 더불어 긍정적인 제주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50여 년 전의 고통스러운 사건과 제주도의 이미지를 동일시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떤 집단이든지 때로는 집단기만을 통해서 긍정적 기억은 과장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망각하거나 왜곡시키려는 경향이 있다(Blaumeister and Hasting, 1997). 따라서 젊은 세대의 망각 현상은 제주도의 정체성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세대간의 변화는 기억 내용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먼저 ‘역사평가형’ 집단에서 2세대 응답자 3명은 모두 4·3사건을 “비극적 역사”로 평가하고 있지만, 대학생 응답자(16명)들은 “정당한 항쟁”(3명)이나 “대량학살 사건”(1명)으로 새로운 평가를 내리기 시작한다. 사례수가 적으므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가해피해론” 집단에서도 드러난다. 가해자의 정체가 “폭도” 또는 “빨갱이”(6명), “군경”(4명), “폭도와 군경”(3명), “밀고자”(2명), “이승만 정권”(1명) 등으로 2세대는 인지하고 있지만, 3세대는 “이승만 정권”(5명), “폭도”(2명), “폭도와 토벌대”(2명) 등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정 집단보다 정권이 오히려 가해의 주체로 인식해 나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변화는 “원인분석형” 집단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세대는 “이승만 정권의 폭력”(8명), “공산당 폭동과 과잉진압”(4명), “지역주민 불신”(5명) 등으로 4·3의 원인을 설명하나 대학생들은 “정권 폭력”(18명)이나 “저항”(6명)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 사례 수이기는 하지만 동일 기억방식 내에서도 세대간에 다르게 4·3을 이해하고 있고, 일부 대학생들이 새로운 4·3 기억을 만들어 가고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도 4·3사건의 기억 내용은 다르다. 먼저 제주 4·3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비율이 여성, 특히 여자 대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중장년층의 경우는 4·3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여성 응답자 61명 중 9명, 남성 응답자 53명 중 6명으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대학생의 경우는 여대생 응답자 136명 중 무려 70명, 남대생 응답자 90명 중 35명이 된다. 여대생의 절반 이상이 지역 역사가가 꼽고있는 제주도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거의 모르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여대생에게 있어서 4·3은 잊혀져 가고 있는 과거 중 하나로 드러난 것이며, 여성들이 전쟁이나 대량학살 등의 사건을 상대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다.

성별에 따른 기억의 차이는 ‘사례론’ 유형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중장년층의 12명이 ‘사례론’으로 응답했는데, 11명이 여성이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전쟁의 주변,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유사하다. 특히 여성들이 기억하는 경험은 싸움 또는 전투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적인 내용이거나 사건이후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너무 엄청나서 내가 어렸을 때 4·3이후 생활고로 많이 어려웠다”, “폭도들이 산에서 내려온다고 누가 연락해 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숨기 바빴다고 한다. 자식들을 데리고 바다 곁에 사는 사람은 바다 밑으로 가서 숨기도 했다고 한다”, “우

---

다. 예를 들면 2세대의 기념식 참가 비율은 7.9%인데 반하여 3세대는 21.7%에 달한다. 그러므로 3세대는 구술이나 뉴스에 의해 4·3의 기억을 형성해 가기보다 의례나 비디오 등에 표상화된 4·3 사건을 통해 기억을 형성해 가는 경향이 있다.

리 어머니는 밀서헌(밀서한) 놈, 뽀뽀하게 살아근 거 보면 하늘도 어신생이여(없는 모양이야), 저 할망 아들 밀서다리(밀고자) 아닌가...” 등이다. 반면 ‘사레론’ 유형에 속한 한 남성의 기억은 “한라산 최고 폭도 우두머리를 이덕구(곰보)라고 했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문하고 총살시켰다... 북촌 같은 데는 99% 제사가 거의 같은 날이다”로 대량학살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다.

세대간 기억 변화는 사건의 피해원인, 무장대원, 토벌대원에 대한 설문지 문항의 응답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2세대는 피해의 원인으로 “모르겠다”(19.3%, 114명 중 22명)라는 응답을 제외하면, 이정권/미군정(20.7%, 92명 중 19명)이나 주민이나 밀고자 (11.9%), 토벌대와 폭도(12.0%), 폭도(9.8%) 등을 지적했다. 반면 3세대는 같은 질문에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을 제외하면(42.9%, 226명 중 97명), 이정권/미군정(31.5%, 129명 중 41명), 이념(4.2%), 토벌대(3.1%), 주민/밀고자(4.7%), 폭도(0.8%) 등으로 응답했다.<sup>11)</sup> 사태의 원인을 2세대는 이정권과 더불어 주민, 밀고자, 폭도 등 제주도민도 거의 비슷하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3세대는 이정권과 미군정 등에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제주도민이 원인을 유발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는 경향은 무장대원에 대한 인식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2세대는 부모로부터 전혀 듣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면(114명 중 38명), 부모 등으로부터 무장대가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가해자”, “학살자” 등 부정적인 말을 주로 들어왔고(114명 중 65명), 114명 중 8명만이 “피해주민”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3세대는 “모른다”거나 무응답을 제외하면(46.9%, 226명 중 96명), 피해주민, 항쟁인, 사상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등(55.8%, 120명 중 67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22.5%로 2세대의 기억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들은 같은 제주도민인 무장대원에 대해서 2세대의 기억과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해 나가고 있다.

토벌대에 대한 중장년층과 대학생의 응답에서도 기억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토벌대에 대한 2세대의 응답의 특징은 부모 등이 자녀들에게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장대원에 대해서는 114명 중 38명만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토벌대에 대해서는 무려 81명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다. 국가에 의한 기억 억압의 한 단면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2세대도 부모 등으로부터 토벌대에 대하여 “나쁜 사람” 등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33명 중 24명), “수고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주민도 2명이 있었다. 반면 대학생들은 “모른다”거나 무응답을 제외하면(62.8%, 226명 중 142명), “명령수행자”(52.4%, 84명 중 44명)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나쁜 사람” 등(32.1%)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대학생들은 같은 제주주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발달시키고 있었지만, 토벌대 등 타집단에 대해서는 “명령수행자”라는 국가의 한 도구이며, 비인격적인 존재, 또는 “나쁜 사람” 등으로 새로운 의견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 4·3이 젊은 세대들에게 잊혀져가지만 세대나 성별에 따라 서로 강조하는 기억이 다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4·3이 정권에 의한 탄압의 결과로, 여성에게는 일상생활 속의 사적인 이야기로서 기억이 재형성되고 있다. 특히 세대간의 기억 변화는 놀라울 정도이다.

11) 대학생의 경우, 피해의 원인에 대하여 매우 다양하게 응답했다. 구체적인 집단이나 정권보다 “시국”, “폭력”, “보복”, “열강의 힘의 논리”, “신뢰가 없어서”, “도민항의”, “미소대치상황” 등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기억 변화는 2세대와 3세대가 겪은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다. 기억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서 재형성되기 때문이다. 2세대는 국가에 의한 망각의 행위(토론킴지, 연좌제 실시, 보안법 공포, 반공교육 등)의 피해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초기성인기까지를 지낸 세대이다. 부모세대로부터 말해도 좋은 단편적인 경험들을 주로 들어오면서 국가에 의해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고, 무장대원이나 토벌대원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사건의 원인을 이정권과 더불어 무장대원과 일반 제주주민에게도 돌리고 있다.

반면 대학생들은 자기집단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기억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에 놓여있다. 더 이상 공포 속에 기억을 억압할 필요도 없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해 내야 할 부담감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에 의한 ‘공산당 폭동론’보다는 새로 부상하는 ‘민중항쟁론’이 제주인의 정체성 형성에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더불어 우익편의 담론이나 기억보다 새로운 담론이 4·3 특별법 등의 공포로 더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 대학생들은 사실이나 경험담보다는 4·3 진상조사나 명예회복 등의 담론이나 공식의례, 문학, 다큐멘터리 등 표상화된 이미지에 더욱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견이나 태도를 형성해 가면서 집단기억을 긍정적인 자기이미지와 연결시켜 발달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 5. 제주 4·3사건 사회사

이 글은 이제까지 제주 4·3사건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보통주민들의 4·3사건에 대한 기억과 망각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주주민들은 여러 방식으로 제주 4·3사건을 설명하고 있었다. ‘의견형’, ‘역사평가형’, ‘원인분석형’, ‘희생론’, ‘가해피해론’, ‘이념·갈등형’, ‘대립형’, ‘과정형’ 등으로 이 사건을 기억해 내고 있었다. 또한 사건 2세대와 3세대들이 기억하는 내용들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데, 성과 세대에 따라 차이와 변화를 보여주었다.

제주주민들의 이러한 담론들은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공식역사나 최근의 진상보고 등 ‘사실’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 부모세대로부터의 구술, 4·3사건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 담론 논쟁, 재현된 이미지 등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초기성인기까지 제도적으로나 자발적으로나 망각을 강요받았던 사건 2세대들은 사적인 기억들을 발달시키고 있고, 더 이상 기억이 억압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3세대들은 오히려 망각하고 있거나, 기억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전체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sup>12)</sup> 또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특정경험담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의 주변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먼저 기억 복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세대는 사건 체험자들로부터 알고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괴리에서(Hosking, 1989) 사건을 온전하게 전달받기 어려웠고, 3세대는 제주의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더욱 더 전달받기 어려웠다. 물론 최근 10여 년 동안 활발한 진상규명 운동에서 체험자의 수많은 기억들이 증언으로 채택되었지만, 체험자들의 사건 경험과 그 이후의 삶이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무엇보다 체험자들이 오랫동안 되새겨왔던 억눌린 기억들을

12) 제주주민의 기억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사용한 설문지 조사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설문지 조사 방법은 많은 주민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을 이해하는 데 제한이 있다. 그리고 세대간 기억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는 방법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1980년대 후반에 증언한 생존자를 다시 면담하여 그 이후의 기억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더 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전달되어 기억의 재생과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억의 복원은 주민들이 사건을 더 잘 이해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체험자나 일반인 등 보통사람들의 기억들을 역사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주민들은 역사가와 다르게 사건을 정의하고 있고, 역사로 선택되지 않는 내용들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기억방식과 내용들이 역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4·3 기념공원이나 박물관을 건립할 때 주민들의 기억들이 기억을 넘어 역사나 기념의 차원으로 전환되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복원과 역사화 작업과 동시에 기억의 전파도 필요하다. 제주 4·3사건은 제주주민만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지역사가 아니라 냉전시대의 국가폭력으로서 우리나라 전 지역의 과거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또 진상보고서가 승인되어 새로운 공식역사가 탄생되고 있다. 4·3사건이 더 이상 제주주민만의 고통이나 저항의 역사로 남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과 젊은 세대에게도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3사건의 기억의 사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 이 글에서 일부 다룬 것처럼 제주주민들의 4·3 서사들은 제주사회의 변화, 특히 이 사건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구술전달 과정, 제주인의 정체성 형성, 4·3의 진상론, 문학, 미술, 영화 등의 문화운동 등) 등에 의존하고 있다. 기억의 사회사는 제주 4·3사건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사회적으로 전달되고 유통되어왔는지 사건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성별 등 사회집단에 따라 기억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고 보존됨도 보여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의 후유증, 주민들의 고통, 4·3사건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과 화해 등을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4·3사건 진상조사와 문학, 미술, 다큐멘터리, 연극 등의 예술운동 등과 더불어 기억의 사회사에 대한 연구도 계속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199-231.
- 이정주. 2000.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제주도 연구』 17: 51-94.
- 윤택림. 2001. “한국 근현대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 『사회와 역사』 . 59: 207-25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2001.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 풀빛.
- Alonso, Ana Maria. 1988. "The Effects of Truth: Representations of the Past and the Imagining of Community." *The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1): 33-57.
- Baumeister, Roy and Stephen Hastings. 1997. "Distortions of Collective Memory." pp. 277-294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edited by James Pennebaker, Dario Parz, Bernard Rime.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urke, Peter. 1989. "History as Social Memory." pp. 77-96 in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edited by Thomas Butler. New York: Basil Blackwell.
- Fentress and Wickham. 1992. *Social Mem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Gaskell, George and Daniel Wright. 1997. "Group Differences in Memory for a Political Event." pp. 175-190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 Marques, Jose, Dario Paez, and Alexandra Serra, 1997. "Social Sharing, Emotional Climate, and the Trans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emories: The Portuguese Colonial War." pp. 253-276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 Halbwachs, Maurice. 1980.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Hosking, Geoffrey. 1989. "Memory in a Totalitarian Society: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pp. 115-130 in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 Igartua, Juanjo and Dario Paez. 1997. "Art and Remembering Traumatic Collective Events: The Case of the Spanish Civil War." pp. 79-102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 Iniguez, Lupicinio, and Jose Valencia, and Felix Vazquez. 1997. "The Construction of Remembering and Forgetfulness: Memories and Histories of the Spanish Civil War." pp. 237-252.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 Paez, Dario, Nekane Basabe, and Jose Gonzalez, 1997. "Social Process and Collective Memory: A Cross-Cultural Approach to Remembering Political Events." pp. 147-174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 Popular Memory Group. 1982.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pp. 205-252 in *Making Histories: Studies in History-writing and Politics*, edited by Richard Johnson, Gregor McLennan, Bill Schwarz, and David Sutton. Hutchinson: University of Birmingham.
- Schman, Howard, and Robert Belli and Katherine Bischooping. 1997. "The Generational Basis of Historical Knowledge." pp. 3-20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 Schuman, Howard and J. Scott.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59-381.

주제3 평화의 섬, 모색과 대안-과거에서 미래로

21세기 히로시마의 역할 - 과거에서 부흥과 화해로  
가즈미 미즈모토(히로시마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교수)

제주 평화의 섬에 대한 정책적 논의 - 구상과 방향-  
고충석(제주발전연구원 원장)

**The Role of Hiroshima in the 21st Century:  
From Destruction to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Kazumi Mizumoto  
Hiroshima Peace Institute  
Hiroshima City University

**1. Introduction: Hiroshima and “Peace”**

Even after half a century since the drop of the atomic bomb, many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coming to the 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Every year, the Peace Memorial Ceremony on August 6th is broadcast to the world through the media. The name of Hiroshima is always cited with the word “peace” .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n such questions as why Hiroshima is regarded as a symbol of peace or how should we interpret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drop of the atomic bomb. When the Smithsonian Institute cancelled an exhibit on the atomic bomb scheduled in 1995, many Japanese citizens were surprised to know that there is still a huge gap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the drop of atomic bomb in the US and Japan. They were also shocked to hear the remark of the prime minister of Pakistan that there should have been no drop of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if Japan possessed nuclear weapons then.

If Hiroshima wants to contribute for world peace in the future as before, we should re-examine the link between "Peace" and Hiroshima. Peace in Hiroshima has been closely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the drop of atomic bomb.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destruction caused by the drop of atomic bomb, and then, would like to re-examine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Also, I would like to touch upon the importance of reconciliation in the future and the role Hiroshima should play in peace building of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 **2. Hiroshima and "Destruction"**

### **Destruction by the Atomic Bomb and Other Air-Bombings**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40,000 people were killed in Hiroshima since the drop of the bomb in August 6th of 1945 until the end of the year. Also, 70,000 houses were totally or partially burned or destroyed by the bomb. An area of about 12 square kilometers became ash.

On the other hand, a total of 215 cities experienced air-bombings during the war and a total of 2.1 million houses out of 14 million houses then existed in Japan were lost. National Reconstruction Plans were implemented in 112 cities including Hiroshima to rebuild the cities from the destruction of the war.

If you compare the number of death by air-bombings in those cities, the largest number was more than 90 thousands in Tokyo. If you compare simply the number of the victims, that of Hiroshima is not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okyo.

### **Special Aspect of the A-bomb Experience**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destruction by normal bombings and by the atomic bomb. Most of the air-bombings were operated during the night with numerous normal bombs dropped from numerous airplanes. On the other hand, the bombing in Hiroshima was done in the morning by one air-bomber B-29. There are also clear distinctions in the effect of the bombings. In case of atomic bomb, the destruction is a mixture of heat rays, blast, and radiation. Many atomic bomb survivors even today are suffering from aftereffects including leukemia and cancer.

One big distinction from other air-bombings is the death rate. According to a statistics of Japanese government in 1949, the death rate in Hiroshima City caused by the atomic bomb was 38.5 percent. The figure is exceptionally high if you compare it with that in Nagasaki (8.8 percent) and that in Tokyo (1.4 percent). Those of other cities were less than 1 percent. Besides, the figure of

Hiroshima was based on smaller estimation of the death in Hiroshima 78 thousands and therefore the actual death rate must be much higher.

An official document of the Hiroshima municipal government states that “the death rate is estimated to be higher than 40 percent, historically quite extraordinary, and because of this high death rate, we can easily acknowledge the inhumane nature of atomic bomb.”

### **Hiroshima should be Sympathetic to Other Disastrous “Memories” in the World**

The atomic survivors in Hiroshima so far have emphasized the peculiarity and atrocity of the atomic bomb experiences. Surely the destructive power and the aftereffects brought by the atomic power was much different from those caused by normal weapons. However, if you compare the final result, there is one common aspect death. If Hiroshima only emphasizes the peculiarity of its atomic bomb experience and thinks little of the experience in other areas, the world outside Hiroshima would not pay attention to its experience and Hiroshima would not be able to contribute for the peace building in the world.

### **Inhumanity of the Drop of the Atomic Bomb**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in the world regarding the decision to drop the atomic bombs by the United States. In the US, the decision is still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regarded it as necessary and unavoidable to stop the war. On the contrary, the majority of Japanese citizens think that the drop of the atomic bomb was a mass killing of civilians and should not be permitted on the ground of humanity.

Let me introduce the judgement conducted by the Japanese court on the issue of inhumanity of the atomic bomb. Five atomic bomb survivors in Hiroshima and Nagasaki filed a lawsuit against Japanese government to the local court of Tokyo and Osaka in 1955. The case of Tokyo and Osaka were later jointly handled at the Tokyo local court, called the Atomic Bomb Suit. At the court,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drop of the atomic bombs was an act against humanity and international law, and the atomic survivors possess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as the Japanese government renounced the claims against enemy states at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Japanese government should make compensations for the survivors, they argued.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drop of the atomic bombs was not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In 1963, the Tokyo local court ruled that, while rejecting the demand for compensations, the drop of the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was

indiscriminate bombings to the defenseless cities and therefore against international law. As the plaintiffs did not appeal for upper court, the judgement was fixed and became precedent.

Thirty years later, the illegality of nuclear weapon was judged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J) at Hague in 1996. In its advisory opinion, the ICJ admitted the inhuman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 The norm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 is against humanity became international by the judgement.

### **War Memory in the World and in Hiroshima**

Many nations have experienced wars, destruction, and mass killing in the world. In the case of Holocaust, millions of Jewish people were killed in the concentration camps during the World War II. In Cambodia, the Pol Pot regime killed millions of citizens, mostly intelligent and rich, in late 1970s.

In East Asia, Japan colonized Korea and kept the peninsula under strict military control. Then, after the WWII, many Koreans were killed during the Korean War. The Cheju Island, where we are assembled now, was also a stage of mass killing. In China, many lives were lost by the invasion of the former Japanese Army. The Nanking Massacre was just an example of its atrocity.

If Hiroshima wants to send any message of peace, it has to face with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other places.

### **3. Hiroshima and “Reconstruction”**

#### **Hiroshima as a Military Capital**

Hiroshima had been called “military capital” until the drop of the atomic bomb in 1945. The Emperors Command was situated in the Hiroshima Castle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in 1894-1895 and Hiroshima became provisional capital of Japan. Tens of thousands of soldiers were sent to Korea, China, and Southeast Asia from the Hiroshima Port before and during the WWII.

Hiroshima was to become one of the two final commanding posts in Japan i.e. Tokyo and Hiroshima if there had been no drop of atomic bombs and if Japan had fought ground battle on its territory with the US. Hiroshima was filled with military troops and facilities. Besides its 250,000 civilian population, there were between 40 and 90 thousands soldiers and army civilian employees. The total expense of the military sector in Hiroshima in 1931 was 5.5 million-yen. It was much larger than the revenue budget of the Hiroshima Municipal Government 3.82 million-yen.

As a military capital, the civilian life in Hiroshima was under the tight control once the Pacific War started.

### **Reconstruction with Former Military Site**

At the end of the war, a total of 6.47 square kilometers of lands, approximately one tenth of the total area of the Hiroshima City, were used for the army facilities. These areas became lands of civil purposes after the war such as land for local government offices, schools, roads, parks, and private companies. If you come to Hiroshima, you can see a huge area around the Hiroshima Castle filled with many office buildings, hotels, local governments, sports parks, museums and so on. This area represents the peace and vigor of Hiroshima and the citizens of Hiroshima really welcomed the change of nature from Military Capital to a city of peace .

### **Various Ideas for Reconstruction based on “Peace”**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within one month after the total destruction brought by the atomic bomb, various plans and ideas for the reconstruction were proposed by people of different sectors local government, universities, and private citizens. According to an official document of the city of Hiroshima, a total of 35 elaborate city reconstruction plans were made public from 1945 to 1949 by officials, scholars, artists, architects, and even foreigners of the occupation forces. It should also be emphasized that there was one thing common in those reconstruction ideas to revive the city of Hiroshima with a new identity of Peace. In many reconstruction plans, the vast zone around the hypo-center, or the ground zero, was kept as a huge memorial green park to pray for world peace. This feeling was shared by most of the Hiroshima citizens.

### **The Building Act of Hiroshima Peace Memorial City**

In its effort to reconstruct the city from the ash, the Municipal government of Hiroshima first tried to negotiate with Japanese government to ask the sell off of former military site and special subsidiaries. Then, the new mayor Mr. Hamai started in 1948 a movement to petition to the Japanese congress to pass a “Building Act of Hiroshima Peace Memorial City” by which Hiroshima would get special funding and treatment for its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from the government. The logic to support the petition was “to build Hiroshima as a center of Peace is the hope of world citizens.”

The majority of the congressmen supported the movement, and the Act was unanimously passed in both the lower and the upper house of the National Diet in 1949. The Act was also approved at the referendum in Hiroshima by 91 percent of votes in favor of it. The act is composed of 7 articles. This means that

the National Diet of Japan also admitted the reconstruction of Hiroshima as a symbol of world peace.

### **Reconstruction with “Peace” as the Symbol**

There are three major features of the reconstruction plan of Hiroshima. According to one specialist in architect, they are “Peace Memorial Park” , “Peace Avenue” , and “Green Zones along the Rivers” . A huge memorial park was designed near the ground zero with an area of 124,000 square meters in which the Peace Memorial Museum and the Memorial (Cenotaph) were located. Through the Cenotaph, visitors can see the famous “Atomic Dome” , the ruin of former Building for Industry Promotion, The Dome later registered as one of the World Heritages of the UNESCO. The Peace Memorial Park and the Atomic Dome are the symbol of Hiroshima today.

### **Foreign Aid for the Rehabilitation**

Besides the funding of Central government through the Building Act of Hiroshima Peace Memorial City, the reconstruction of Hiroshima was made possible by many foreign aid and donations, especially aiming at rescuing atomic bomb survivors.

One famous example was the emergency medical rescue initiated by the effort of Dr. Marcel Junod, the chief representative to Japan of the Red Cross International Committee, came to Hiroshima on September 8th, 1945. He negotiated with the General Head Quarter of the US occupation forces to send 15 tons of medical supplies, some of which were difficult to obtain at that time. In praise of his activities, a monument was built in the Peace Memorial Park in 1955.

Norman Cousins, chief editor of a US magazine established in 1949 a Hiroshima Peace Center in New York, started spiritual adoption of atomic bomb orphans by US parents for ten years. During the years, 20 million yen equivalent of aid for the expense of bringing up orphans was sent from US to Hiroshima. Mr. Cousins also helped 25 female atomic survivors, who suffered from keloid, to visit US in 1955 to have medical treatment and surgical operations.

It is true that Hiroshima has experienced the inhuman destruction of the atomic bomb. It is also true that it has experienced humanitarian aid from the world, and we should never forget this.

## **4. Hiroshima and “Reconciliation”**

The experience of atomic bomb destruction and recovery from the ash in



Hiroshima is not enough for the city to be qualified to appeal for peace to the world. As the meaning of the drop of atomic bomb is interpreted differently in the world, and we have to face with them.

### **Interpretation in the US and Asia**

In the United States, the majority view is that the decision to drop the atomic bombs was necessary and unavoidable in order to stop the war. If the bombs were not dropped, there was a ground war on Japan's main island, and a million of lives of both US and Japanese soldiers were lost. The casualty in Hiroshima and Nagasaki including more than 200 thousands death was acceptable compare to one million,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calculation is questionable and many historians in both the US and Japan have found many documents to prove to the contrary, but I will not discuss this issue today.

In Korea and China, some people interpret the atomic bomb as a “liberator” from Japanese military invasion and colonization. There is an expression in Buddhism that “one is punished in accordance with what he has done” . This interpretation is very close to the Buddhist thinking.

### **Atomic Survivors Movement in Japan**

Despite the majority view in Japan that the drop of the atomic bomb is against humanity, most of the atomic survivors in Hiroshima did not take any actions for remedies or compensations for almost ten years. One reason was that in addition to the bad health condition, they were also suffering fro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side the Japanese society.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ere based on their physical appearance with keloid, possibility to bear abnormal baby, and other groundless rumors or misunderstanding.

The very first nation-wide anti-nuclear movement was started ten years after the Hiroshima and Nagasaki when a Japanese fishery boat was exposed to the Death Ash caused by the US Nuclear test in the Pacific Ocean in 1955. This incident caused a mass anti-nuclear movement in many cities of Japan, and the rescue of the atomic survivors gradually became one of the core issues of the movement.

Until 1960s, the atomic survivors have been regarded as victims of atrocities of war. It is true that the drop of the atomic bomb is an atrocity because it caused indiscriminate mass killing of non-combatants, or civilians, and it is against humanity. On the other hand, in early 1970s, Japanese citizens started to shed light on another aspect. We can say that Japan was victimized to the atomic bombs, but Japan was an aggressor to the neighboring Asian countries as well. We have to admit that Hiroshima itself was an aggressor because it was a military capital, they argued.

Whenever atomic bomb survivors of Hiroshima visit China to talk about its horrible experience, Chinese people want to point 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Nanking Massacre in 1937. Or, if Hiroshima survivors go to Korea to convey the reality of the atomic bomb, people of Korea emphasize the atrocities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Hiroshima, people started to look at the dual nature of ourselves: victims and aggressors. This view has been reflected in the exhibit of the 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 **Need for Reconciliation**

If Hiroshima want to talk about the atrocity of the atomic bomb to the world, Hiroshima should look at other horrible and wretched incidents in the world. It is even so if they are caused by Japan. Besides,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50 thousands Korean residents in Hiroshima were victimized to the atomic bombs. They were dually victimized, and Japan should provide proper medical treatment and compensations for them.

As today's topic given to me is not the Japan's responsibility for colonization and the war, I will not touch upon this issue, but I just want to add that as a citizen of Japan, I am keenly aware of the responsibility, although I was born after the war.

If Hiroshima want to work for peace in the world, the citizens in Hiroshima as well as Japan should face with the past and make continuous effort to reach reconciliation with neighboring nations. Last year, the Hiroshima Peace Institute organized an international symposium titled "The Reconciliation of Competing memories of Hiroshima" and invited panelists from Korea, China, US, and Japan. This is just one of the effort to build mutual understanding crossing the border by showing that we are not justifying Japan's past nor emphasizing only the damage of the atomic bomb without looking at the past.

### **5. Conclusion: The Role of Hiroshima in the 21st Century**

As I mentioned earlier, the city of Hiroshima emerged in the history as a western military capital of Japan. Then, after the experience of the destruction by the atomic bomb, it started and achieved reconstruction by adopting peace as its new identity. It is true that in the heart of many city planners, there was a solemn thinking that the atrocity should never be repeated again. Whoever caused the result, the result is a big mistake of humanity. This philosophy is reflected in the epitaph (inscription) of the monument in the Peace Memorial

Park: Let all the souls here rest in Peace. For we shall not repeat the evil.

It is very tragic to the atomic survivors, but the city of Hiroshima was awakened to peace because it experienced the atomic bomb. As we have entered into the 21st century, there is a growing sense in Hiroshima that the atomic bomb experience is decaying or being forgotten. However, we also should not forget that we are awakened to peace because of the experience.

Hiroshima is not in a higher position to preach peace to the world. As our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were not made possible by ourselves but with the support from outside Hiroshima and outside Japan, Hiroshima in the future should stretch its hands to the people who are currently suffering from destruc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reconciliation is indispensable.

## 21세기 히로시마의 역할-파괴에서 부흥과 화해로

廣島市立大學 廣島平和研究所  
Mizumoto Kazumi(水本和實)

### 1. 서론-히로시마와 ‘평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하 원폭-번역자) 투하로부터 반 세기 이상을 경과한 지금도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8월 6일 평화기념 식전 모습은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발신되고 있다. 히로시마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말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히로시마가 무엇 때문에 평화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지, 혹은 원폭 투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5년,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예정된 원폭 전시회가 중지되었을 때,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일미 간에 원폭 투하를 둘러싼 해석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 놀랐다.<sup>13)</sup> 또한 파키스탄 수상이 1998년 핵실험 직후, “당시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을 것이다”<sup>14)</sup>는 발언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히로시마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면, 히로시마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히로시마의 평화는 원폭 피폭(被爆, 폭탄 투하에 따른 피해-번역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히로시마가 경험했던 ‘파괴’ 즉 피폭 체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이어서 히로시마 부흥 프로세스에 대해 검증해 본다. 그 위에 향후 과제인 ‘화해’와 21세기 세계 평화 구축을 향해서 히로시마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히로시마와 ‘파괴’

#### 원폭 피폭에 의한 파괴 규모와 여타 국내 재해 피해와의 비교

원폭 투하에 따른 파괴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자. 히로시마에서는 1945년 12월말까지 약 14만 명(±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sup>15)</sup> 약 7만 호에 가까운 가옥이 전소·완전 파괴되었거나 반 정도가 소실·파괴되어<sup>16)</sup> 이재 면적은 약 12km<sup>2</sup>에 달했다.<sup>17)</sup>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1942년 4월 본토 첫 공습 이래 1945년 8월까지 총 215 군데 도시가 전쟁 피해를 입었고, 약 1,400만 가옥 가운데 약 210만 호가 공습으로 소실되었으며, 전후에 히로시마를 포함한 112 군데 도시에서 전쟁피해 복구사업이 실시되었다.<sup>18)</sup>

13) 원폭 전시회 중지와 일미간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Martin Harwit, *An Exhibit Denied: Lobbying the History of Enola Gay*, New York: Springer-Verlag, 1996(일본어 번역은 M. 하윗 저, 『거절당한 원폭 전시회-역사 속의 ‘에놀라 게이’』, 山岡清二 역(미즈즈書房, 1997) 참조.

14) 『共同通信』(1998.5.29).

15) 廣島市社會局原爆被害對策部 편, 『平成13年度版 原爆被爆者對策事業概要』(2001.7), 14쪽.

16) 앞의 책, 3쪽.

17) 廣島市 편, 『廣島新史 都市文化編』(1983), 6쪽.

18) 앞의 책, 5쪽. 建設省 편, ‘計劃事業編’, 『戰災復興誌』 제1권(都市計劃協會, 1959) 참조.

원폭 이외의 공습으로 인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1945년 3월 9일~10일 양일간에 걸친 東京대공습으로 약 72,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sup>19)</sup> 이 날을 제외한 다른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9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sup>20)</sup> 수치상으로 봤을 때, 원폭으로 인한 히로시마 사망자 수는 東京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전쟁 피해자 수를 都道府縣(東京都, 北海道, 京都·大阪府, 43개 縣을 의미하는 일본의 광역 행정단위-번역자) 별로 보면, 東京이 가장 많다.<sup>21)</sup>

### 원폭 체험의 특수성

그러나 히로시마와 여타 도시가 입은 전쟁 피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히로시마 이외의 각 도시에 대한 공습은 보통 야간에 대량의 폭탄을 반복해서 투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히로시마 원폭 투하는 이른 아침에 B29 폭격기가 단 한 발의 폭탄을 투하하고 사라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폭에 의한 파괴는 통상 폭탄과는 달리 熱線, 폭풍, 방사선을 수반하는 복잡한 것으로서, 살아남은 피폭자 대부분이 지금도 백혈병을 비롯한 후유 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sup>22)</sup>

원폭이 다른 도시에 가해진 공습과 다른 것은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1949년 經濟安定本部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사망률은 38.5%로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나가사키 8.8%, 세 번째는 도쿄 1.4%이다. 여타 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1% 미만에 머물러 있다.<sup>23)</sup> 그나마 이 통계는 히로시마의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은 7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실제 사망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의 어떤 자료는 각종 원폭 사망자 수 추산에 입각해서 “약 40% 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높은 것으로서, 이로 미루어 원자폭탄의 비인간성, 특이성을 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4)</sup>

### 히로시마는 다른 비참한 ‘기억’에 공감해야 한다

지금까지 히로시마 피폭자는 통상적인 공습으로 인한 피해와는 전혀 다른 피폭 체험의 특수성·잔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원폭의 위력이나 방사선에 의한 후유 장애는 통상 폭탄과 비교했을 때 특수하며 잔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원폭도 통상적인 공습과 동일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 피폭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의 피해를 가벼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히로시마는 그 비참한 체험에 입각해서 국내는 물론 외국의 다양하고 비참한 체험에 대해서도 공감해야 한다.<sup>25)</sup> 그렇지 않으면 세계도 히로시마를 향해 눈

19) 吉村昭, 『東京의 전쟁』(筑摩書房, 2001), 19쪽.

20) 일본의 空襲編輯委員會 편, 『일본의 空襲-10. 補卷 資料編』(三省堂, 1981)에 게재된 복수의 자료에 따름.

21)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지만, 두 번째는 히로시마, 세 번째는 나가사키로, 원폭 투하지의 피해자 수가 얼마나 많은 지를 방증하고 있다. 앞의 책, 102쪽.

22) 원폭으로 인한 신체 장애 형태에 대해서는 廣島市·長崎市 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편, ‘제2부 신체 장애’, 『廣島·長崎의 原爆災害』(岩波書店, 1979), 59-240쪽 참조.

23) 앞의 책, 107-108쪽.

24) 『平成13年度版 原爆被爆者對策事業概要』, 14쪽.

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히로시마가 세계 각지에서 평화 구축을 위해 공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원폭 투하의 非人道性

원폭 투하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正當化論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원폭 투하는 비전투원에 대한 대량 무차별학살이며, 인도상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원폭의 非人道性에 대해서 일본 재판소의 시각을 소개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 5명이 1955년 4월 도쿄와 오사카 지방재판소(훗날 도쿄에서 병합 심리)에 ‘원폭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고소 취지는 “원폭 투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비인도적 행위이며, 피폭자는 미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對日강화조약에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국가가 피폭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폭 사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

도쿄지방법판소는 1963년 1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무방비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법 위반이다”는 판결을 언도했다.<sup>26)</sup> 원고측이 공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인정치 않은 판결은 확정됐지만, 동시에 원폭 투하가 비인도적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이로부터 30년 후, 핵무기 위법성이 ‘세계법정 프로젝트’라는 국제적 시민운동에 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으며, 1996년 ICJ는 권고의견 안에 핵무기 사용의 비인도성을 인정했다. 핵무기 사용을 비인도적이라고 하는 규범은 국제적으로도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전쟁의 기억과 히로시마의 기억

해외에도 수많은 전쟁·파괴·학살이나 비참한 경험이 존재한다. 유럽의 홀로코스트에서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지에서 열차로 강제 이송되어 가스실에서 죽어갔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파는 프놈펜 시민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캠프 생활 중인 지식인이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침략에 의해 한반도가 식민지화되고, 한국전쟁에서도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오늘 심포지움이 개최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예전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도 구 일본군의 침략에 의해 남경대학살을 비롯하여, 중일전쟁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최근의 사건을 보더라도, 2001년 9월 11일 미국내 테러사건으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한순간에 파괴되어 약 2,800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수많은 미국민이 9·11 테러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한편, 테러 피해국인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본 논문은 이라크戰 발발 이전에 작성됨-번역자)

25) 피폭자이며 전 廣島平和記念資料館長인 高橋昭博은 피폭체험을 다른 전쟁 피해에 비해 보다 특수하고 비참한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피폭자 에고이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高橋昭博, 『히로시마, ひとりからの出發』(筑摩書房, 1978), 74-76쪽.

26) 원폭 소송에 대해서는 松井康浩, ‘原爆裁判’, 坂本義和·庄野直美 監수, 『日本原爆論體系 제2권』(1999), 53-108쪽 참조.

### 3. 히로시마와 ‘부흥’

#### 軍事 都市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전의 히로시마는 ‘軍都(軍事 都市-번역자)’라 불렸다. 청일전쟁 당시, 히로시마 城內에 大本營이 설치되어, 1894년 9월부터 1895년 4월까지 명치천황이 체재함으로써 히로시마가 임시 수도로 되었다. 戰前의 히로시마 항구는 아시아로 군인을 보내는 軍港이었다.<sup>27)</sup>

또한 2차 대전 말기, 만일 미국과 본토결전을 하게 된다면 도쿄와 히로시마를 각각 東日本, 西日本の 군사 거점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시내에는 수많은 군사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고, 원폭 투하 직전의 히로시마에는 약 25만 명의 시민<sup>28)</sup> 외에 약 4만 명에서 9만 명에 이르는 군인이나 군속이 있었다.<sup>29)</sup> 1931년도 히로시마 세입예산액은 약 382만 엔이었으나, 히로시마의 군사관련 지출총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550만 엔이었다고 한다.<sup>30)</sup>

이러한 군의 존재는 히로시마 시민생활 분위기에도 투영되었다. 제2차 대전이 시작되자, “히로시마 전 시내는 군사 관련 색깔로 일변되었고, (중략) 시민생활은 현저하게 압박받았다”<sup>31)</sup>고 한다.

#### 부흥에 활용된 구 軍用地

중전 당시, 히로시마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구 군용지가 647헥타르나 있었다.<sup>32)</sup> 당시 히로시마市 면적은 69.36km<sup>2</sup>,<sup>33)</sup> 따라서 약 1할 정도가 군용지인 셈이 된다. 이 때문에 히로시마市는 이 군용지를 정부로부터 불하받고, 전후 부흥에 이용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군용지 불하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647헥타르에 이르는 구 군용지는 관공청, 공원·녹지, 학교, 항만 등 다양한 ‘民生’ 용지로 할당되고, 민간 기업으로 매각하거나 농지 전용도 이루어졌다.<sup>34)</sup> 현재 히로시마城 주변에 펼쳐진 광대한 관청가나 오피스街, 공원·녹지는 히로시마의 활기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구 군용지였다.

#### 시민들에 의한 다양한 재건 아이디어

히로시마 부흥 프로세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전 직후인 1945년 9월 이른 시기부터

27) 戰前 宇品港의 역사에 대해서는 空辰男, 『加害基地 宇品』(汐文社, 1994) 참조.

28) 히로시마 인구는 1942년에 41만 9,182명이었으나, 강제 소개로 인해 감소되어 1945년 6월 30일 시점으로 미곡통장 등록 인원은 24만 5,423명이었다. 廣島市 편, 『廣島原爆戰災誌』, 제1권(1971), 26쪽.

29) 『平成13年度版 原爆被爆者對策事業概要』, 14쪽.

30) 廣島市 편, 『廣島新史 財政編』(1983), 217쪽.

31) 『廣島原爆戰災誌』, 제1권(1971), 14쪽. 또한 개전 직전에 제정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에 관한 取締法’에 따른 검속은 여타 도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군사 중요기지인 히로시마나 구레에서는 대단히 가혹했다. 개전 직전인 1941년 4월 히로시마市는 독자적으로 ‘軍都 시민 防諜訓’(10개 항목)을 제정하고, 市報를 통해서 ‘스파이는 어디에나 있다’, ‘친한 사이에도 軍機는 비밀’ 등 경고문을 주시시켰다. 같은 책, 23-24쪽.

32) 『廣島新史 財政編』, 214쪽.

33) 1929년에 주변 7개 지역을 히로시마市로 합병해서 히로시마 면적은 27.29km<sup>2</sup>에서 69.36km<sup>2</sup>로 늘어났다. 廣島市 편, 『廣島新史 地理編』(1983), 20쪽.

34) 『廣島新史 財政編』, 213-242쪽.

官·學·民을 망라한 다양한 시민들에 의해서 재건 구상이 붓물 터지듯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히로시마市 자료에는 “戰災 부흥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제안”이란 타이틀이 붙은 일람표가 있으며, 여기에는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발표된 35건의 제안이 게재되어 있다. 히로시마縣이나 히로시마市 간부 외에도, 학자, 화가, 작가, 건축가, 점령군 외국인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sup>35)</sup> 원폭에 의한 파괴나 패전으로 인한 상실감에 사로잡혀있던 시민들도 많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후의 도래와 함께 시민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묶고 있던 강력한 속박이 풀렸다고나 말하듯이 자유분방하게” 다양한 구상을 제안했던 것이다.<sup>36)</sup>

이들 제안 가운데는 원폭 피폭 중심지 주변을 광범위하게 기념지역으로 보존한다거나 혹은 피폭 중심지에 평화기념탑을 세운다거나 하는 등 ‘평화’를 신생 히로시마의 아이덴티티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다수 보인다. 被爆地에서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많은 시민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법

히로시마市는 부흥 재원 확보를 위해 앞서 서술한 구 군용지 불하나 정부의 특별 보조금도 신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947년 4월 취임한 하마이(濱井信三) 시장 등은 1948년 11월경부터 히로시마 부흥 사업을 국가사업화하는 방향을 전환하고, 청원운동을 개시했다. 당시 내건 이유로는 단지 전쟁 재해의 타격이 너무 커서 독자적으로는 부흥이 불가능, 혹은 불충분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히로시마를 평화의 메카로 건설하는 것은 세계의 바램이다”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내걸었다.<sup>37)</sup> 청원운동은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운동으로 발전했고, 최종적으로는 1949년 5월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법’이 국회 양원(중의원·참의원)에서 가결됐다. 이 법은 동년 7월에 히로시마市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고, 91%의 찬성을 얻어 8월 6일 공포되었다.<sup>38)</sup>

이 법률은 7개조로 되어있고, 국회 제안이유로는 “히로시마市를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이상과 일본의 전쟁 포기를 상징하는 평화기념도시로 건설함은 히로시마의 재기에 관한 세계의 여망에 화답할 수 있기 때문”<sup>39)</sup>이라고 쓰여있다. 히로시마를 세계의 ‘평화’와 연결시키는 것을 일본 국회도 인정했던 것이다.

### ‘평화’를 심볼로 삼는 도시 건설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법에 근거한 히로시마 전후 부흥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도시의 기반정비에 대해서는 전국의 戰災 도시와 공통되는 면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시마루(石丸) 씨는 히로시마의 부흥 계획이 갖는 3대 특징에 대해서 ‘평화공원’, ‘평화대로’, ‘해안녹지’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sup>40)</sup> 평화공원은 피폭 중심지에서 가까운 약 12.4헥타

35) 『廣島新史 都市文化編』, 20-30쪽. 今堀誠二 감수, 『廣島被爆 40年史 都市의 復興』(廣島市企劃調整局文化擔當, 1985), 42-45쪽.

36) 『廣島新史 都市文化編』, 19쪽.

37) 濱井信三, 『原爆市長-히로시마와 함께 20년』(朝日新聞社, 1967), 141-142쪽.

38) 石丸紀典, “『廣島平和記念都市建設法』의 制定過程とその特質”, 廣島市公文書館, 『廣島市公文書館紀要』(제11호, 1988), 1-56쪽.

39) 『戰災復興事業誌』, 52쪽.

40) 2002년 2월 20일,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화정책 심포지움’(평화정책 연구회 주최) 제2세션 ‘도시의 상실에서 재생으로-사례를 통해서 본 제안’ 가운데서 石丸紀典 씨의 발표 “히로시마의 부흥과정을 통한 문제제기”에 따름.



르 구역에 평화기념관과 자료관을 포함한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계획되어, 1949년 145점의 응모작 가운데서 丹下健三 東京大 조교수 그룹이 1등 입선했다.<sup>41)</sup> 평화공원 한 칸에 있는 원폭 돔은 그후 노후화로 인해 철거도 검토되었지만, 1966년에 히로시마 시의회가 영구 보존하기로 결의하고 모금을 통해 보존공사가 진행되었다. 30년 후인 199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었다. 현재 평화공원과 원폭 돔은 하나가 되어 히로시마의 상징이 되고 있다.<sup>42)</sup>

### 외국의 지원

히로시마의 부흥은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법에 보이듯이, 세계 평화를 호소함으로써 정부의 원조를 획득하여 추진되었지만, 히로시마에 대한 해외의 원조나 기부도 있었으며 이는 주로 피폭자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피폭 직후인 1945년 9월 8일, 원폭의 위력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히로시마로 들어온 미국 원자폭탄 재해조사단에 동행했던 국제적십자사의 스위스인 마르셀 주노 박사는 GHQ(연합군 최고사령부-번역자)에 강력히 호소해서 의약품 15톤을 히로시마로 보냈다. 주노 박사는 미국 조사단원이 취한 행동과는 달리 피해자 구원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평화공원 내에는 1955년 주노 박사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되었다.<sup>43)</sup>

미국 뉴욕에서 잡지 주필을 하고 있었던 노만 카슨즈 씨는 1949년 뉴욕에 “Hiroshima Peace Center”를 설립해서 일본의 원폭 고아들과 미국인 사이에 ‘마음으로 맺는 양자 결연’ 사업을 약 10년간 지속했으며, 그간 미국으로부터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약 2,000만 엔이 송금되었다.<sup>44)</sup> 또한 카슨즈 씨는 케로이드가 발생한 이른바 ‘원폭 소녀’들의 訪美 치료에도 진력했다. 1955년 5월에 25명의 피폭 여성이 渡美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sup>45)</sup>

이처럼 일찍부터 히로시마를 향해 뻗은 외국의 지원 손길은 히로시마의 피폭 체험에 동정하는 보편적 감정이 국경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히로시마는 비인도적인 체험을 했지만 동시에 인도적인 원조도 받고 있었으며,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4. 히로시마와 ‘和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로시마는 원폭에 의한 파괴와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히로시마가 세계를 향해 ‘평화’를 호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원폭 투하’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다양한 해석을 정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1) 丹下健三 씨와 히로시마 戰災 부흥 간의 관련에 대해서는 藤森照信, “〈강연회〉 히로시마 계획을 전개했던 의도·그 후의 丹下 씨의 활동”, 廣島市公文書館, 『廣島市公文書館紀要』(제23호, 1999), 41-67쪽.

42) 원폭 돔과 그 전신이 히로시마縣 物産陳列館에 대해서는 朝日新聞廣島支局, 『原爆 돔』(朝日文庫, 1998). 雨野忍, “空間의 重層-히로시마縣 物産陳列館의 디자인 구상”, 廣島市公文書館, 『廣島市公文書館紀要』(제16호, 1993), 65-82쪽 참조.

43) 廣島市, 『廣島新史 市民生活編』(1983), 252쪽.

44) 앞의 책, 253-254쪽.

45) 廣島市, 『被爆50周年 廣島市原爆被爆者援護行政史』(1996), 57-58쪽.

## 원폭 투하에 대한 외국의 시각

이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을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한다.

우선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전쟁 종결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정당화론이다. 혹시 원폭이 투하되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본토결전으로 이어지고 쌍방 간에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히로시마·나가사키 20여만 명의 사망자는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이다.

다음은 동아시아 국가의 시각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나 식민지화, 침략에 신음하던 한국이나 중국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식민지 정책·군사침략을 종결시킨 원폭, 혹은 해방을 가져다준 원폭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불교 용어로 말한다면, ‘인과응보’라는 사고방식이 가깝다.

## 일본의 피폭자 운동 변천

일본 국내 반응은 어떠할까? 히로시마의 수많은 피폭자는 특유의 케로이드가 얼굴과 손, 신체에 남아 있어서 외견상 차별을 받거나, 또한 방사능의 영향으로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등의 편견으로 인한 결혼차별, 취업차별의 고통을 겪어왔다. 일본에서 발생한 최초의 反核운동이나 핵철폐 운동은 전후 10년 지나서 주로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한 1955년 태평양에서 있었던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에 의한 일본 참치어선 피폭사고가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즉, 원폭 투하를 ‘비인도적 행위’로 비판하는 운동이 전쟁 직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재판을 통해서 원폭 투하의 비인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은 시작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결과로서 원폭이 투하된 것이라는 시각도 점차 일본인 사이에서 퍼져 나갔다. 히로시마에서도 원폭 투하의 ‘피해자’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이며,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가해자이다, 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히로시마 그 자체가 ‘軍都’로서 아시아 침략의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일본의 피폭자가 중국에서 원폭 투하의 비참함을 호소하려고 하면, ‘남경대학살’의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에서 원폭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했던 것이다.

히로시마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피해자’로서의 히로시마만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히로시마 과거에 대해서도 깊이 응시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전시에도 이러한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 ‘화해’의 필요성

나는 히로시마가 세계를 향해 원폭의 비참함에 대해 호소하고자 한다면, 히로시마도 세계에서 일어난 비참한 사건에 대해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일본 스스로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일본의 전쟁 책임, 혹은 아시아에 대한 가해 책임이 본 보고의 중심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지만, 일본의 한 시민으로서 내 자신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덧붙여두고자 한다.

앞으로 히로시마가 세계 평화를 호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이 혹은 히로시마 자신이 이러한 일본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 대하며, 주변국 국민과의 ‘화해’라는 곤란한

과제를 향해서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히로시마 평화연구소는 작년 한국, 중국, 미국의 연구자를 히로시마로 초청해서, ‘원폭 투하를 둘러싼 기억과 화해’라는 테마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히로시마가 원폭의 피해만을 유독 강조하고 일본이 저지른 과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한다는 오해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평화 구축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다. 한국측 출석자도 기탄없는 귀중한 의견을 발표했고, 히로시마 시민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 5. 맺음말-21세기 히로시마의 역할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明治 이후(1860년대 이후-번역자) 역사 속에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西일본의 군사 거점으로 형성되어 갔다. 그리고 원폭 투하에 따른 파괴를 거쳐서, 전후는 ‘평화’를 아이덴티티로 삼아 부흥을 이뤘다. 당시 다양한 사람들이 그렸던 부흥 디자인에는 원폭 사망자를 추도하고, 전쟁이 야기한 적군과 아군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두 번 다시 이런 비참한 체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엄숙한 생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편안하게 잠드소서. 잘못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터이니”라는 원폭 위령비 비문에 드러나 있다.

또한 피폭자에게는 비통한 일이지만,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피폭 체험이 있기 때문에 평화에 눈을 떴다고도 말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히로시마에서는 피폭 체험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風化해서는 안 되는 것은 피폭 체험은 물론이거니와, “피폭 체험이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는 평화에 눈을 떴다”는 인식일 것이다.

우리들은 결코 높은 곳에서 세계를 향해 평화를 설파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 히로시마 부흥이 히로시마만의 노력이 아니고 외국의 원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지원에 힘입었듯이, 앞으로의 히로시마는 파괴의 한 가운데서 복구를 위해 허덕이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진정한 ‘화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규배(탐라대 교수) 번역》

제주 평화의 섬에 대한 정책적 논의--구상과 방향--  
고충석(제주발전연구원장)

1. 평화 논의의 제주적 컨텍스트

평화라는 개념은 다의적이다. 평화는 일반적으로 전쟁 또는 전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만(소극적 개념), 더욱 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구현된 진정한 발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적극적 개념) 이해하기도 한다.

평화라는 개념을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평화 개념의 가치관련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엇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지, 어느 정도의 충족이 타당한 것인지,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인간학적 범주를 넘어 생태학적 범주까지 논의를 확대할 것인지 등등, 평화 개념에 대한 이해는 주관적인 성격이 매우 짙어지게 된다.

평화 개념을 전쟁 또는 전투가 없는 상태라고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시대적 또는 장소적 상황에서 평화가 문제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정책적 의미 내용 내지 문제설정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종교적, 인종적 갈등이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예를 들면 중동이나 동유럽 같은 곳에서 논의되는 평화의 개념과, 냉전시대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곳에서 논의되는 평화의 개념, 실제로 핵공격의 참화를 겪고 난 일본 같은 곳에서 논의되는 평화의 개념 등등은 그 정책적 의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곳에서는 관용과 화해의 정신에 초점이 놓여지고, 어떤 곳에서는 반핵 내지 비핵화에 초점이 놓여지는 것이다.

특히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라크 침공 등 일련의 사태 전개와 이에 따라 최근 비약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평화 개념 역시, 새로운 양상, 새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 개념의 이러한 다의성과 가치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제주 평화의 섬이라는 정책적 논의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논의의 상황적 맥락, 즉 평화 논의의 제주적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제주 평화의 섬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평화 논의의 제주적 컨텍스트 자체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제주 평화의 섬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역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합의 가능한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틀이 없다면, 제도적, 정책적 의미의 평화의 섬 구상은 불가능하고, 각각의 입장에 따른 운동론적 의미의 평화의 섬 구상만이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제주에서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평화 개념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흐름은, 제주 근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의 미래지향적 해결을 위한 이념으로 평화가 제시된 것이다. 이 때의 평화는 관용의 정신,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기초하여, 과거의 갈등, 거기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갈등, 미래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평화 개념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 작성과 함께 이른바 4.3특별법상의 두 가지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평화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히로시마나 오키나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본형 '평화공원' 개념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은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제주 4.3이 히로시마의 원폭 피폭 경험이나 오키나와의 전쟁 경험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때의 평화

개념은 반핵, 반전의 뉘앙스가 매우 강한 일본형 평화 개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주에서 평화 개념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1990년을 전후하여 제주에서 열린 한·소, 한·미, 한·일 등 일련의 정상회담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은 제주의 관광 인프라와 결합되어 제주에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발전시켜 제네바형 외교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평화의 섬 개념이다.

평화의 섬 개념은 1999년 12월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 제1항이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법제화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제1항도 이를 이어받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의 개념이 단지 평화의 섬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주 평화의 섬 개념의 외교적 내지는 국제관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제2항이 역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 제2항에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첫째,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둘째,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셋째,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넷째,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다섯째, 그 밖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등을 들고 있는 것도 제주 평화의 섬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주에서 평화의 섬에 대한 논의는, 비무장 중립지대화의 발상에서부터 분배, 환경 등의 내부적 갈등요인이 제거된 조화로운 지역발전전략의 구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은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문제의식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첫째, 이처럼 평화의 섬에 대한 천차만별의 주장들이 평화의 섬 개념에 대한 혼란을 일으켜서 주민적 합의 형성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평화의 섬 지정에도 장애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은 그 자체 독자적인 제주 평화의 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운동론적 주장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세계 평화의 섬 모델의 제도론적 이해일 수는 없다.

평화의 섬 개념을 이른바 적극적 평화개념에 기초하여, 분배, 환경 등의 내부적 갈등요인이 제거된 조화로운 지역발전전략 구상으로 이해하는 경우, 성장에 치중된 지역개발전략에 대한 반성적 의미는 주목할 만 하지만, 적어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제시되어 있는 개념과 국제기구 유치 등 열거되고 있는 사업들을 고려할 때는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전체구조를 볼 때, 평화의 섬 개념은 지역발전전략의 부수적 목표 내지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지, 제주발전전략의 통일적, 전체적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화의 섬 개념을 비무장 중립지대화 구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 까다로운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는 평화의 섬 지정절차의 구조적 결함과 함께, 1999년부터 평화의 섬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평화의 섬 지정이 지체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평화의 섬 개념이 비무장 중립지대화 구상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필수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제주 평화의 섬을 비무장 중립지대적 개념으로 운용한다거나,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정책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평화의 섬이 그러한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제도론적 의미에서의 제주 평화의 섬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유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제주를 외교, 교류 및 국제회의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으

로써, 국가와 제주지역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운동론이 아니라 제도론적 시각에서 평화의 섬에 관한 현실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본 것이 다음의 글이다. 따라서 운동론의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논의들은 가능한 이 글에서 제외시켰다.

## 2. 동북아 중심국가 내지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번영체제와 제주 평화의 섬과의 관련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평화 이념을 축으로 제주를 외교, 교류 및 국제회의산업도시로 발전시키 나가겠다는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관건은 그 지역적실성 및 실현가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그것이 제주이어야 하며, 또 그것은 실현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말을 바꾸면, 제주 평화의 섬의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와 제주의 상황에 맞는 실현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가 그간의 관광개발과정에서 이미 갖추게 된 일정한 국제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함께,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 특히 제주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개념에 주목하는 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내지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 동북아시아는 지리적 범주로서 의미가 강할 뿐,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공동체 단위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획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범위도 작게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으로 이해하는 시각,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몽골 등으로 이해하는 시각,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몽골, 러시아, 미국 등으로 이해하는 시각 등 다양한 관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 속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체제 형성의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북미, 유럽과 함께 세계경제 3대축을 이루는 지역이면서도, 북미, 유럽과는 달리 지역적 경제통합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라는 점, 한국, 중국, 일본의 삼각관계에서만 아니라, 특히 남북한 관계, 중국-대만 관계에서 20세기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한자, 유교, 불교 등 오랜 문화적 공통성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등등이 그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장애요인 속에서도, 동북아 경제통합론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ASEAN + 3 회의에서 한, 중, 일 3국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동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한 것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그런 예이다.

동북아시아의 공동체적 발전에 장애요인도 없지는 않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국-대만관계의 이른바 양안문제와 특히 남북한 문제이다. 최근 북핵문제의 대두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언젠가 이 문제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동북아의 통합적 움직임은 증대되리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어쨌든 제주 평화의 섬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남북한 문제가 한반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통합적 흐름에 직결되어 있는 동북아 문제로서 위치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한 제주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의 공동체적 발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장애요인은, 대동아공영권의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에서 보았다고, 동북아 3국, 또는 그 중 어느 국가가 패권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다. 동북아 3국간에 이런 불신을 불식하고 상호존중 및 협력의 태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 동북아시아의 공동체적 발전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한, 중, 일 3국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는

역시 우리나라가 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그런 조정 및 촉매역할의 장소적 거점은 동북아 3국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한 제주가 모든 점에서 적합하다.

동북아시아의 공동체적 발전 가능성에 불확실한 요소들이 남아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실제로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그 최종적 결과가 어떻게 되든,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이 공동체적 발전 가능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현실에서 개별 국가적 또는 공동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개념에 주목하는 한, 제주의 지정학적 유리성은 단지 제주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또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체제를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는 한에 있어서, 제주를 동북아의 외교,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지역이익보다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국가는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국제수준에 이른 관광 인프라를 갖춘 제주를 거점으로, 동북아시아 외교를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공동체적 통합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변화의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나라의 국익과 동북아시아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북아시아 외교, 또는 현재로서는 동남아 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구도 속에서 동북아시아 외교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외교, 더 나아가서는 환태평양 외교의 거점으로서 제주를 집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제주의 대외적 이미지를 동북아의 제네바처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제주의 지역적 관심에서 비롯되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국가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남북한 교류관계 회담과 각종 국제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동북아 국제조직적 맹아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에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3. 제주 평화의 섬의 구체적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제주 평화의 섬의 구체적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열거되고 있다.

- 첫째,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 둘째,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 셋째,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 넷째,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 다섯째, 그 밖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 유치의 경우, 기존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새로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기구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 정립과 실천 방안”(2000,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동북아 군축회의 사무국, 동북아 분쟁해결센터 등과 같은 신설가능성이 있는 국제기구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는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불안정, 국제적인 경쟁관계가 아

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는 동아시아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동북아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지역 분쟁 해결 센터는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각종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일본·중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양과 관련한 협정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각종 자원과 관련된 분쟁이나 영토와 관련된 다툼 등이 분쟁 해결 센터에서 조정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쟁 해결 센터는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 분쟁 해결 센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전에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보완 조직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주 평화의 섬' 선언은 앞으로 신설될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있어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는 제주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대외에 각인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업 추진의 물꼬를 틔으로써 대내적으로도 역량을 결집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적 작업일 수 있다.

국제협력기구의 사무국을 제주에 유치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사무국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은 제주미래니엄관 및 제주평화재단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

가. 제주미래니엄관 건립

제주미래니엄관은 세계정상들의 제주 방문 자취를 담은 기념관을 건립 관광자원화, 제주 청정 환경·평화를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모형으로 제주상징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센터 역할·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되고 있다.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관광단지 2지구내
- 규 모 : 부지27,881㎡, 연건평7,123㎡(지하1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01 ~ 2004
- 소요사업비 : 300억원(시설비175, 부지매입15, 전시기설110)
- 세부시설내용

구 분	기 능	면적(평)	내 용
계	-	2,155평	
전시시설	전 시	721	• 평화관, 인물관 • 기획전시실(주제, 시대별) • 공동전시홀 등
	수장시설	136	• 수장고, 공작실, 정리/준비실, 자료실 등
	교육·연구	108	• 세미나실, 자료실, 학예연구실 등
	공용·관리	941	• 설비관련실, 기념품판매소, 휴게실, 전망대, 복도 및 계단, 등
연구시설	평화연구	169	• 세미나실, 연구실, 사무국, 정보자료실 등
	공용·관리	80	• 홀, 복도 등

평화의 섬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함께 이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연구소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론적 뒷받침이나 정교한 세부 실천 계획이 없는 사업 추진은 결코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나. '제주세계평화재단' 설립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개발, 기획, 조정, 지원 등 집행적 기능을 전담할 조직으로서 가칭 '제주세계평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가칭 '제주세계평화재단'은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제주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주세계평화재단'도 동종의 다른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가칭 '제주세계평화재단'이 담당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4·3사건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제주 평화사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평화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평화이론을 개발하여, 이를 전 세계에 보급한다. 셋째, 동북아의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회담, 군비통제, 군비축소 등과 같은 문제를 연구한다. 넷째, 평화교육을 통해 제주도민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식을 고취시켜 전 세계인이 평화운동을 조직하여 이를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한다. 다섯째, 세계평화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기구와 각국의 정책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제언한다.

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연수원 설립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연수원은 이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 회담, 군비 통제, 군비 축소 등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 연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연수원은 이러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회담에 참여하는 관계 인사들을 연수시킴으로써 신뢰와 평화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연수는 연구결과의 대외적 공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사들을 직접 '평화의 섬'인 제주도로 끌어들여 평화와 관련된 논의와 구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는 제주평화포럼 계획으로 일단 그 기본형태가 마련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국제회의들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제주평화포럼은 2001년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동북아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남북교류와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윌리엄 페리 전 미국방장관 등 국제지도자급 인사 200명 내외를 초청하여 '제주평화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2년 세미제주평화포럼 개최에 이어 올해 10월에 제2회 제주평화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평화포럼의 동북아 공동번영과 공동평화에 더욱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측 인사의 초청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노벨평화상 수상 추천자 내지는 단체를 많이 초청하여 회의의 성과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평화포럼이 평화-공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제주평화상을 신설하여 그 시상식을 제주평화포럼 개최시 거행하도록 하는 것도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나. 평화관련 국제회의의 적극 유치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대외에 각인 되기 위해서는 평화관련 국제회의를 신설<sup>46)</sup>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를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국제회의나 회담의 장소로 받들고 나가는 것은 ‘제주 평화의 섬’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결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완공되었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국제회의 유치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 개최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의 제네바나 비엔나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센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국제회의의 유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섬’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

####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은 기존의 남북 국방장관회담, 장관급회담 등의 회담과 교차관광 및 감귤보내기 운동 등 교류, 협력사업을 염두에 두면서 규정된 것이지만, 서울, 평양 등의 상징성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판문점이나 외국도시보다는 제주를 남북교류 및 회담장소로 집중 활용함으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이 냉전시 대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최근의 남북교류와 대화장소로서의 제주의 부상이 과연 제주의 내부적 여건보다는 외부적 여건, 특히 북한의 제주에 대한 긍정적 호감에 기인<sup>47)</sup>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적 변수의 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남북대화의 중심지로서의 제주위상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정착화 할 수 있는 선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감귤보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감귤 자조금이나 남북교류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백두-금강-한라를 연결하는 산테마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백두산 관광에서부터 동부의 금강산관광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의 한라산관광에 이르는 산테마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관광이 핵심전략산업일 뿐만 아니라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관광개발로 많은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상호간의 관광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확대일로에 있는 북한의 관광개발을 제주관광의 위협요인이자기 보다는 기회요인으로 인식, 상호간의 제로섬게임이라 Win-Win전략적 의미를 갖게된다.

셋째, 제주와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및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제4차국토계획의 기초 중의 하나인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로서 제주와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교환개최 및 인적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

46)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평화관련 세계협의체를 창설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제주에 유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47) 일부에서는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상징성, 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감귤보내기운동’ 등이 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의 제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5) 그 밖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평화의 섬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제주도의 각종 조건과 노력, 그리고 ‘평화의 섬’ 선언이나 국제회의 개최, 국제기구 유치 등 유·무형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 연계됨으로써 특정한 이미지가 창출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 평화 또는 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시설물이 건립되고 운영될 때 항구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4·3 평화공원은 단순한 공원이나 위령묘역과는 분명히 다르다. 4·3 평화공원은 4·3 영령들을 위무하는 위령 공간의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되며, 충혼묘지 등과 같이 전 도민의 일상과는 단절된 머나먼 묘역으로 남아서도 안 된다.

4·3 평화공원은 우선 역사공원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4·3 평화공원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후세에 알리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4·3 평화공원은 역사공원으로서의 성격 위에 21세기 ‘평화의 섬, 제주’를 상징하는 평화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 공원 내에 21세기 평화와 인권의 정착을 위한 각종 상설 전시장, 회의장 등이 같이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인근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고, 역사 문화 관광지, 평화 인권 센터 등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4·3 평화공원에는 위령제단과 더불어 위령묘역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합장된 시신, 무연고 묘, 앞으로 발굴이 예상되는 유골 등은 이곳에 안장되어 4·3 공원으로서의 역사성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 4. 맺으면서.

위에서 제주평화의 섬에 관한 정책적 논의들을 구체적 사업을 중심으로 해왔다. 평화의 섬 관련 구체적 사업들 중에는 현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착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 중에는 중앙정부의 결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다. 또 중앙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성격의 사업도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을 인정받는데는 제주도가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하위단위인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그 명분축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를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국내·외로부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다음은 ‘중앙정부의 평화의 섬 지정’이 필요하며,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응답 순위가 낮긴 했지만 4·3 해결 등 도민통합을 지적한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는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국내·외적으로 대외교섭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는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가 이를 위해서 대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평화의 섬 정책이 가시화되고 그 성과가 축적되면 국내외로부터 제주가 평화의 섬

이라는 상징성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의 통합된 목소리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